

【책임연구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취업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최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연구보고서 2015-21-01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저자 이삼식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39-00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정가 7,000원

발간사 <<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근대화, 도시화, 압축적 고도 경제성장, 인구전환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필연적으로 가구 내지 가족의 특성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대학파들이 주장하였던 전형적인 부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모습에서 벗어나 동거가구, 미혼부 또는 모가정, 재혼가정, 기러기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 및 가구의 변화는 결혼 및 출산행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나 출산행태의 특성을 알고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구 모습의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저출산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접근 특히, 여성에게 한정하여 해석을 시도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가족 또는 가구 구조와 결혼 및 출산 행태를 연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가구분류에 대한 사례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가구를 결혼 및 출산 관련 요소들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였다. 재구조화한 가구의 주요 특성과 시계열적 변화를 측정하고,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변화를 파악케 함으로써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출산현상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여성 개인적인 접근에 한정되지 않고 가족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조언을 제공해 준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 준 서울시립대학교 이윤석 교수,

서울대학교 진미정 교수, 본 원의 박종서 박사, 이소영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 입장을 대변함을 밝혀둔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13
제3절 연구방법	15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7
제1절 가족 및 가구의 개념과 범주	19
제2절 가족의 변화	20
제3절 가족변화의 경향과 가족정책의 경향: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24
제3장 가구구조의 재구조화	65
제1절 재구조화 근거에 관한 논의	67
제2절 인구센서스 상 가구 구성	86
제3절 우리나라 가구 재구조화	96
제4장 가구구성 변화 추이와 전망	107
제1절 세대 변동 추이와 전망	109
제2절 가구 유형별 특성 및 변동 추이	113

제5장 가구 유형과 결혼·출산 행태	177
제1절 가구 유형과 결혼 행태	179
제2절 부부가구 유형과 출산 실태	185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97
제1절 분석 결과 종합	199
제2절 정책적 제언	203
제3절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207
참고문헌	209

표 목차

〈표 2- 1〉 가족정책의 유형화: 국외연구	29
〈표 2- 2〉 가족정책 유형화: 국내연구	30
〈표 2- 3〉 GDP 대비 현금과 서비스 지출을 통해 본 복지국가 가족정책의 유형	35
〈표 2- 4〉 OECD 국가들의 탈가족화 정책: 아동보육정책	48
〈표 2- 5〉 취학아동의 형태별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53
〈표 2- 6〉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화 정책현황(유급돌봄휴가)	55
〈표 2- 7〉 부(父)에게 할당된 돌봄 휴가 기간(부모휴가, 부성휴가, 아버지할당)	58
〈표 2- 8〉 부모휴가 넘겨 이용비율	59
〈표 3- 1〉 가구 유형에 관한 유엔 분류	69
〈표 3- 2〉 가구 및 가족에 관한 유엔 분류	70
〈표 3- 3〉 프랑스의 가족 및 가구 특성 분류	71
〈표 3- 4〉 스웨덴의 가구 분류	72
〈표 3- 5〉 스웨덴의 가족 분류	72
〈표 3- 6〉 노르웨이의 가족유형별 가족 분류	73
〈표 3- 7〉 미혼모의 연령 변동 추이	77
〈표 3- 8〉 혼외출생아 모의 직업 변동 추이	78
〈표 3- 9〉 이혼남녀의 연령 분포 변화 추이	81
〈표 3-10〉 이혼부부의 20세 미만 자녀수 분포 변화 추이	82
〈표 3-11〉 이혼부부의 20세 미만 자녀수별 취업률 변화 추이	83
〈표 3-12〉 혼인형태별 건수 및 비율 변동 추이	84
〈표 3-13〉 혼인형태별 건수 및 비율 변동 추이	86
〈표 3-14〉 센서스 상 가구주와의 관계(가족지위) 분류	89
〈표 3-15〉 인구센서스 상 가구구성(가구유형)	94
〈표 3-16〉 가구 재구조화(유형)	104
〈표 4- 1〉 세대 유형별 가구 변동 추이와 전망	112
〈표 4- 2〉 1인 가구의 연령 구성, 2010	114

〈표 4- 3〉 1인 가구의 혼인상태, 2010	115
〈표 4- 4〉 1인 가구의 연령별 유업 여부, 2010	116
〈표 4- 5〉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취업 여부, 2010	117
〈표 4- 6〉 여성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자녀 유무, 2010	118
〈표 4- 7〉 성별 1인 가구 변동 추이	119
〈표 4- 8〉 성별 및 연령대별 1인 가구 변동 추이	120
〈표 4- 9〉 성별 및 연령별 1인 가구 구성비 변동 추이	121
〈표 4-10〉 성별 및 혼인상태별 1인가구 변동 추이	123
〈표 4-11〉 남성 1인가구: 성별 연령별 및 혼인상태별 1인가구 변동 추이	125
〈표 4-12〉 여성 1인가구: 성별 연령별 및 혼인상태별 1인가구 변동 추이	127
〈표 4-13〉 남성 1인가구: 성별 연령별 및 혼인상태별 1인가구 구성비 변동 추이	128
〈표 4-14〉 여성 1인가구: 성별 연령별 및 혼인상태별 1인가구 구성비 변동 추이	130
〈표 4-15〉 노인 1인가구의 변동 추이	132
〈표 4-16〉 1세대가구: 부부가구 및 비부부가구 분포, 2010	134
〈표 4-17〉 부부가구: 부부 및 가구원의 연령대별 가구, 2010	134
〈표 4-18〉 비부부가구: 가구주 및 가구원의 연령대별 가구, 2010	135
〈표 4-19〉 부부가구: 부부의 경제활동상태별 가구, 2010	136
〈표 4-20〉 비부부가구: 가구주 경제활동상태별 가구, 2010	137
〈표 4-21〉 부부가구: 외국 국적 가구원 포함 여부, 2010	138
〈표 4-22〉 비부부가구: 외국 국적 가구원 포함 여부, 2010	139
〈표 4-23〉 1세대 부부가구 변동 추이	140
〈표 4-24〉 1세대 비부부가구 변동 추이	141
〈표 4-25〉 1세대 부부가구: 맞벌이 가구 변동 추이	142
〈표 4-26〉 1세대 부부가구: 자녀 유무별 가구의 변동 추이	144
〈표 4-27〉 1세대 비부부가구: 구성원의 혼인상태별 가구의 변동 추이	146
〈표 4-28〉 1세대 부부가구 중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변동 추이	147
〈표 4-29〉 1세대 비부부가구 중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변동 추이	148
〈표 4-30〉 2세대 부부+자녀 가구의 동거인에 따른 분류, 2010	149

〈표 4-31〉 2세대 부/모+자녀 가구의 동거인에 따른 분류, 2010	150
〈표 4-32〉 2세대 조손가구의 세부 분류, 2010	150
〈표 4-33〉 2세대 부부+부모 또는 가구주+부모 가구의 세부 분류, 2010	151
〈표 4-34〉 2세대 가구: 맞벌이 부부가구, 2010	152
〈표 4-35〉 부부+자녀(5세 이하) 가구: 부부의 경제활동상태, 2010	153
〈표 4-36〉 부+자녀(5세 이하) 가구: 부의 경제활동상태, 2010	154
〈표 4-37〉 모+자녀(5세 이하) 가구: 모의 경제활동상태, 2010	155
〈표 4-38〉 부부 + 자녀(25세 이상 미혼) 가구, 2010	156
〈표 4-39〉 부 또는 모 + 자녀(25세 이상 미혼) 가구, 2010	157
〈표 4-40〉 조손가정: 손자녀 연령, 2010	158
〈표 4-41〉 '2세대 가구' 변동 추이	160
〈표 4-42〉 '부부+미혼자녀'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변동 추이	161
〈표 4-43〉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2세대 가구의 변동 추이	162
〈표 4-44〉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2세대 가구: 부부 및 부/모의 경제활동상태 ..	163
〈표 4-45〉 25세 이상 미혼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2세대 가구의 변동 추이	164
〈표 4-46〉 조손 가구의 변동 추이	165
〈표 4-47〉 18세 이하 손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조손가구의 변동 추이	166
〈표 4-48〉 3세대 가구 변동 추이	168
〈표 4-49〉 3세대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변동 추이	168
〈표 4-50〉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3세대 가구의 변동 추이	169
〈표 4-51〉 부부+자녀(5세 이하)+부모 가구: 부부 및 부/모의 경제활동상태	170
〈표 4-52〉 25세 이상 미혼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3세대 가구의 변동 추이	171
〈표 4-53〉 맞벌이부부 변동 추이	172
〈표 4-54〉 무자녀부부 변동 추이	173
〈표 4-55〉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중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변동 추이	174
〈표 4-56〉 25세 이상 미혼자녀를 둔 가구 변동 추이	175
〈표 5- 1〉 1인가구의 가구주 혼인상태 변동 추이	180
〈표 5- 2〉 비부부가구의 가구주(남성)의 혼인상태 변동 추이	182

〈표 5- 3〉 비부부가구의 가구주(여성) 혼인상태 변동 추이	183
〈표 5- 4〉 부부의 혼인인력별 가구, 2012	185
〈표 5- 5〉 부부가구의 가구구성별 평균 출생자녀수, 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	187
〈표 5- 6〉 맞벌이 및 1인생계모형 부부가구의 평균 출생자녀수	188
〈표 5- 7〉 맞벌이 및 1인생계모형 부부가구의 평균 기대자녀수	189
〈표 5- 8〉 맞벌이 및 1인생계모형 가구의 평균 이상자녀수	190
〈표 5- 9〉 부부가구의 혼인상태별 평균 출생자녀수	193
〈표 5-10〉 부부가구의 혼인상태별 평균 기대자녀수	194
〈표 5-11〉 부부가구의 혼인상태별 평균 이상자녀수, 2012	195

그림 목차

[그림 2- 1] GDP 대비 가족항목 사회지출: 현금 대 서비스(2012)	33
[그림 2- 2] 가족정책 유형별 합계출산율의 변화: 1960-2013	37
[그림 2- 3]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의 변화	37
[그림 2- 4] OECD 주요 국가들의 이상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	38
[그림 2- 5] 조이혼율의 변화, 1970, 1995, 2012	40
[그림 2- 6] OECD 주요 국가들의 조결혼률	41
[그림 2- 7] 전체 출생아동 중 결혼 이외의 관계에서 출산한 아동의 비율	41
[그림 2- 8] 15-64세 여성 고용률, 1990-2013	42
[그림 2- 9] OECD 주요국의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2013)	44
[그림 2-10] GDP 대비 가족관련 사회지출 비율	46
[그림 2-11] GDP 대비 가족관련 현금 지출 비율	46
[그림 2-12] GDP 대비 가족관련 서비스 지출 비율	46
[그림 3- 1] 혼외 출생아수 및 전체 출생아 중 비율 추이	75
[그림 3- 2] 미혼모의 연령 분포	76
[그림 3- 3] 이혼건수 및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 비율 변동 추이	79
[그림 3- 4] 남성의 이혼 연령 분포	80
[그림 3- 5] 여성의 이혼 연령 분포	80
[그림 3- 6] 재혼 유형별 변동 추이	85
[그림 4- 1] 세대별 가구의 변동 추이와 전망	110
[그림 4- 2] 세대별 구성비의 변동 추이와 전망	111



Abstract <<

Family Change and Its Impact on Marriage and Fertility

Socio-economic change such as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economic development, etc.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diversifying family in terms of not only its scale but also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structure. Indeed, many studies have made a consensus that changes in household and family affect the marriage and childbearing practices. Accordingly, analysis on the change in household and family is of great importance to understand and identify change in marriage rate and fertility rate.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made attempts at restructuring the household by biological, socio-economic and geographical factors that may reflect the rapid change in society, and analyzing a variety of marriage and fertility dynamic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number of one person household with his/her child(ren) and/or spouse, household of childless couple, household for single parent and both parents cohabiting with unmarried child(ren) over 25 years old, etc. have increased in both absolute and relative terms; and such changes in family and household appeared to differentiate the

2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fertility behaviors and thereby level.

Such linkage between structural change of family/household and fertilit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family policies through not only by the individual(specifically women) approach but also the family/household approach.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족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현상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여 간다. 한국 사회에서도 제2차 인구전환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결혼연령 빠르게 높아지고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과거에 비해 이혼이나 재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인 가구, 동거가족, 무자녀가족, 기러기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 및 가구의 변화는 결혼 및 출산행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나 출산행태의 특성을 알고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구 모습의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결혼 및 출산 행태와 가족 구조와 연계시키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를 재구조화하고, 이들 가구의 주요 특성 및 시계열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혼화 및 비혼화의 영향으로 남녀 공히 모든 연령대에서 미혼1인가구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혼1인가구와 함께 고연령층 여성에게서는 사별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세대 가구 역시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이다. 이는 젊은층을 중심

4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으로 자녀 출산을 늦추거나 출산을 전혀 하지 않는(무자녀)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하는데 기인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세대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였는데, 일-가정양립에 대한 욕구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출산을 중단하거나 또는 무자녀를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세대 가구도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다. 2세대 가구는 미혼자녀와 거주하는 가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25세 이상의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가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만혼화, 고학력화, 취업난 등으로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늦어지는 경향(캥거루족)이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기혼자녀와 거주하는 2세대가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부양하기 위하여 동거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 후 주택마련비용 부담 등으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구(신캥거루족, 부메랑족 등)일 것이다.

3세대 가구의 경우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3세대 가구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핵가족의 보편화로 3세대를 형성하는 가구가 많지 않고, 부모세대에게 자녀 돌봄에 대한 도움을 받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거주하며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25세 이상 미혼자녀를 둔 3세대 가구는 증가하였는데, 2세대 가구에서 살피본 바와 같이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부부세대는 부모세대에 대한 부양과 자녀세대에 대한 부양으로 이중 부담이 존재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부부가구의 유형과 출산행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부부가구의 출산행태(평균 출생아수, 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에 대한 분석결과, 1세대 가구의 경우 출산 전이거나 또는 출산을 하였더라

도 자녀와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고 있어 평균 출생아수가 1.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전체 가구 1.75명, 3세대 2.00명, 2세대 1.90명). 1세대 가구의 경우 기대자녀수마저 2.0명에 채 미치지 못하는데, 이들 가구의 출생아수도 작는데다가 향후 출산의향도 낮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세대 가구의 이상자녀수도 다른 세대의 가구(2세대 2.23명, 3세대 2.18명)에 비해 낮은 수준(2.02명)에 있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출산행태를 보면 비맞벌이 가구의 출산행태(평균 출생아수, 기대자녀수)가 맞벌이가구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난다. 다만 이상자녀수의 경우에는 맞벌이부부가 비맞벌이부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는 2명이 넘을지라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지속하는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제 본인의 출산은 다소 축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의 혼인이력에 따른 출산행태는 대체적으로 남편이 재혼인 경우 평균 출생아수나 기대자녀수는 낮게 나타났으나, 이상자녀수는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재혼의 경우 이전 혼인에서의 자녀와의 관계 등으로 출산에 대한 이상과 현실 간 차이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향후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개인단위의 접근이 아닌 가구단위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가구에 대한 세부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각에 적합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접근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 가구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아닌 미혼1인 가구, 20~30대 유배우1인 가구, 이혼 및 사별에 의한 1인가구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로 미혼1인가구에 대해서는 자산형성프로그램이나 공공주택 지원, 월세 내지 전세임대 등을 그리고 이혼, 사별 1인가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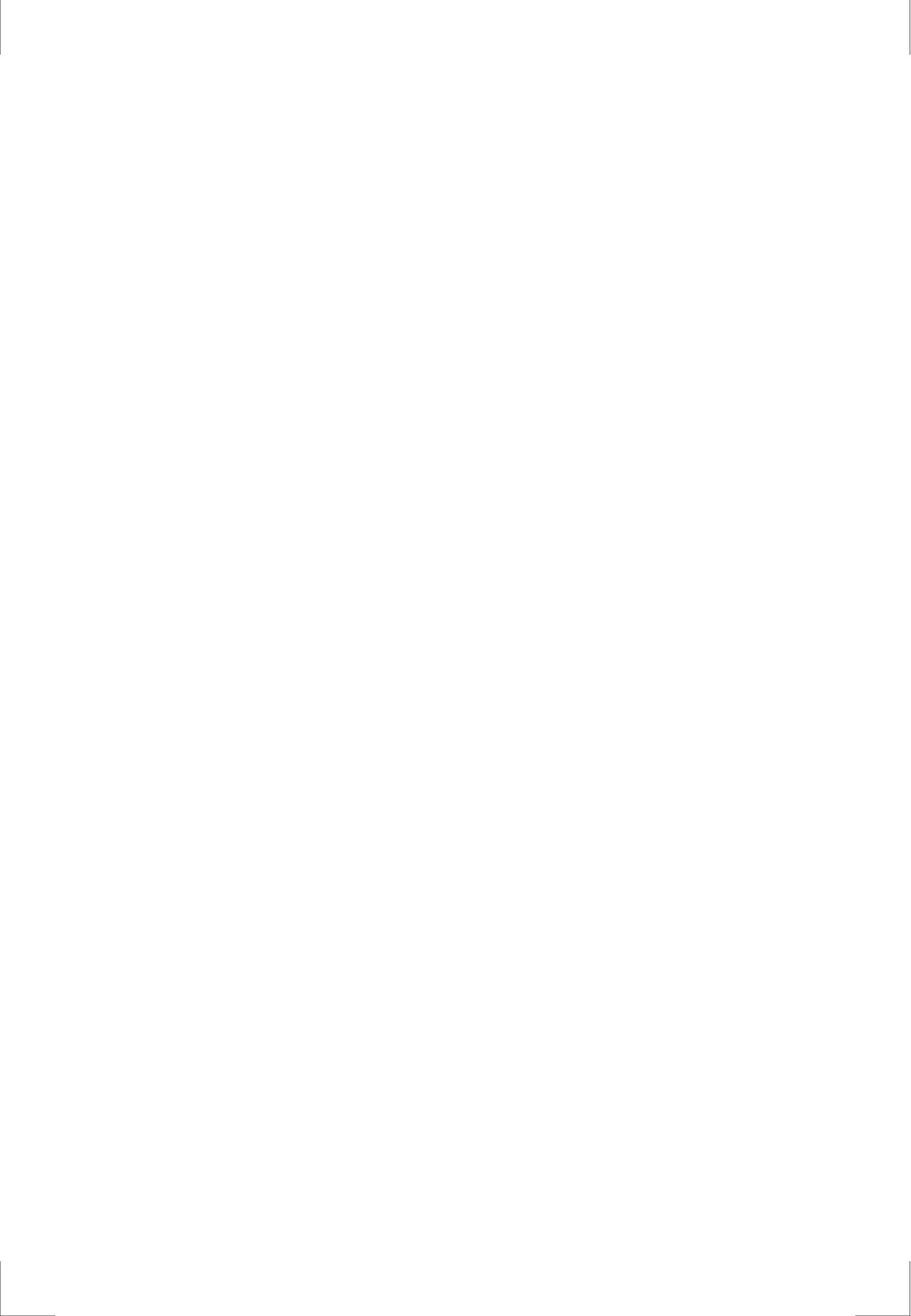
1세대 가구 중 무자녀 부부가구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무자녀 부부 증가의 원인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임 등 비자발적인 원인을 제거하는데 사회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실제 출생자녀가 있음에도 맞벌이로 1세대를 구성하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양육의 곤란으로 자녀를 부모 등에 맡겨 양육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일-가정양립제도와 연계하여 촘촘하게 설계된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2세대 가구에서는 한부모와 자녀로 있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경제활동과 자녀돌봄을 양립하는데 있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특히 가구주의 경제활동으로 5세 이하 어린자녀들이 양육의 사각지대에 남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부모 취업가정에 대해 보육 서비스 등 우선권을 제공하며 근로시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만혼화, 고학력화, 청년실업률 증가 등에 따라 25세 이상 미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2세대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부모로부터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직업 간 연계 강화 등 사회정책 내지 고용정책 등이 매우 중요해짐을 시사해준다.

3세대가구의 경우 맞벌이 부부이거나 경제활동 중인 한부모가 미혼자녀(특히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동거는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의 양육 노력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노부모의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회적 프로그

램도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상호 보조적인 기능이 강화된 3세대 가구를 형성 내지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주요용어: 가구유형, 결혼·출산행태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현상 변화와 가족의 특성 및 구조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결혼 연기와 비혼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생물학적 성적 발전과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 즉, socio-bio gap이 증가하고, 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동거가구와 미혼모·부가 증가하게 된다.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면서 한부모 가정과 재결합가족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과 맞벌이 증가 등으로 인하여 조손가정 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화 및 도시화 더불어 교육수준 상승 등에 따라 전통적 성역할 분업에 기반을 둔 남성일인생계부양자모델이 이인생계부양자모델로 빠르게 전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 결혼관과 자녀관 등의 변화에 따라 가족관계도 전통적인 부모-자녀관계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게 된다.

실로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고출산-고사망의 1차 인구전환을 종료하고 저출산-저사망 즉, 제2차 인구전환으로 전환되었는데(van de Kaa 1987; Lesthaeghe 2010), 이 시기에 결혼, 출산 및 성적관계 간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동거가 증가하고 결혼연령이 상승하였으며 혼외출산이 보편화되고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도 1950년대 말 정점에 이르렀던 일인부양 가족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이혼율 급상승, 출산율 급락, 혼외출산 비율 상승, 유자녀 기혼여성의 교육 및 경제활동 참가 증가 등으로 가족

형태가 다양화 되어 갔다(Cherlin 2010; McLanahan, 2004). 가족은 이와 같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로 오래 전부터 가족 형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주요한 관심사였다(Cherlin, 2012).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 역시 근대화, 도시화, 압축적 고도 경제성장, 인구전환 등을 경험하였다. 제2차 인구전환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결혼연령은 빠르게 높아졌으며,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 맞벌이 부부가 증가(가족모델 전환)하고 있으며, 이혼 및 재혼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가족의 행태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가구를 형성하기도 하며 주말부부도 나타난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부모나 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기고 부부만 거주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고학력화, 고용불안정, 주택난 등은 자녀의 독립시기를 늦추어 썬더족이 등장하였다. 부모에게 독립하였더라도 결혼 후에도 주택비용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 다시금 부모와 동거하는 부메랑족이나 신썬더족도 찾아볼 수 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들로 구성된 가구도 나타난다.

가족의 변화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으나, 이들 가족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구 분류는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미래사회에서 나타날 가구의 모습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가족 또는 가구의 다양화는 결혼이나 출산행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혼 및 출산행태는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결혼 및 출산행태의 특성을 알고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구 모습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가족 또는 가구 구조와 결혼 및 출산 행태를 연계시키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결혼 및 출산 관련 요소들을 중심으로 가구를 재구조화하여 주요 특성과 시계열적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어서 재구조화한 가구유형별로 출산수준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가족 변화 및 그에 따른 출산력 차이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변화를 파악케 함으로써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출산현상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여성 개인적인 접근에 한정되지 않고 가족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은 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실시하였다. 첫째로는 가족 내지 가구의 정의와 범주(유형)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가족 재구조화의 기본원칙(방향)을 설정하는데 참조하였다. 두 번째로는 가족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다. 여기에서는 서구사회에서 겪은 혹은 진행하고 있는 가족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세 번째로는 가족 변화에 따른 정책적 관점 및 내용의 변화 등에 대해 유럽국가 등 서구사회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주요 관점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생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개입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요컨대, 외국에서 새로운 가족형태의 등장에 따라 가족정책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인구센서스에서 분류하고 있는 가구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는 이른바 재구조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가구 재구조화를 위한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를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제1절에서는 UN에서 설정한 가족 및 가구의 정의 내지 개념과 유형화를 고찰하였다.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가족 변화가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변화한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제 가구 내지 가족을 어떻게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에서 가구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가늠케 하는 인구동태적 사상(event)의 동향을 진단하였다. 즉, 인구동태통계를 이용하여 미혼모와 혼외출산 추이, 이혼, 재혼 등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인구센서스 상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구 분류체계'의 변화를 1970년부터 2010년 인구센서스까지 시계열적으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기준과 실증사례들을 토대로 제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할 대상으로서 가구의 재구조화 틀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서 가구의 재구조화 틀에 입각하여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세분화된 가구의 유형들을 규모를 산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순서는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각 세대에서 우선적으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세분적인 가구 구성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특성 중 대표적인 것들을 선정하여 시계열적(1985~2010)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가구의 재구조화 틀에 입각하여 대표적인 가구 유형을 기준으로 출산력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를 분류(재구조화)하고, 그 결과로서 가구유형별로 평균 출생아수(children-ever born)를 측정하였다. 평균 출생아수는 가구 내 부인의 연령에 의해 영향(censoring effect)을 받으므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기 동안 낳을 평균 자녀수)의 개념과 유사한 기대자녀수(expected number of children)를 측정하였다. 기대자녀수는 기 출생아수에 향후 추가 자녀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자녀수라는 의미를 가진 이상자녀수(ideal number of children)를 가구유형별로 측정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함의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출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가족 변화와 저출산현상 간의 연계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직면하였던 한계점들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

제3절 연구방법

우선적으로 연구틀을 설정하기 위하여 가족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주요 관점으로 가족의 변화와 결혼 및 출산 행태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가족 및 가구의 분류 등에 대해 국제기구(UN)가 제시한 정의와 개념 및 분류체계를 살펴보았으며, 가족의 변화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빠르게 진행한 일부 서구국가들의 가구 분류에 대한 실증사례 등을 고찰하였다.

기존의 각종 통계자료를 입수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자료로는 통계청에서 매 5년마다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결과를 이용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985년, 1990년, 1995

년, 2000년, 2005년 및 2010년 결과를 이용하였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로는 2012년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족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인구동태통계로서 결혼통계와 이혼통계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전 과정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 착수 시에는 연구 방향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여 연구기본틀(research framework) 설정 등에 반영하였다. 연구 중간 과정에서도 가족 재구조화의 타당성, 가족 분류 결과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필요시마다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수시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1절 가족 및 가구의 개념과 범주

제2절 가족의 변화

제3절 가족변화의 경향과 가족정책의 경향: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1절 가족 및 가구의 개념과 범주

가족(family)과 가구(household)는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대개 가족은 혈연, 결혼이나 입양 등의 관계로 맺어진 2인 이상의 개인으로 정의된다(Schwartz and Scott, 1994; Bidwell and Mey, 2000). 이와 달리 가구는 공간적 개념에 기초하여 정의내릴 수 있다. 가구는 하나의 공간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로 정의된다. 유엔에서는 가구(household)을 2가지로 구분하여 정의내리고 있다. 1인가구(one person household)는 하나의 주거단위에서 혼자서 음식과 기타 생필품을 마련하는 경우로 규정된다. 1인가구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다인가구(multi-person household)는 2명 이상이 하나의 주거단위에서 음식과 기타 생필품을 공유하면서 생활하는 단체로서 정의된다. 다인가구는 수입을 공유하고 공동 생활비를 가지는 '생계'라는 개념을 가진다. 이들 정의를 통해 가족과 가구는 2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UN, 2011). 첫째 가구는 1명으로도 구성될 수 있으나, 가족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둘째 여러 명으로 구성된 다가구일지라도 각 구성원 간 반드시 관계를 맺지 않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은 구성원 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가족은 1개 가구 이상으로는 구성될 수 없으나, 가구는 1개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전혀 관련 없는 구성원들의 집합으로도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가구의 경우 공간적 개념에 기초하기 때문에 정의가 가변적이지 않

나 가족은 다르다. 가족은 그 자체로서 기술혁신이나 사회의 이념, 대중 문화 등 여러 사회경제적 구조나 환경에 의해 변화해 나가고 스스로를 조직화해나가는 유연한 존재이기 때문이다(김태현, 2006). 이에 가족에 대한 정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조건이나 시대적 흐름 등에 따라 변화하여 간다. 과거에는 가족을 정의함에 있어 법률적 결혼, 출생 등 혈연에 의하여 맺어진 단위로 제한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의의 개념으로 가족을 한정할 경우 그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에서도 가족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의는 보다 넓어졌다. Settles(1987)는 사람들이 가족을 법적 의무 또는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관계로 정의하기보다 선택에 의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았고, 이에 가족을 법, 출생 혼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헌신, 사랑 등으로 연결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Gelles(1995)는 가족을 구조와 지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기관으로서, 구성원들은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친족집단을 공유하며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했다(신화용 외, 1997). Goode(2009)는 가족을 특별한 종류의 가구나 집단이라기보다 사람간의 특별한 관계로 정의하는 것에 이론적 중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2절 가족의 변화

일반적으로 가족은 결혼에 의해 형성되고 출산을 통해 확대되고, 자녀가 결혼하여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면서 축소되고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함

으로써 해체 또는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여겨졌다. 즉, 가족주기는 혼인, 출생, 사망의 인구동태적 사상(event)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인구동태적 사상(event)에 의거하여 형성되거나 변화하지 않는 경향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결혼(법률적)을 하지 않고서도 동거에 의해 가족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 실로 프랑스,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동거가 결혼의 대안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에서는 혼외출산도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다. 가구가 확대되는 것도 반드시 출산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입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비혼(독신)이 증가하면서 가족 형성, 확대, 축소의 절차가 형성되지 않고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의 해체도 사망이 아닌 이혼(별거) 등을 통해서도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구조가 변화하고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기존에 가족 구성원로부터 채워왔던 만족감 등을 다른 집단을 통해 추구하기도 하면서 (Marciano, 1988), 비혈연 관계의 사람들도 가족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반면, 자녀 세대의 부모 부양 기능이 약화될 경우에는 친구를 통해 기존에 가족이 수행하여 왔던 정서적 지지나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가족 구성원은 반드시 결혼, 출산, 입양으로만 연결된 관계에 국한하지 않으며, 가족주기는 형성-확대-축소-해체라는 일련의 과정을 획일적으로 거치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가장에 의해 기술과 지식이 전수되고 통솔되면서 부계와 가부장제가 형성되었고, 가족이 경제의 기본적인 생산단위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확대가족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세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가족의 모습 또한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농촌 지역 내 가내공업에서 도시 지역의 공장제도로

변화하여 가면서 가족은 생산단위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분업화는 가족역할의 차이를 가져왔다. 종래 농경사회에서 우세였던 가부장제도는 도시화로 인하여 약화되었다. 가장을 통해 지식이나 기술이 전수되던 것이 도시 삶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약화된 것이다. 일과 가정이 분리되면서 남성이 단독 부양자가 되었고, 여성은 양육자가 되면서 일인부양체계가 되었고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졌다. 여성은 남성을 통해 외부세계와 연결이 되었다. 가족이 경제와 지역사회 활동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갖는 가족 내에서 성별 역할 차이에 기인한 것인데, 산업화와 도시화의 변동이 확대가족의 지배적인 가족제도를 붕괴시키고 핵가족이라는 새로운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것이다(백진아, 2009).

제1차 인구전환(고출산-고사망)에서 제2차 인구전환(저출산-저사망)으로 확산되면서 가족은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된다. 결혼-출산-성적관계 간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다(Lesthaeghe 2010). 이 시기에 동거가 증가하고 결혼연령이 상승하고 혼외출산이 증가하였으며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졌다. 종래 성별 분업된 일인부양가구로 대표되던 근대가족이 개인적 자주권(autonomy)과 자기충족(self-fulfillment)에 중점을 둔 후기 근대화 가족으로 점점 변화하게 되었다. 세계화, 개인화 등의 영향으로 비혼, 동거, 맞벌이, 이혼 및 혼외출산이 증가하면서 여러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구 학자들은 가족의 '개인주의화', '탈제도화', '다원화' 등으로 표현하였다(서수경, 2002). van de Kaa는 제2차 인구전환으로 인해 유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결혼의 황금시대에서 동거의 새벽으로', '〈아이가 왕〉인 시대에서 〈pari가 왕〉인 시대'로, '획일적 가족에서 다원적 가족의 시대'로 정리하였다(오치아이 에미코, 2004). 쇼터(Shortter)는 1960년대 말 이래의

서구 가족은 가족구성원 개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가족관계가 정형화된 제도적 틀에서 자유로워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남성가장에 의해 지배되는 엄격하고 제도화된 가족이념을 표방하는 근대 이후의 핵가족 모형과 대조되며, 이에 따라 ‘포스트모던 가족’으로 지칭한 바 있다(김희자, 2008). 기든스는 근대 이후 가족의 역할에 대해 동거, 경제적 협동, 혈연에 의한 결속 보다는 구성원 간 정서적 교감이나 친밀성이 중요해졌으며, 이로 인해 현대 가족의 다양화는 친밀함을 추구하는 방식의 다양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며 가족이 혈연을 중시하는 혈연 공동체에서 관계를 중시하는 정서공동체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정미라, 2012). 벡(Beck)은 21세기 이후 가족에 대해 “가족 이후의 가족”으로 표현한 바 있다. 개인화와 지구화의 결과로서 종래 “가족”이라는 이름을 단 표준형이 그 지배적 위치를 상실하는 대신, 새롭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동성애가족,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짜깁기 가족, 초국적가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한상진·심영희, 2010).

장혜경 외(2013)는 2030년 가족 미래시나리오로 개인 중심적 가족의 식 강화로 성인 파트너 관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성인 가족들 사이의 의무와 규범은 상당히 약화되는 ‘느슨한’ 가족의 본격적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래 가족의 모습 내지 특징으로 노인세대의 분리 및 노인 가구 증가, 파트너관계의 다양화, 혼인·양육의 분리와 자녀애착의 강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증가에 따른 생계형 근로(고령자포함) 증가와 돌봄의 공백, 맞벌이가족 증가와 일가정양립 욕구 강화, 생활밀착적인 일가정양립 양상, 돌봄방식의 다양화와 지역공동체 역할의 활성화,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생활의 기술화 증가, 전통적 부모역할/젠더역할의 변화, 다세대 가족의 공존과 느슨한 가족관계 등을 제시하였다.

가족의 변화가 이와 같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더해 가족 생활을 조직하는 대안적 형태들도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형성되던 일부일처의 핵가족 중심의 가족이 독신, 동거부부, 계약결혼, 동성애관계 등의 다원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원적 가족은 어떤 구성이 좋은 가족인지에 대한 이상을 제시하지 않고 개인적 만족과 함께 융통성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는 어떤 가족 구조가 기본 형태가 될지 말할 수 없고 유동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된다고 해도 이들 가족생활 양식들은 자녀출산과 양육, 가치와 문화의 세대간 전이, 감정적 유대관계, 갈등과정들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에서든지 가족 영역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전영자, 2000).

제3절 가족변화의 경향과 가족정책의 경향: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족이 변화하고, 가족변화에 따라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이 변화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가족은 과거에도 변화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식 또한 변화할 것이다. 다만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 가족의 모습은 어지러울 정도로 변화했다. 높은 혼인율과 출산율, 낮은 이혼율과 동거비율로 대표되는 “전형적 가족의 황금시대(the Golden Age of the Family)”는 거의 모든 산업화된 사회에서 종말을 고했다(Sobotka, 2011). 가족의 모습을 “전형적 가족의 황금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했고, 우리는 전형적 가족이 해체된 시대에 살고 있다. 가족의 다양성은 점점 더 증대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변화가 지속되면서 가족이 더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될지, 아니면 과거의 전형적 가족

형태에서 또 다른 전형적 가족형태로 수렴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Huinink, 2013).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가족의 변화가 안정적 고용과 복지를 제공했던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복지국가가 재편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에 두드러졌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변화방향을 예단할 수 없는 한 가족의 변화 또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족 변화의 양상이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띄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현재의 흐름이 반드시 보편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우리는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가족변화의 보편적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안 고프(Gough, 1979)의 주장처럼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공통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 출산율 저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 고령화 등 가족영역에서 모든 산업화된 국가를 관통하는 흐름 또한 존재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유럽에서 나타난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는 가족구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 아동양육과 관련된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정책과 정치적 관심을 보편적으로 증가시켰다(Thévenon and Neyer, 2014:2).

다만 우리는 가족변화의 양상이 반드시 유사한 가족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에서 만혼(晩婚)화와 높아진 첫 자녀 출산 연령은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만혼화와 출산 연령의 증가가 반드시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2년 현재 스웨덴과 한국에서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은 각각 30.9세와 31.0세로 거의 차이가 없다(OECD, 2015). 그러나 2013년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인데 반해 스웨덴은 인구대체율 수준인 1.90에 이르고 있다. 즉, 중요한 것은 가족변화로 대표되는 인구

학적 변화 자체이기 보다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해당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다. 한 사회의 정책대응은 다시 그 사회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60년 2.74에 이르던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이 되면서 1.78까지 낮아졌지만,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어 2013년에는 2.00 수준까지 반등했다(OECD, 2015).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해 본 연구는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변화와 가족정책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족변화와 가족정책이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논의의 틀을 검토했다. 여기서는 가족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대응양상이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점에 근거해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유형화의 틀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다음으로 가족변화와 가족정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와 검토에 근거하여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변화와 가족정책의 특성이 한국 가족정책에 주는 함의를 검토했다.

1. 가족정책의 유형화

가족변화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은 개별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을 유형화함으로써 개략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을 유형화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었다. 아래 <표 2-1>과 <표 2-2>는 가족정책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기존연구들은 다양한 기준으로 가족정책을 유형화했다(윤홍식, 2012). 예를 들어, 가족정책 유형화의 고전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루이스(Lewis, 1992)의 연구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강도에 따라 강한 부양자모델, 온건한부양자모델, 약한부양자모델로 구분했다. 강한부양자 모델은 강한 성별분업이 지배하는 복지국가유형으로 영국을 대표적인 사

례로 언급했고, 약한부양자모델은 성별분업이 약해 남녀 모두 일정수준에서 돌봄과 생계부양의 역할을 분담하는 유형으로 스웨덴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온건한 부양자모델은 강한부양자모델과 약한부양자모델의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프랑스가 대표적 사례이다. 가족의 돌봄 책임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한 사례로는 라이트너(Leitner, 2003)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라이트너는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4가지로 유형화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선택적 가족책임주의(Optional familialism) 유형으로 탈가족화와 가족화 정책이 모두 높은 수준의 국가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등이 여기에 속하고, 두 번째 유형은 강한 탈가족화와 약한 가족화가 결합된 탈가족화(De-familialism) 유형으로 영국과 아일랜드가 여기에 속한다. 오스트리아,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등 대륙유럽 국가들은 명시적 가족책임주의(Explicit familialism)라는 세 번째 유형으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유럽 국가들은 암묵적 가족책임주의(Implicit familialism)라는 네 번째 유형으로 구분했다. 크로거(Kröger, 2009)는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라는 개념 대신 탈가정화(dedomestic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해 돌봄의 책임이 사회화된 수준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주목할 점은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들 중 탈가족화 수준이 높은 국가로는 덴마크가 유일했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프랑스, 벨기에에는 물론이고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와 동일한 그룹에 속했다는 점이다.

국내 연구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를 시도했다. 김수정(2004)은 복지국가가 여성의 노동자성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모성을 지원하는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강한 모성중심주의 모형으로 프랑스와 벨기에를, 제도적 노동시장 참여 지원 모형으로 덴마크와 스웨덴, 약한 모성주의 모형으로 영국, 잔여적 복지 모형으로 미국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분

류는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의 관점에서 유용한 분류이지만, 분류된 유형이 이러한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예를 들어, 잔여적 복지모형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어 앞서 제기한 3가지 유형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윤홍식(2008, 2011)은 초기에는 부모권(가족화)과 노동권(탈가족화)을 기준으로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초기의 유형화는 이후 탈가족화우선형, 가족화우선형, 탈가족화와 가족화 병행형으로 구분되었고, 이를 다시 공적방식과 사적방식으로 구분함으로써 6가지 유형을 도출했다. 휴직제도, 보육제도, 노동시장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가족정책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연구도 있다(윤홍식 외, 2011).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복지체제가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서유럽 국가들과 남부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각각 별개의 유형을 구성했다. 루이스의 생계부양자모형을 공공모델과 시장모델로 구분해 3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한 연구도 있다(장지연, 2009). 이처럼 가족정책을 유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가족변화로 야기되는 돌봄 이슈에 대한 복지국가의 상이한 개입방식이 가족정책을 유형화하는 공통적 준거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가 가족의 돌봄 책임을 탈가족화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지 아니면, 가족화 방식으로 지원하는지와 탈가족화와 가족화 정책이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지가 유형화의 핵심준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상의 논의들이 주로 아동 돌봄을 중심으로 유형화되었고, 노인,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돌봄 문제까지를 포괄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가족정책을 유형화한 것이 <표 2-2>의 맨 마지막에 정리된 윤홍식(2012)의 유형화이다. 그러나 윤홍식(2012)의 유형화는 실증적 자료에 의해 유형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이론적 논의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공적방식과 사적방식을 구분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어, 윤희식의 유형화를 이론적 틀 이외에 실제로 적용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표 2-1〉 가족정책의 유형화: 국외연구

연구자	유형화의 중요기준	유형특성		
		대표적 사례		
Lewis (1992)	복지국가에서 여성의 지위	강한부양자모델	온건한부양자모델	약한부양자모델
		영국	프랑스	스웨덴
Alber (1994)	규제, 재정, 서비스 전달, 정책결정 방식	고수준 사회서비스		저수준 사회서비스
		덴마크, 스웨덴		독일
Fraser (1997)	돌봄의 사회적 조직, 급여자격, 시민권 등	보편적 생계 부양모델	돌봄동등 모델	보편적 돌봄모델
Sainsbury (1999)	Fraser의 이론적 논의	남성생계 부양자	성역할분리	개인모델
Leitner (2003)	노인과 아동 돌봄의 탈가족화, 가족화	가족화	탈가족화	
			강함	약함
		강함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Optional familialism)	오스트리아, 독일,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Explicit familialism)
약함	아일랜드, 영국 (De-familialism)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Implicit familialism)		
Ferrarini (2006)	전통적 성별분업지원과 이인생계부양지원 등	시장중심	이인생계부양	전통적 성별분업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일본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Kröger (2009)	탈가정화 (Dedomestication)	높음-----낮음		
		덴마크	포르투갈,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자료: 윤희식(2012). “돌봄분담방식을 통한 OECD 국가들의 복지체제 유형화.” 『OECD국가의 저출산 대응 투자 유형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표 2-2〉 가족정책 유형화: 국내연구

연구자	유형화 기준	유형특성				
		대표적 사례				
김수정 (2004)	여성의 노동자성 지원 정책과 모성 지원정책	강한 모성중심주의 모형	제도적 노동시장 참여지원 모형	약한 모성주의 모형	잔여적 복지 모형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영국	미국	
윤홍식 (2008)	탈가족화와 가족화	시장형	가족화 우선형	가족화 탈가족화 병행형	탈가족화 우선형	미발달형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한국,그 리스
장지연 (2009)	생계부양지원: 공적 대 민간	이인소득자/ 공공모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이인소득자/ 시장모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이태리, 스페인	미국, 캐나다	
류연규 (2011)	휴직제도, 보육제도, 노동시장	A유형		B유형	C유형	
		호주, 캐나다, 미국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영국	이태리, 일본, 한국	
윤홍식 (2012)	대상	유형 및 사례 예시				
		국가(공적)중심			민간(시장/가족)중심	
	탈가족화 우선형	병행형	가족화 우선형	탈가족화 우선형	병행형	가족화 우선형
	아동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영국	한국(?)
노인 ¹⁾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미국	한국	그리스

자료: 윤홍식(2012). “돌봄분담방식을 통한 OECD 국가들의 복지체제 유형화.” 『OECD 국가의 저출산 대응 투자 유형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본 장에서는 주로 아동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돌봄정책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노인돌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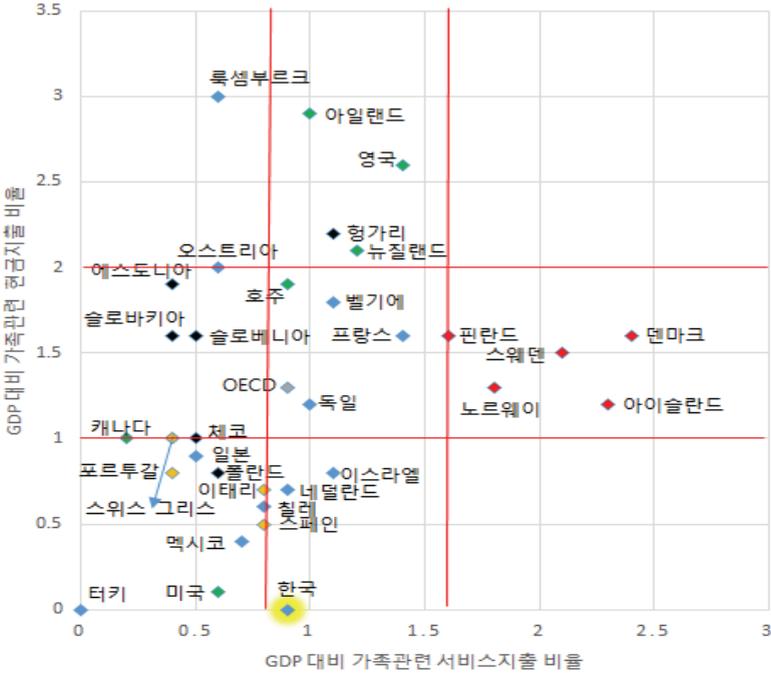
대안은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활용해 위에서 정리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는 <표 2-3>과 같이 OECD에서 제공하는 GDP 대비 사회지출자료를 이용해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사회지출로 유형화하는 것은 유형화 논의를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 논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의 특성을 밝히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지출수준이 아니라 지출의 내용(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GDP 대비 사회지출을 세분화하면 우리는 지출이 단순히 양(量)만을 반영한 것이 아닌 질(質)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의 유형화를 위해 사용한 GDP 대비 가족관련 사회지출비율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현금(cash)과 서비스(in-kind)로 구분해 놓고 있다. 여기서 사회서비스 지출은 국가가 가족구성원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지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가별 탈가족화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현금지원은 가족구성원이 가족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을 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가족화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이외에도 세부 지출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더 있다. 하나는 아동 돌봄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접근했던 한계를 넘어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유형화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에는 미취학아동만이 아닌 취학아동, 노인, 장애인은 물론 그 외의 가족구성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정책이 갖고 있는 상이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분명하다. 다음으로 사회지출은 가족의 돌봄 책임에 대한 국가의 공적책임 정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공적방식과 사적방식을 구분해주는 대리변수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DP 대비 가족에 대한 현금지출비율이 높다는 것은 국가가 가족구성원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직접 돌봄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만약 낮다면 그 반대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족정책의 유형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GDP 대비 가족지출을 현금과 서비스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각각 세 수준으로 구분했다. 현금과 서비스를 세 수준으로 나누는 기준은 현금과 서비스 지출 수준 각각에서 최저지출 수준과 최고지출 수준을 차이를 계산하고 이를 다시 삼등분했다. [그림 2-1]을 보면 현금의 경우 최저수준의 사례는 한국과 터키로 이 두 국가의 GDP 대비 가족에 대한 현금지출수준은 0%이고, 최고수준은 룩셈부르크로 3.0%이다. 그러므로 ‘낮음’은 0~1%, ‘중간’은 1.0~2%, ‘높음’은 2.0~3%까지로 구분했다. 서비스 지출은 최저수준은 0%를 지출하고 있는 터키이고, 최고수준은 덴마크로 2.4%이다. 구분은 ‘낮음’ 0~0.8%, ‘중간’ 0.80~1.6%, ‘높음’ 1.60~2.4%이다. 경계에 있는 경우는 기존의 논의를 참고해 유형을 분류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GDP 대비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출이 1.6%로 중간수준과 높은 수준의 경계에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대륙유럽보다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어 ‘높음’으로 분류했다. 현금과 서비스 지출 둘을 조합하면 이론적으로는 9개의 유형화가 가능한데, 실제 사례(국가)를 포함한 유형은 6개가 도출되었다.

[그림 2-1] GDP 대비 가족항목 사회지출: 현금 대 서비스(2012)



자료: OECD. (2015).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표 2-3〉은 [그림 2-1]에 근거해 만들어진 6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크게 보면 서비스지출이 현금지출 보다 더 큰 유형, 서비스와 현금지출이 유사한 유형, 서비스보다는 현금지출이 더 큰 유형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탈가족화와 가족화라는 가족정책의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명하면 서비스지출이 큰 유형은 탈가족화우선형의 성격을 갖고 있고, 현금지출이 높은 유형은 가족화우선형의 특성을 갖고 있다. 현금과 서비스지출 비중이 유사한 유형은 탈가족화와 가족화가 병행되는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탈가족화우선형에는 [고중유형]과 [중저유형]이 해당되며, 병행형에는 [중중유형]과 [저저유형]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가족화우선형

에는 [중고유형], [저고유형], [저중유형]이 해당된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고중유형]에 속하고, 한국, 이스라엘, 네덜란드가 [중저유형]에 속한다. 병행형인 [중중유형]에는 대륙 유럽 국가들과 호주가 포함되었고, [저저유형]에는 남부유럽국가, 북미국가, 남미국가, 일본, 스위스가 포함되었다. 사실 [저저유형]은 병행형이라기 보다는 국가 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현금지원 모두를 하지 않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윤홍식(2012, 2011)이 언급한 사적방식에 의한 탈가족화·가족화 병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현금지원이 서비스지원 보다 강한 가족화우선형으로는 [중고유형]에 앵글로색슨 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와 동유럽 국가인 헝가리가 속하고, [저고유형]에는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가 속했다. 전통적으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가족정책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독일의 가족정책이 스칸디나비아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분기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마지막으로 [저중유형]에는 폴란드와 헝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유럽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헝가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이 국가사회주의시기에 제도화되었던 공공돌봄 체제가 체제전환기를 거치면서 해체된 결과로 보인다. 이제 다음에서는 6개의 유형을 기준으로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변화를 살펴보자. 다만 명료한 분석을 위해 아래 <표 2-3>에 적시된 OECD 국가들 중 해당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들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²⁾

2) [고중유형]은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스칸디나비아 4개국, [중고유형]과 [중중유형]은 4개국 모두, [중저유형]은 한국만을 분석대상으로 했고, [저고유형]은 2개국 모두, [저중유형]은 자료가 부실한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3개국, [저저유형]은 남부유럽 4개국을 포함시켰다.

〈표 2-3〉 GDP 대비 현금과 서비스 지출을 통해 본 복지국가 가족정책의 유형

		(1) 가족 관련 서비스 지출		
		높음(고)	중간(중)	낮음(저)
(2) 가족 관련 현금 지출	높음(고)	X	[중고유형] 아일랜드, 영국, 헝가리, 뉴질랜드 (현금)서비스	[저고유형]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현금)서비스
	중간(중)	[고중유형]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현금)서비스	[중중유형]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현금)서비스	[저중유형]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현금)서비스
	낮음(저)	X	[중저유형] 이스라엘, 네덜란드, 한국 (현금)서비스	[저저유형] 스위스, 캐나다, 미국, 일본, 터키, 그리스, 포르투갈, 이태리, 스페인, 칠레, 멕시코, 폴란드 (현금)서비스

2. 가족변화의 경향

가. 합계출산율(TFR)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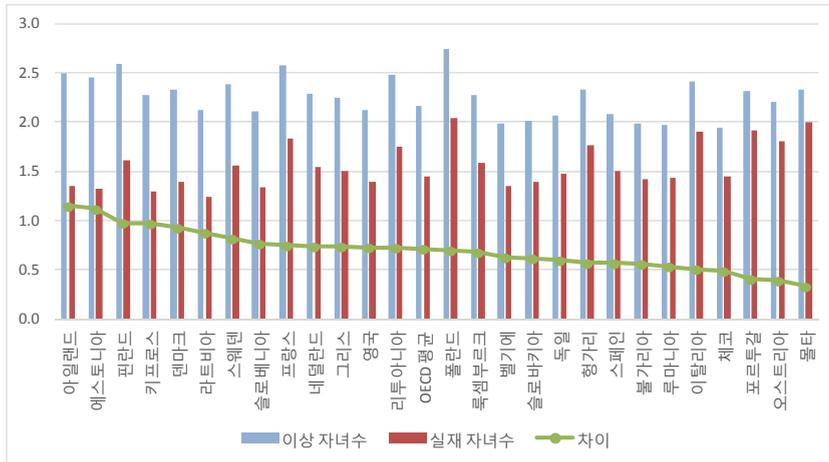
합계출산율의 저하는 전형적 가족생활경로로부터의 이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Lesthaeghe, 2010). [그림 2-2]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율 수준인 2.1 이하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한국으로 대표되는 [중저유형]과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로 구성된 [저고유형]은 2000년대는 물론 2010년대 들어서도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더불어 주목할 유형은 남부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저저유형]인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 합계출산율이 다소간

반등했다가 2013년 현재 1.29로 다시 낮아져 1960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유발하는 합계출산율 1.50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McDonald, 2006). 사실상 [고중유형], [중고유형], [중중유형]은 지난 196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합계출산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1.5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국가군이다. 반면 한국은 2000년 이래 합계출산율이 1.50 이하로 내려갔고, 2013년에는 1.19를 기록하면서 OECD 국가들 중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남부유럽으로 대표되는 [저저유형]의 경우는 1990년 이래 이미 23년 동안 합계출산율 1.50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동유럽국가들로 구성된 [저중유형]은 2000년 이래 1.50 이하의 낮은 합계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가족의 어떤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인구학적으로는 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연령이 높아진 것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Oláh, 2015:4). [그림 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연령은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OECD 평균을 보면 1970년에는 첫 자녀 출산연령이 24.0세였던 것이 1995년에는 26.3세로, 2012년에는 28.2세로 불과 한 세대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4.2세나 높아졌다. [고중유형]의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도 동기간 동안 25.9세에서 29.1세로 3.2세 높아졌고, [중고유형]에 속하는 영국도 23.7세에서 28.1세로 높아졌다. 한국은 가장 급격하게 여성의 첫 번째 자녀 출산연령이 높아진 국가이다. 1970년 23.9세에서 2012년 30.3세로 6.4세가 높아졌다. [저저유형]인 남부유럽 국가들을 보면 동기간 동안 그리스는 25.0세에서 29.7세로, 스페인은 1995년 28.4세에서 2012년 30.3세로, 포르투갈 23.6세에서 28.6세로 높아졌다.

키아의 2012년 현재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은 27.1세로 [고중유형]에서 속하는 스웨덴의 29.1세보다 2세나 낮지만 합계출산율은 스웨덴이 1.89(2013년)로 슬로바키아의 1.34보다 무려 0.55포인트나 높다. 즉, 여성의 늦은 출산이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핵심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이하 이상 자녀수)가 변화한 것일까? OECD Family Database는 이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 자녀수가 변화했는지는 실증할 수는 없다. 다만 Oláh(2015)가 2001년과 2011년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이상 자녀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또한 [그림 2-4]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1년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의 이상 자녀수는 인구 대체율 수준에 근접해 있다.

[그림 2-4] OECD 주요 국가들의 이상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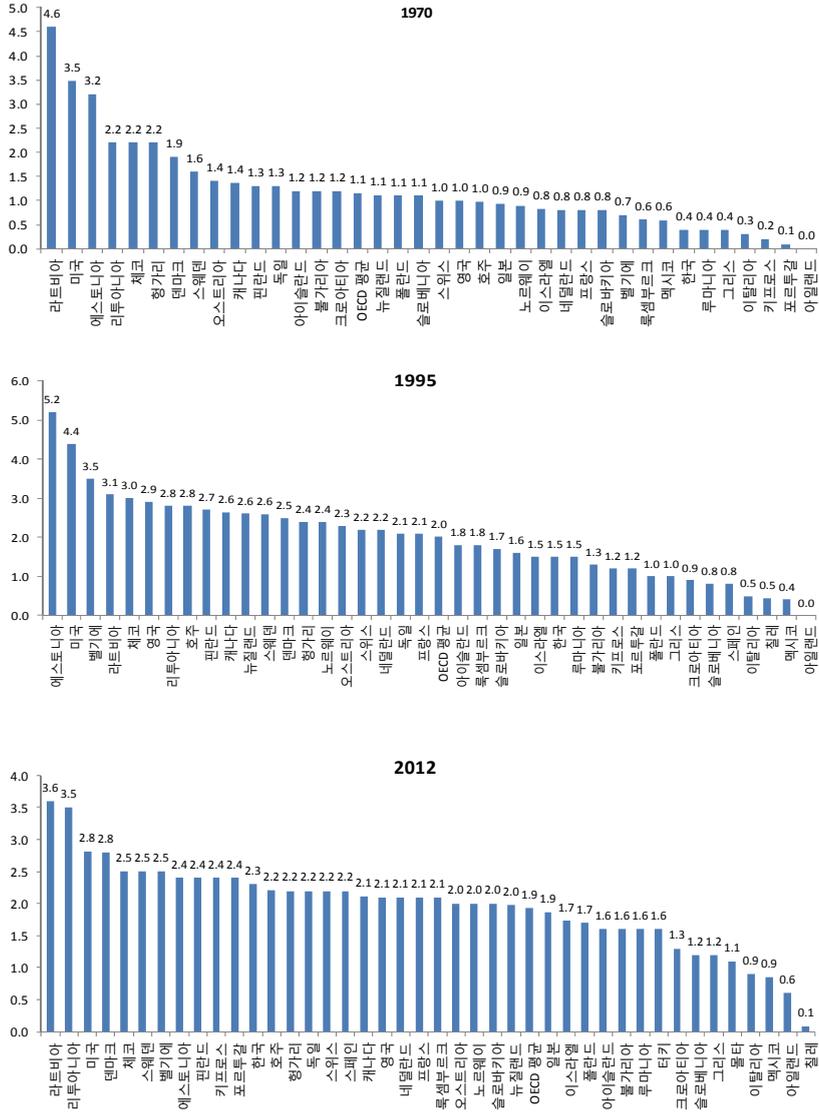


자료: OECD. (2015).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결혼율과 이혼율의 경향도 주목해야할 가족변화 양상이다. 과거 결혼은 남녀 간의 평생계약관계이자 합법적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자녀를 출산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였다. 반면 2015년 현재 서구사회의 모습은 결혼이 남녀 간의 평생계약관계는 물론 합법적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유일한 대안도 아니다. 평생계약관계였던 결혼은 한시적 계약관계로 변화했고, 동거관계가 결혼관계를 대신하고 있고, 자녀도 결혼관계보다 동거관계에서 출산하는 비율이 높아진 국가들도 있다. 실제로 [그림 2-5]는 지난 20여 년간 이혼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인구 10만 명 당 결혼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림 2-6]을 보면 OECD 국가들의 조혼인률은 1970년 8.2건에서 1995년 5.6건으로 낮아졌고, 2012년 현재 4.7건으로 낮아졌다. 불과 40여 년 만에 결혼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지난 40년 간 가족정책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에서 조결혼건수가 감소하는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대신 결혼 이외의 동거관계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혼외출산 비중의 증가는 동거비율의 증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7]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일본, 터키,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지난 40년 동안 혼외출산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예로 [고중유형]에 속하는 핀란드 사례를 보면 1970년 전체 출생아 중 혼외출산비율은 5.8%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41.5%에 이른다. [저저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들도 그리스를 예외로 한다면 혼외출산비중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급격하게 높아진다. 스페인의 혼외출산비율은 동 기간 1.4%에서 35.5%로, 이태리도 2.2%에서 28.0%로, 포르투갈은 7.3%에서 45.6%로 높아졌다. 남부유럽 국가들 중 그리스만이 1.1%에서 7.6%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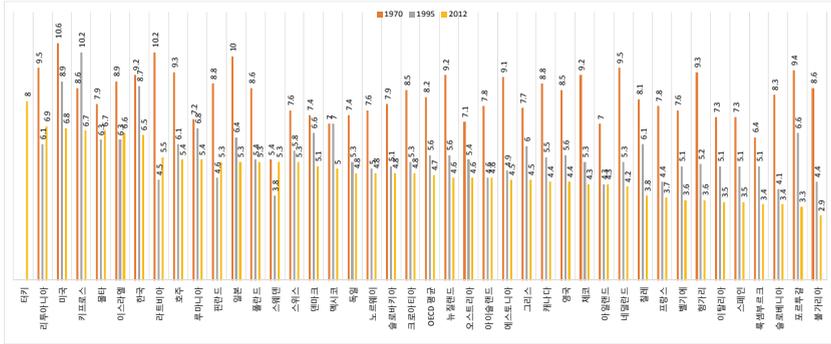
40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그림 2-5] 조이혼율의 변화, 1970, 1995,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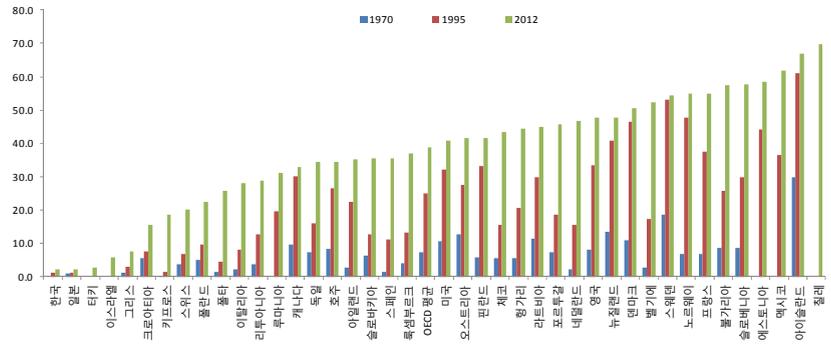
자료: OECD. (2015).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그림 2-6] OECD 주요 국가들의 조결혼률



자료: OECD. (2015).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그림 2-7] 전체 출생아동 중 결혼 이외의 관계에서 출산한 아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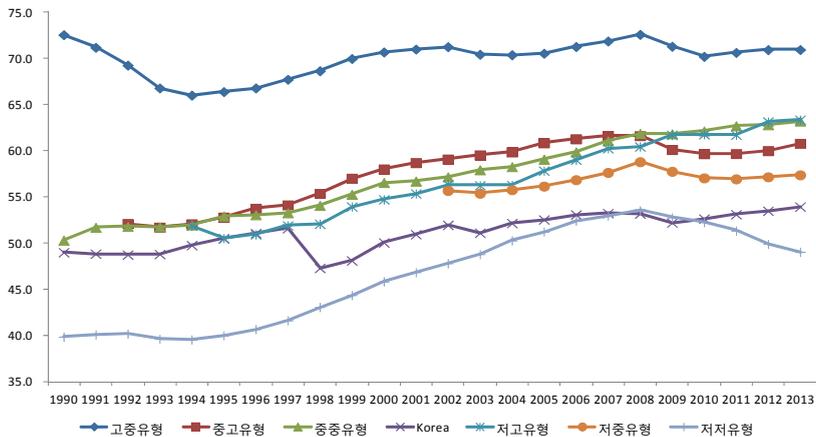
자료: OECD. (2015).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나. 생계부양형태의 변화

생계부양형태의 변화는 출산율 변화와 함께 가족정책의 변화를 야기하는 핵심적인 가족변화 현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돌봄을 전담하는 주체라는 합의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면, 성별분업에 근거해 제도화된 모든 정책들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왜냐하면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는 남성과 달리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해야한다고 가정되었던 가족 내 돌봄 책임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담당했던 돌봄 책임을 누군가 분담하지 않는다면 여성의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때 여성의 선택은 결혼 또는 동거관계를 형성하지 않던지, 설령 결혼 또는 동거관계를 형성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노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성별분업과 관련된 이러한 변화가 일정정도 반영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8] 15-64세 여성 고용률, 1990-2013



자료: OECD. (2015).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그림 2-8]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23년 간 가족정책 유형별 여성고용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 구성된 [고중유형]의 여성 고용률은 1990년대 초를 전후해 등락이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줄곧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남부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저저유형]의 여성 고용률은 200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낮

아지기 시작해 2013년 현재 40%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고중유형]과 비교하면 무려 20%포인트나 낮은 수치이다. 주목해야할 변화는 전통적으로 가족주의가 강하다고 알려진 대륙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중중유형]에서 여성 고용률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림 2-9]는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을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라 구분해 비교한 자료이다. 막내 자녀의 연령이 6세를 넘는 경우 국가별 여성취업률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핀란드가 90.3%로 가장 높고, 멕시코가 50.9%로 가장 낮다. 반면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덴마크가 75.3%로 가장 높고, 헝가리는 13.8%에 불과해 둘 간의 차이가 무려 56.5%포인트에 이른다. 주목할 현상은 [중저유형]과 [중고유형]에 속한 동유럽 국가들에서 자녀 연령에 따른 여성취업률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고중유형]에 속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그 차이가 현격히 작다는 점이다. 에스토니아는 그 차이가 59.8%포인트, 슬로바키아는 58.3%포인트, 체코는 65.7%포인트에 이른다.³⁾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가족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가족정책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동유럽 국가들에서 어린자녀를 둔 여성과 취학자녀를 둔 여성 간의 고용률 차이가 크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린자녀에 대한 돌봄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강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자녀가 성장하면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체코의 경우를 보면 2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19.2%에 불과하지만 막내가 취학연령인 여성의 고용률은 84.9%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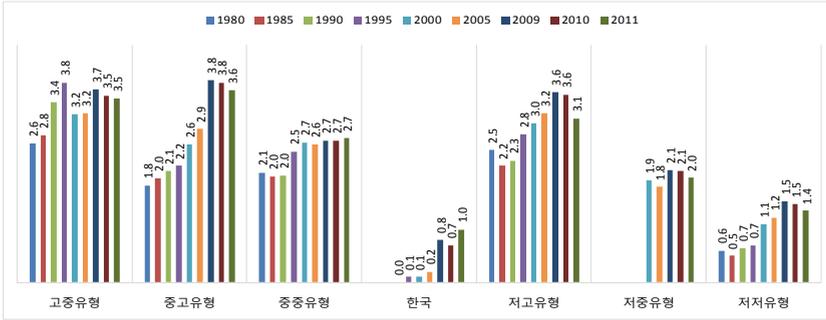
3) 다만 슬로베니아는 예외이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두 집단의 고용률이 71.1%와 83.3%로, 그 차이가 12.2%포인트에 불과하다.

GDP 대비 가족에 대한 지출은 대부분 영어권 국가들로 구성된 [중고유형]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 구성된 [고중유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이 포함된 [중중유형]의 경우는 지난 1980년 이후 GDP 대비 가족에 대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의 [저고유형]은 [중고유형]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한국과 [저저유형]은 가족에 대한 매우 낮은 수준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유형 모두 1980년 이후 가족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다. 동유럽국가들로 구성된 [저중유형]은 2000년 이래 등락하는 모습이다. GDP 대비 가족지출과 관련해 공통의 특성은 한국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2009년 이후 GDP 대비 가족에 대한 사회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에 대한 지출변화를 현금과 서비스로 구분해 살펴보면 보다 분명한 경향이 드러난다. 먼저 [그림 2-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GDP 대비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출은 2009년 이후 대체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감소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총 지출에 비해 그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 20~30년 동안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유형은 한국과 남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저저유형]이다. 비록 절대적 수준에서 높지는 않지만 한국과 [저저유형] 모두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출이 1980년 이래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한국은 1990년 0.0%에서 2011년 0.9%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한국은 2009년 이래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의 [저고유형], 동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저중유형], 남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저저유형]보다 가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지출을 유지했다. 또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 구성된 [고중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서비스 지출 수준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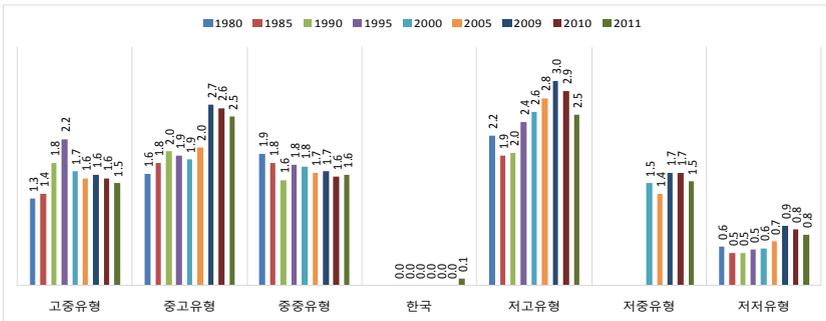
46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그림 2-10] GDP 대비 가족관련 사회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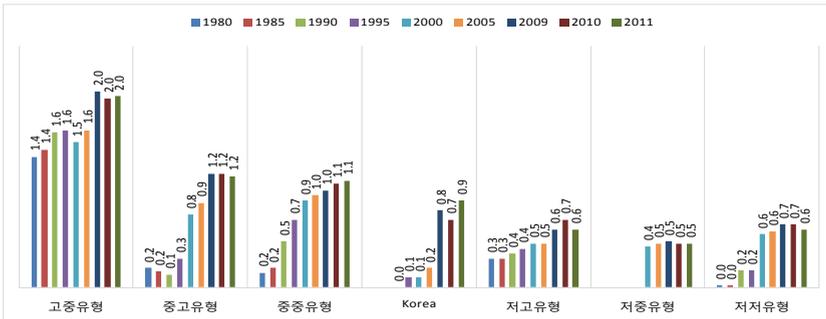
자료: OECD. (2015).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그림 2-11] GDP 대비 가족관련 현금 지출 비율



자료: OECD. (2015).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그림 2-12] GDP 대비 가족관련 서비스 지출 비율



자료: OECD. (2015).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반면 [그림 2-12]에 나타난 것과 같이 현금과 관련된 지출은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의 [저고유형]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의 [중고유형], 대륙 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중중유형]이 뒤를 따랐다. 한국은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가족변화에 대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지원 수준을 유지했다. 전반적인 경향은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2009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에 반해 서비스 지원은 일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한국과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나. 탈가족화 정책

GDP 대비 가족관련 지출의 구성과 변화를 통해 우리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 구성된 [고중유형]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탈가족화 정책과 관련된 서비스 지출을 확대하는 대신 가족화 정책과 관련된 현금지출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서는 아동보육과 방과후돌봄을 중심으로 OECD 국가들의 가족변화에 따른 정책대응을 검토해보자. <표 2-4>는 OECD 국가들의 아동보육정책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0-2세 아동보육비율을 보면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0-2세 아동보육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 이루어진 [고중유형]은 0-2세 아동보육비율이 2006년 이전부터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었다. 노르웨이는 2000년대 들어서면 아동보육비율이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수준으로 높아졌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한국, 독일은 10%포인트가 넘는 큰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한국은 불과 7년

(2006~2013) 만에 10.9%에서 34.1%로 무려 23.2%포인트나 증가했다. OECD가 한국의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3.9%에 불과했던 0-2세 보육비율이 불과 10여 년이 지난 2013년에는 34.1%로 높아졌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0-2세 아동보육비율이 감소한 국가들로는 [저저유형]의 스페인(-6.6%), 이태리(-5.5%), 그리스(-1.3%), [중고유형]의 영국(-4.6%), [저중유형]의 슬로바키아(-1.8%)가 있다. 0-2세 아동보육비율의 감소는 특정한 가족정책유형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남부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저저유형]의 경우 포르투갈을 제외한 3개 국가 모두에서 보육비율이 감소했다.

다음으로 3-5세 아동보육비율도 0-2세 아동보육비율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증가했다.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이태리에서 부분적으로 보육비율이 감소했지만 이는 2002년 보육비율 수준이 100%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5세 아동보육비율이 경향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2002년 100.0%의 보육율에서 2012년에는 99.6%로 0.4%포인트 감소했고, 감소폭이 가장 큰 이태리도 동기간 동안 100%에서 95.1%로 4.9%포인트 감소했다. 0-2세 아동보육비율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높은 수준의 보육비율을 보였다.

〈표 2-4〉 OECD 국가들의 탈가족화 정책: 아동보육정책

0-2세 아동 등록률(%)				3-5세 아동 등록률(%)			
국가순위	유형	2006년	2013년	국가순위	유형	2002년	2012년
덴마크	고중	63.0	67.0	몰타		91.1	100.0
아이슬란드	고중	55.7	58.0	프랑스	중중	100.0	99.6
몰타		na	57.8	벨기에	중중	100.0	98.7
네덜란드	중저	53.9	54.6	덴마크	고중	88.7	97.7
노르웨이	고중	42.3	54.3	아이슬란드	고중	92.9	96.8
룩셈부르크	저고	43.4	53.6	스페인	저저	98.4	96.6
프랑스	중중	42.4	49.7	노르웨이	고중	80.0	96.5

0-2세 아동 등록률(%)				3-5세 아동 등록률(%)			
국가순위	유형	2006년	2013년	국가순위	유형	2002년	2012년
벨기에	중중	41.7	49.3	영국	중고	84.5	96.3
스웨덴	고중	45.3	47.3	이태리	저저	100.0	95.1
슬로베니아	저중	32.5	45.4	독일	중중	82.8	94.6
포르투갈	저저	43.6	45.1	네덜란드	중저	na	94.1
뉴질랜드	중고	34.0	40.9	스웨덴	고중	77.4	94.0
스위스	저저	na	38.2	뉴질랜드	중고	91.0	93.5
스페인	저저	41.9	35.3	이스라엘	중저	85.2	91.7
영국	중고	39.7	35.1	멕시코	저저	54.0	91.3
한국	중저	10.9	34.1	에스토니아	저중	na	89.6
호주	중중	24.8	33.2	룩셈부르크	저고	83.4	89.6
OECD-30 평균		28.1	32.9	포르투갈	저저	73.4	89.4
아일랜드	중고	25.2	30.2	슬로베니아	저중	na	88.8
독일	중중	13.6	29.3	일본	저저	83.9	88.8
미국	저저	27.4	28.0	헝가리	중고	86.4	87.7
핀란드	고중	23.7	27.7	라트비아		64.3	87.3
일본	저저	22.5	25.9	한국	중저	na	87.0
사이프러스		31.2	24.5	오스트리아	저고	73.2	84.1
에스토니아	저중	18.1	24.3	OECD-29 평균		72.2	82.0
라트비아	저중	20.0	23.4	불가리아		73.1	79.6
이태리	저저	28.6	23.1	아일랜드	중고	50.8	79.0
오스트리아	저고	10.4	19.7	루마니아		61.9	77.6
칠레	저저	9.8	17.6	체코	저중	82.4	76.4
그리스	저저	18.2	16.9	리투아니아		52.8	74.4
헝가리	중고	10.5	16.1	핀란드	고중	67.0	74.0
루마니아		7.9	14.5	슬로바키아	저중	69.5	72.0
불가리아		8.7	12.1	칠레	저저	35.6	71.2
리투아니아		8.1	12.1	사이프러스		56.1	69.3
크로아티아		na	12.0	폴란드	저저	33.1	69.2
폴란드	저저	8.6	9.6	미국	저저	62.3	65.7
멕시코	저저	3.5	8.7	호주	중중	59.0	64.8
체코	저중	2.6	4.3	크로아티아		41.5	57.7
슬로바키아	저중	4.9	3.1	그리스	저저	47.0	48.0
캐나다	저저	na	na	스위스	저저	42.3	46.1
이스라엘	중저	na	na	캐나다	저저	na	45.9
터키	저저	na	na	터키	저저	10.5	30.9

자료: OECD. (2015).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표 2-5〉는 취학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취학아동 돌봄의 탈가족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보자. OECD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연령대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인 지표를 보면 아동 돌봄과 관련해 탈가족화를 중심으로 돌봄 정책을 확대한 [고중유형]인 스웨덴과 덴마크의 탈가족화 수준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2008년 현재 스웨덴 초등학교 저학년(6-8세) 아동의 방과 후 서비스 이용 비율은 무려 84.2%에 이르고 있고, 덴마크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87.8%에 이른다. 거의 모든 저학년 아동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웨덴과 덴마크는 OECD에서 취학아동 돌봄 정책의 전형으로 간주되고 있다(OECD, 2007). 다만 같은 [고중유형]으로 분류되는 핀란드의 이용비율이 26.0%(7세에서 9세)에 그치고 있다. 힐라모(Hiilamo, 2004)는 아동 돌봄 정책과 관련해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핀란드에서는 취학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이용비율은 7.4%에 그치고 있다. 부·모의 직접 돌봄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정규교육 이외의 돌봄 서비스 이용비율은 예상했던 것과 같이 낮았다. 사실상 통일이전 서독지역에는 방과 후 돌봄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일의 낮은 서비스 이용율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EFILWC, 2007) [저고유형]에 속하는 오스트리아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비율이 15.5%로 낮게 나타났다. 오스트리아는 주에 따라 방과 후 서비스 이용비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의 9개의 주 중 비엔나(Vienna)에서는 아동의 48%가 방과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반해, 타이롤(Tyrol)에서는 11%에 그쳐 비엔나와 무려 4배차이가 난다. 미취학아동 돌봄의 탈가족화와 같이 스웨덴과 덴마

크에서 방과 후 보육 서비스 이용비율이 높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같은 가족화우선형의 국가들에서는 서비스 이용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저저유형]의 포르투갈, 그리스, 폴란드, [중고유형]의 헝가리, [중저유형]의 한국의 취학아동 돌봄의 탈가족화 수준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헝가리의 경우 방과 후 서비스 이용비율은 스웨덴과 덴마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핀란드(7-9세 아동) 보다는 두 배 가까이 높고,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⁴⁾ 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헝가리와 같이 사회주의를 경험했던 폴란드의 취학아동(6-11세)의 방과 후 서비스 이용비율은 3.8%에 그쳐 헝가리의 특성이 사회주의 정권의 유산이라고 보기만은 어려울 것 같다. 또한 [저저유형]이라고 해도 포르투갈(6-11세)은 15.1%, 그리스(6-11세)는 22.9%로 차이를 보였다.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지표가 9세, 10세, 11세 아동을 포함해 평균 이용비율이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해도, 두 국가 간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취학아동 돌봄만 놓고 보면 헝가리는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고중유형]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헝가리에 대한 평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학자들은 사회주의를 경험했던 중부 및 동부유럽 국가들에서 (남성생계 부양자모델로 회귀하는) 돌봄의 재(再)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Pascall and Lewis, 2004; Hantrais, 2004). 그러나 헝가리, 폴란드, 체코의 가족정책을 연구한 문헌에 따르면 사회주의 몰락 후 이들 국가들에서 가족은 생존을 위해 이인생계부양자를 필요로 했고, 이러한 필요는 일과 가족생활양립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zelewa, 2006).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헝가리와 폴란드 중 왜 헝가리

4) 영국의 방과 후 서비스 이용비율은 0세부터 14세까지를 포함한 수치라 다른 국가들과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에서만 취학아동의 돌봄 서비스 이용비율이 높은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남성생계부양모델로의 회귀가 여성을 동원했던 공산주의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는 길로 이해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취학아동에 대한 헝가리의 높은 수준의 탈가족화는 모순적이다. 그러나 폴란드와 달리 헝가리는 이미 공산정권 하에서 아동 돌봄의 교육적 측면을 강조했고, 체제 전환 이후에도 폴란드와 체코 등 다른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보편적 가족정책의 기반을 유지했으며, 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Szelewa, 2006). 바로 이러한 차이가 헝가리가 폴란드를 포함한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높은 수준의 탈가족화를 유지하는 이유가 된다. 실제로 헝가리에서는 1993년 교육법에 따라 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초등학교는 반드시 6세부터 14세 아동에 대한 방과 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EFILWC, 2006).

남유럽 국가인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비율은 스웨덴, 덴마크, 헝가리에 비해서는 낮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보다는 높다. 흥미로운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비율(6-8세)은 2.6%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한국 초등학생의 대다수가 정규교육시간 이후에 사설교육기관(학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현실이 간과된 것이다. 비록 학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로 입시를 준비하고, 부·모가 (일부 세금환급을 제외하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국가의 방과 후 돌봄 정책과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규학교시간 이후에 취학아동을 지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할 형태일 수는 있지만, 가치판단을 배제한다면) 영리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탈가족화)로 간주해야한다는 주장 할 수도 있다. 물론 학원과 같은 영리서비스를 방과 후 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표 2-5〉 취학아동의 형태별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방과후 서비스 이용비율				비공식 돌봄 이용비율	이용하지 않는 비율
	연령	이용비율	연령	이용비율		
스웨덴	6-8세	84.2	9-11세	34.8	1.7	51.3
덴마크	6-8세	87.8	9-11세	54.5	0.0	39.1
핀란드	7-9세	26.0	10-11세	n.a.	4.4	71.5
독일	5-8세	7.4	9-11세	4.9	13.3	62.0
오스트리아	6-8세	15.5	9-11세	5.7	20.5	57.3
영국	0-14세	22.3	-	-	32.2	60.1
포르투갈	3-5세	74.2	6-11세	15.1	19.5	38.7
그리스	4-5세	40.8	6-11세	22.9	20.8	65.4
헝가리	6-8세	58.1	9-11세	43.0	24.1	42.4
폴란드	3-5세	40.3	6-11세	3.8	20.0	60.4
한국	6-8세	2.6	9-11세	2.1	14.8	n.a.

자료: OECD. (2015).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다. 가족화 정책

모성휴가(산전후휴가), 부모휴가(육아휴직), 아동 1인당 급여수준을 중심으로 OECD 국가들의 가족화정책의 특성을 살펴보자. 상식적으로는 가족에 대한 GDP 대비 현금지출비율이 높은 국가들일수록 관대한 돌봄 휴가를 보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이 반드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모성휴가를 보자. 〈표 2-6〉을 보면 가장 관대한 모성휴가 기간을 보장하는 상위 7개국(상위20%)은 영국, 슬로바키아, 체코,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이태리, 에스토니아이다. 모두 영어권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급여기준 상위 7개국은 폴란드,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체코, 칠레, 이태리, 헝가리로 나타났다. 공통점은 동유럽 국가들이 기간과 급여 두 측면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유럽 국가들의 가족정책유형은 [중

고유형] 헝가리, [저중유형],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저저유형] 체코, 폴란드로 분산되어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헝가리를 예외로 한다면 모성휴가의 관대한 급여는 GDP 대비 낮은 서비스지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 구성된 [고중유형]은 급여와 기간 모두 중하위권 수준이었다. 주목할 것은 전통적으로 가족주의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저저유형]의 남부유럽 국가들 중 이태리를 제외하면 모성휴가의 기간과 급여가 관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대륙유럽의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중간수준의 기간과 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다.

부모휴가도 큰 틀에서 모성휴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먼저 기간을 보면 핀란드, 에스토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노르웨이, 한국의 부모휴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중유형]에 속한 핀란드가 가장 긴 부모휴가를 보장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긴 부모휴가가 앞서 제시한 [그림 2-9]에서 본 것과 같이 핀란드에서 2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과 취학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그림 2-9]는 노르웨이 사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노르웨어도 핀란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두 국가의 공통특성은 부모휴가에 더해 상대적으로 긴 유급 양육휴가를 추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한국을 제외하면 상위권 국가들은 모성휴가와 같이 동유럽 국가들이다. 급여수준을 보면 이러한 특성이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상위 7개국은 에스토니아,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핀란드이다. 이 역시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하면 모두 동유럽 국가들이다. 예외가 있다면 폴란드이다.

아동 1인당 급여는 돌봄과 관련된 휴가정책의 질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35,596USD), 노르웨

이(31,735USD), 에스토니아(29,106USD), 스웨덴(26,139USD), 핀란드(25,345USD), 체코(22,937USD), 덴마크(21,803USD) 순이다. 주목할 점은 [고중유형]에서 속하는 스칸디나비아 4개국(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이 모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고중유형] 국가들의 돌봄 관련 휴가에 대해 관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1,264USD)은 부모휴가가 무급인 국가들을 제외하면 아동 1인당 급여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들 중 하나로 그 수준이 OECD 평균(12,435USD)의 1/10에 불과했다. 반면 [고중유형]에 속한 국가들은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화 정책현황(유급돌봄휴가)

국가	유형	모성		부모		부성		아동 1인당 급여 (USD) PPP
		기간 (주)	전일제 수준 급여(%)	기간 (주)	전일제 수준 급여(%)	기간 (주)	전일제 수준 급여(%)	
그리스	저저	17.0	12.8	26.0	10.6	0.4	0.4	4,208
네덜란드	중저	16.0	16.0	26.0	4.7	26.4	5.1	-
노르웨이	고중	17.0	15.4	70.0	21.1	14.0	12.7	31,735
뉴질랜드	중고	14.0	6.5	0.0	0.0	0.0	0.0	1,701
덴마크	고중	18.0	9.6	32.0	17.1	2.0	1.1	21,803
독일	중중	14.0	14.0	44.0	20.7	8.7	4.1	10,577
룩셈부르크	저고	16.0	16.0	26.0	10.2	26.4	10.6	35,596
멕시코	저저	12.0	12.0	0.0	0.0	1.0	1.0	-
미국	저저	0.0	0.0	0.0	0.0	0.0	0.0	-
벨기에	중중	15.0	9.4	17.3	3.5	19.3	5.0	8,290
스웨덴	고중	8.6	6.7	51.4	31.4	10.0	7.6	26,139
스위스	저저	14.0	7.9	0.0	0.0	0.0	0.0	6,460
스페인	저저	16.0	16.0	0.0	0.0	2.1	2.1	7,596
슬로바키아	저중	34.0	22.1	130.0	30.7	0.0	0.0	14,871
슬로베니아	저중	15.0	15.0	37.1	33.4	2.1	1.9	20,172
아이슬란드	고중	13.0	8.4	13.0	8.4	13.0	8.4	13,444

56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국가	유형	모성		부모		부성		아동 1인당 급여 (USD) PPP
		기간 (주)	전일제 수준 급여(%)	기간 (주)	전일제 수준 급여(%)	기간 (주)	전일제 수준 급여(%)	
아일랜드	중고	26.0	9.0	0.0	0.0	0.0	0.0	5,052
에스토니아	저중	20.0	20.0	140.3	64.9	2.0	2.0	29,106
영국	중고	39.0	12.1	0.0	0.0	2.0	0.4	9,075
오스트리아	저고	16.0	16.0	44.0	24.8	8.7	4.9	6,427
이스라엘	중저	14.0	14.0	0.0	0.0	0.0	0.0	4,096
이태리	저저	21.7	17.4	26.0	7.8	0.2	0.2	9,283
일본	저저	14.0	9.4	44.0	26.4	52.0	30.4	8,197
체코	저중	28.0	19.6	82.0	36.3	0.0	0.0	22,937
칠레	저저	18.0	18.0	12.0	12.0	1.0	1.0	2,611
캐나다	저저	17.0	8.1	35.0	18.9	0.0	0.0	10,602
터키	저저	16.0	10.6	0.0	0.0	0.0	0.0	242
포르투갈	저저	6.4	6.4	23.7	14.0	21.3	11.5	8,639
폴란드	저저	26.0	26.0	0.0	0.0	2.0	2.0	7,122
프랑스	중중	16.0	16.0	26.0	4.8	28.0	6.8	8,716
핀란드	고중	17.5	13.7	143.5	28.8	9.0	6.4	25,345
한국	중저	12.9	10.3	52.0	15.7	52.6	16.3	1,264
헝가리	중고	24.0	16.8	136.0	53.5	1.0	1.0	18,888
호주	중중	6.0	2.4	12.0	4.9	2.0	0.8	5,323
OECD 평균		17.0	12.8	36.7	14.8	9.0	4.2	12,435

자료: OECD. (2015).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라. 탈젠더화 정책

잘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돌봄과 관련된 휴가정책은 대부분 여성이 이용한다. 이로 인해 돌봄과 관련된 휴가정책이 성별분업을 강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OECD 국가들에서는 남성의 돌봄 휴가 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효과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남

성들의 양육참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OECD 국가들에서 돌봄휴가의 탈젠더화를 위해 어떤 정책대응을 하고 있는지 검토했다. 대표적인 제도는 부모휴가 기간 중 부가 이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을 별도로 설정하는 경우와 남성에게 부성휴가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표 2-7>는 부모휴가, 부성휴가, 아버지할당 기간을 포함해 (여성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남성에게만 부여된 아동 돌봄 관련 휴가 기간의 변화를 기록한 것이다. 1970년만 해도 부성휴가를 포함해 남성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별도의 휴가를 제도화한 OECD 국가는 룩셈부르크와 스페인이 유일했다. 룩셈부르크는 약 0.4주를 스페인은 0.2주를 부여했다. 1990년 들어서면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아버지에게 할당되는 휴가 제도를 도입했고(부모휴가 기간 중 부(父)에게 일정기간을 할당하는 제도), 2000년에 들어서면 포르투갈, 벨기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가 합류한다. 2014년 현재 22개 OECD 국가들이 부에게 부모휴가, 아버지할당, 부성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변화가 놀라운데 독일은 2007년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한 이후 남성의 부모휴가 이용비율이 도입 전인 2006년 3.6%에서 도입 이후인 2013년 32.0%로 급증했다 (Destatis, 2015, OECD, 2015 재인용). 한국은 남성에게 할당하는 휴가기간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긴 국가이지만, 휴가기간 중 소득대체율이 낮아 남성 이용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2014년 현재 육아휴직 이용자 중 4.5%). 전반적인 경향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남성의 양육참여를 위한 제도도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 2-8>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성의 참여율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2-7〉 부(父)에게 할당된 돌봄 휴가 기간(부모휴가, 부성휴가, 아버지할당)

국가순위	유형	1970	1990	2000	2014
한국	중저	0.0	0.0	0.0	52.6
일본	저저	0.0	0.0	0.0	52.0
프랑스	중중	0.0	0.0	0.0	28.0
룩셈부르크	저고	0.4	0.4	26.4	26.4
네덜란드	중저	0.0	0.0	0.0	26.4
포르투갈	저저	0.0	0.0	4.0	21.3
벨기에	중중	0.6	0.6	13.6	19.3
노르웨이	고중	0.0	0.0	4.0	14.0
아이슬란드	고중	0.0	0.0	1.3	13.0
OECD 평균	-	0.0	0.2	3.4	10.1
스웨덴	고중	0.0	1.4	5.8	10.0
핀란드	고중	0.0	0.0	3.0	9.0
오스트리아	저고	0.0	0.0	26.0	8.7
독일	중중	0.0	0.0	0.0	8.7
스페인	저저	0.2	0.4	0.4	2.1
덴마크	고중	0.0	2.0	17.0	2.0
호주	중중	0.0	0.0	0.0	2.0
폴란드	저저	0.0	0.0	0.0	2.0
영국	중고	0.0	0.0	0.0	2.0
헝가리	중고	0.0	0.0	0.0	1.0
멕시코	저저	0.0	0.0	0.0	1.0
그리스	저저	0.0	0.0	0.4	0.4
이태리	저저	0.0	0.0	0.0	0.2

자료: OECD. (2015).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부모휴가 이용자 중 남성의 이용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고중유형]에 속한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로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8 참고). 특이한 점은 [고중유형]에 속하는 핀란드의 남성이용 비율이 2~3%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핀란드 여성의 부모휴가 이용비율이 100%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성별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도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달리 남성의 참여는 24%

에 그치고 있다. 남성의 이용율이 10%를 넘는 국가는 캐나다,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여전히 소수 국가에 불과하다. 남성의 양육 참여를 위한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은 남성에게 가장 긴 양육관련 휴가를 할당하고 있지만 남성의 이용비율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용자에게 국한해도 4.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지난 40년 간 남성의 양육참여를 위한 제도는 확대되었지만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표 2-8〉 부모휴가 남녀 이용비율

국가	(여성)이용률 ⁵⁾	남성이용비율	년도
호주	65.6%(모) ⁶⁾	n.a.	2010
오스트리아	93~96%(모)	0.6~2%	2000년대 후반
캐나다	95.1% ⁷⁾	14%	2010/2011
크로아티아	84.0% ⁸⁾ (모)	0.3%	2011
체코	328,777명 ⁹⁾	1.5% ¹⁰⁾	2008
덴마크	94%(모)	24%	2006
에스토니아	80% 이상(모)	4.8%	2000년대 후반
핀란드	100%(모)	2~3%	2004-2007
프랑스 ¹¹⁾	98-99%(모)	n.a.	1990년대 중반
독일	-	32.0%	2013
아이슬란드	100%(모)	96.4%	2009
이태리	296,000명, 89%(모)	11%(이용자 중)	2011
일본	83%(모)	2.0%	2011.10~2012.9
리투아니아	n.a.	4.5%(이용자 중)	2012
룩셈부르크	66%(모)	13%	2003
네덜란드	49%(모)	27%	2011
뉴질랜드	57%(모)	3%	2005/06
노르웨이	100%(모)	90%	2011
폴란드 ¹²⁾	50%(모)	2.5%	2005

60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국가	(여성)이용률 ⁵⁾	남성이용비율	년도
포르투갈 ¹³⁾	1,851명(모-83%)	17%(약 315명)	2010
슬로베니아 ¹⁴⁾	100%	6.8%	2011
스페인	34,128명 ¹⁵⁾	4.5%(이용자 중)	2010/11
스웨덴	93%(모)	98%	2011
영국	11%	n.a.	2012
한국	29.9% ¹⁶⁾ 73,412명	0.9% ¹⁷⁾ (육아휴직 이용자로 제한할 경우 4.5%) 3,421명	2014

자료: Moss, P. 2013.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13.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Moss, P. (ed.). 2012.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12.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Moss, P. (ed.). 2011.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11.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통계청. 2015. 성·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http://kosis.kr>. 통계청. 2015a. 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www.index.go.kr>. OECD. (2015).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 5) 이용비율은 자격이 있는 부모 중 부모휴가를 이용하는 비율임.
- 6) 전체 취업출산모 중 82%가 자격이 있고, 이중 80%가 이용했기 때문에, 전체취업모에 대한 비율은 대략 65.6%가 된다.
- 7) 고용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모성휴가(산전후휴가)를 이용하며, 산전후휴가를 이용한 모의 95.1%가 부모휴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oss, 2013, 77).
- 8) 자녀출산 후 6-12개월 동안 부모휴가를 이용한 비율(Moss, 2013, 86).
- 9) 부모휴가를 이용한 비율(%)에 관한 정보는 없음.
- 10) 부모휴가를 이용한 사람들 중 남성(부)이 이용한 비율.
- 11) 고용주가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작성이 불가능함. 연구에 의해 추정된 수치임.
- 12) Kotowska and Baranowska(2006)과 Matysiak(2007)의 추정치 (Moss, 2013, 217, 재인용).
- 13) 포르투갈은 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가 모두 부모휴가로 통합되었고, 과거 부모휴가는 현재 추가부모휴가(Additional Parental Leave)로 불리우고 있음.
- 14) 소득을 100% 대체해주고 있음.
- 15) 2011년 전체 출산아동의 7.2%에 해당함.
- 16) 2014년 현재 취업한 여성 중 출산한 여성의 수와 이중 육아휴직을 이용한 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공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이용비율은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2014년 육아휴직 여성이용자수 73,412/(2014년 출생아 수 435,400*30대 여성고용률 56.3%)]*100=(단순 추정된) 육아휴직이용비율
- 17) 남성 이용율로 추정된 수치로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출생아 수와 고용율은 통계청 자료를 사용했다. [2014년 육아휴직 남성이용자수 3,421/(2014년 출생아 수 435,400*30대 남성 고용률 90.9%)]*100=(단순 추정된) 육아휴직이용비율

4. 합의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가족변화에 대해 OECD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GDP 대비 가족관련 사회지출(현금과 서비스)의 변화, 탈가족화, 가족화, 탈젠더 정책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가족관련 사회지출을 기준으로 우리는 OECD 국가를 가족관련 서비스 지출과 현금지출을 기준으로 7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대부분 서비스 지출이 높고, 현금 지출은 중간수준이 [고중유형]에 해당했고,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들은 서비스 지출은 중간수준이고, 현금지출이 높은 [중고유형]에 해당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영어권 국가들이 보수주의 복지국가들 보다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이들 국가들을 자유주의 복지체제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벨기에, 프랑스, 독일은 서비스와 현금 지출 모두가 중간수준인 [중중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같은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는 서비스 지출은 낮고, 현금지출은 높은 [저고유형]으로 분류되어 가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현금지원을 하는 전형적인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특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유형은 서비스지출은 낮고, 현금지출은 중간수준인 [저중유형]으로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동유럽 국가들로 구성되었다. 국가사회주의가 해체되기 이전에 이들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제 이행과정에서 가족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유럽 국가들은 낮은 서비스 지출과 낮은 현금 지출을 특징으로 하는 [저저유형]에 속했다. 남부유럽에는 가족책임주의가 강하게 남아있지만, 가족에 대한 국가의 공적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족책임주의는 대륙유럽과 달리 국가의 책임 없이, 가족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형태로 존치되고 있

는 것이다. 한국은 [중저유형]에 속하는데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GDP 대비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0.1%에 불과해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GDP 대비 0.9%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의 0-2세 아동보육비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가족변화를 정리하면 합계출산율은 일반적으로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은 196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특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 [저고유형]의 국가들도 합계출산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부유럽으로 대표되는 [저저유형]의 국가들은 2009년을 기점으로 합계출산율이 다시 감소하고 있다. 즉, OECD 국가들은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는 국가군과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로 양극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첫 자녀출산연령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출산 연령의 상승이 낮은 출산율을 설명하는 적합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상자녀수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2.0을 넘거나 2.0에 근접해 있다. 결혼하는 사람은 줄고, 이혼하는 사람을 늘고 있으며, 혼외출산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고용율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높아지고 있다. 단 남부유럽 국가들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고용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변화에 대해 OECD 국가들은 GDP 대비 가족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다만 지출의 내용을 보면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보다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의 증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동보육으로 대표되는 탈가족화 정책을 통해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약화시켜,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서 사회로 이전시키고 있는 것이 목격된다. 방과 후 돌봄은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보다는 미약하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

상이다. 가족화정책도 일과 가족생활 양립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남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탈젠더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 남아 있고, 남성의 책임은 제한적이지만,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부모휴가에 참여하는 남성들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보수적이 독일에서도 제도의 변화를 통해 남성참여가 높아졌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별분업이 해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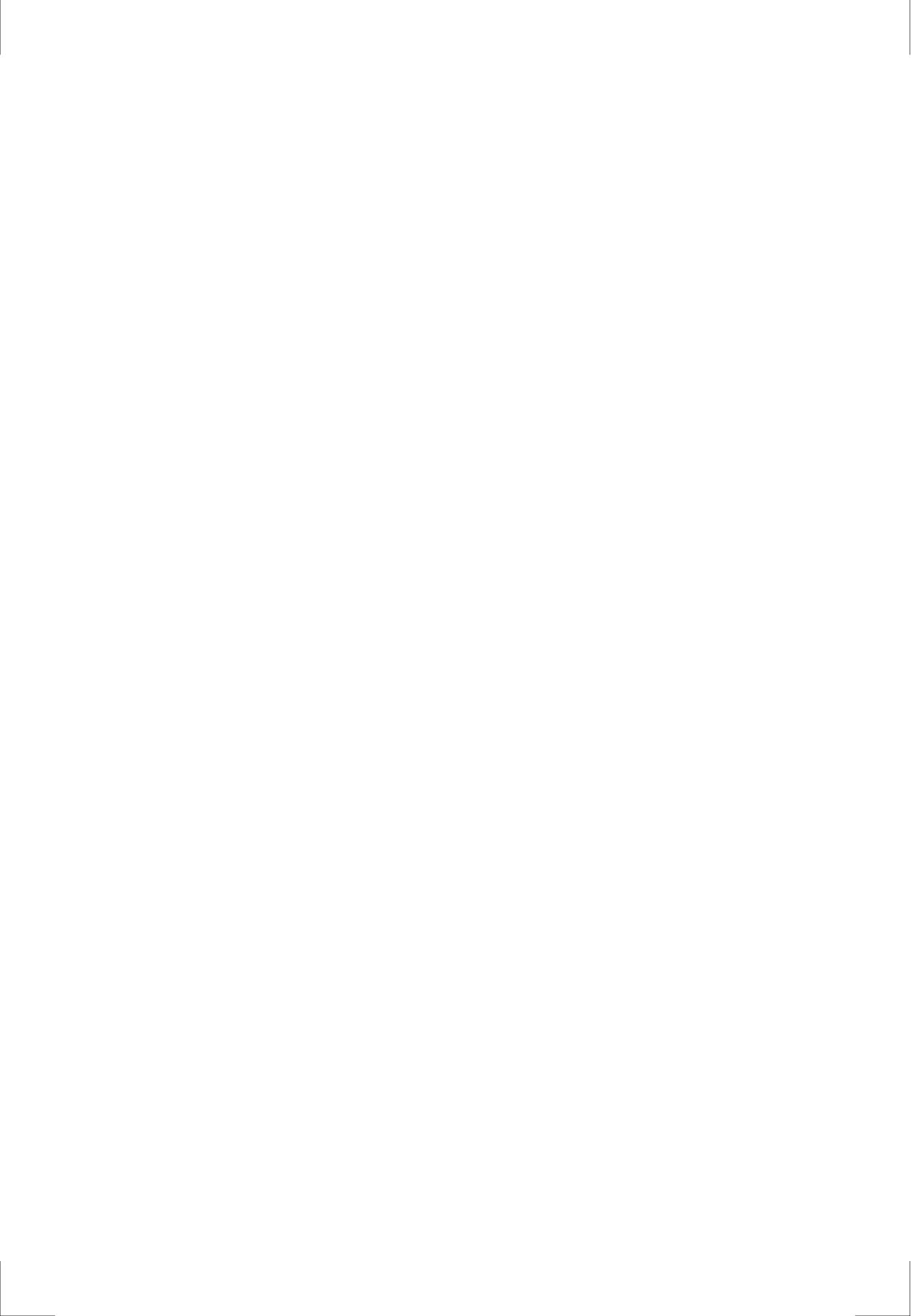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변화 자체가 아니라 가족변화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만혼현상과 늦은 출산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일반적 변화가 모든 사회에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보면 앞서 언급한 가족관련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여전히 높고, 합계출산율도 인구대체율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족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은 가족변화를 늦추거나 역전시키려는 시도 보다는 가족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변화가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삶에, 거시적으로는 사회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남성의 양육참여를 제도화하려는 정책시행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족변화와 변화의 결과는 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 설명되거나 대안이 만들어 질 수 없다. 다시 말해 가족변화에 대한 대응은 가족정책만이 국가와 사회 차원의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가구구조의 재구조화

- 제1절 재구조화 근거에 관한 논의
- 제2절 인구센서스 상 가구 구성
- 제3절 우리나라 가구 재구조화



3

가구구조의 재구조화 <<

제1절 재구조화 근거에 관한 논의

1. UN의 분류체계 및 외국 사례

많은 국가들에서 가족의 변화 등을 분석하기 위해 가족주기와 같은 동태적(flow) 개념에 의거하기보다 일정 시점에서의 가족 형태 즉, 정태적(static)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각 개인이 인생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동태적 가족주기의 모습을 조사하고 측정(계량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느 조사일지라도 가족구성원을 한꺼번에 파악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구’의 개념을 적용한 조사 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가구의 개념으로는 원 가족의 구성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가구는 실제 생활단위로서 사회복지 수급, 주택 수요 등을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UN(2011)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구를 분류하고 있다. 우선 가구의 형태(구성)는 가구주(head of household)와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¹⁸⁾ 여기에서 가구주는 일반적으로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구는 가족핵(family nucleus)의 수와 가족핵 혹은 가구원들 간의 관계(relationships)에 의거하여 분류할 수 있다. 가족핵은 동일 가구 내

18) 일부 국가에서는 가구주의 의미가 모호하여 가구주 대신 참고인(reference person)을 설정하고, 그 사람과 동거인의 관계를 파악하여 가구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에서 함께 살고 있는 기초단위로 결혼한 부부만이 살고 있는 형태, 결혼부부가 1명 이상 미혼자녀와 살고 있는 형태, 부 또는 모가 1명 이상 미혼자녀와 살고 있는 형태를 포함한다. 한편, 동성 부부도 결혼부부로 간주된다. 두 번째로 가족핵 또는 구성원간의 관계는 혈연, 입양 및 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설정할 때에는 가구주(household head) 혹은 참고인(reference person)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가족핵과 가족핵 또는 가구원 간의 관계를 결합하여 가구유형은 1인가구, 핵가구, 확대가구, 복합가구(composite household) 및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UN, 2011). 핵가구는 1개의 가족핵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확대가구는 1개의 가족핵과 혈연, 입양, 혼인 등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 2개 이상의 가족핵으로 구성된 가구, 2개 이상의 핵가구와 이들 중 적어도 1개의 핵가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 핵가구와는 관계가 없으나 서로 관계가 있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등이 포함된다. 복합가구에는 1개 가족핵 및 기타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 1개 가족핵 및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 상호 관계가 있는 2개 이상 가족핵 및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 상호 관계가 있는 2개 이상 가족핵 및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 상호 관계가 없는 2개 이상 가족핵 및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 가족핵은 아니나 상호 관계가 있는 2인 이상 및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 기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 등이 포함된다.

(표 3-1) 가구 유형에 관한 유엔 분류

	가족핵	관계	가구유형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없는 결혼한 부부 • 결혼한 부부+ 1명 이상 미혼자녀 • 부+1명이상 미혼자녀 • 모+1명 이상 미혼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연, 입양,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 핵가구(1개의 가족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한 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있음 *자녀 없음 - 부+자녀 - 모+자녀 • 확대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의 가족핵+가족핵과 관련 있는 개인 - 상호 관계있는 2개 이상의 가족핵 - 상호 관계있는 2개 이상의 가족핵+최소 1개 가족핵과 관련 있는 개인 - 가족핵을 구성하지 않지만, 서로 관련 있는 2인 이상 • 복합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의 가족핵+관계인+비관계인 - 1가족핵+비관계인 - 상호 관계있는 2이상 가족핵+관계인+비관계인 - 상호 관계있는 2이상 가족핵+비관계인 - 상호 관계없는 2이상 가족핵+비관계인 - 2이상관계인+비관계인 - 비관계인

자료: <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sconcerns/fam/fammethods.htm>

가구 내 구성원이 다른 가구 또는 가족 구성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가구 또는 가족 상태(status)에 따라 개인을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가구 상태에 따른 개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최소 1개 가족핵이 있는 가구에서 개인은 남편, 아내, 한부모(부 또는 모), 양친과 동거하는 자녀,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 가족핵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친척과 동거하는 사람, 비혈연과 동거하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가족핵이 없는 가구의 개인은 1인 가구,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형제자매와 동거, 기타 친인척과 동거, 비혈연과 동거)로 분류된다.

가족 상태(family status)에 따라 개인을 분류하면, ①부부, ②한부모,

③자녀, ④가족핵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로 크게 구분된다. 여기에서 ‘부부’는 남편, 배우자로 구분되고 이는 다시 자녀의 유무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 한부모는 성별로 구분할 수 있다. 자녀는 양친과 동거하는 경우와 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가족핵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남편 또는 부인의 친인척인지 비혈연관계인지로 구분된다.

〈표 3-2〉 가구 및 가족에 관한 유엔 분류

개념	household status	family status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이상의 가족핵이 포함된 가구) 남편, 부인, 한부모(부 또는 모), 부모+자녀, 모+자녀, 부+자녀, 가족핵과 무관한 구성원, 친인척과 거주, 비친족과의 거주 • (가족핵이 없는 가구) 1인, 1인+기타인, 1인+형제자매, 1인+기타 친인척, 1인+비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남편의 자녀 유무별, 부인의 자녀유무별) • 한부모(부/모) • 자녀(양부모 및 한부모 여부별) • 핵가족이 아닌 구성원들(남편 또는 부인의 친인척-부모,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 비친인척

자료: <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sconcerns/fam/fammethods.htm>

다음으로 개별 국가들에서 가구 또는 가족을 분류하는 사례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한다. 개별 국가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 가족 내지 가구의 분류에 대한 정보는 해당 국가에서 중요시 하는 요인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가족과 가구를 분리하여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 분류 시, 자녀 유무에 의거하여 분류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녀는 25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한편, 자녀의 연령 기준은 모든 분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무자녀, 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이다. 두 번째로 부부의 취업 여부와 자녀 유무를 결합한 분류로 한부모 여부와 취업여부 결합(취업 부가정, 비취업 부가

정, 취업 모 가정, 비취업 모 가정), 자녀유무와 취업여부를 결합한 부부 가구(무자녀 맞벌이 부부, 무자녀 남성 외벌이 부부, 무자녀 여성 외벌이 부부, 무자녀 비취업 부부, 자녀+맞벌이 부부, 자녀+남성 외벌이 부부, 자녀+여성 외벌이 부부, 자녀+비취업 부부)로 세분화된다. 세 번째 분류로는 부부의 혼인상태에 의거한 것으로 부부 모두 혼인, 부부 모두 싱글, 기타가 포함된다.

〈표 3-3〉 프랑스의 가족 및 가구 특성 분류

	분류 내용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세 미만의 아동 수에 따른 분류 - 배우자와의 법적인 혼인상태와 25세 미만 아동 수에 따른 분류 - 25세 미만 아동 수와 국적에 따른 분류 - 25세 미만 아동 수와 기준인의 직종에 따른 분류 - 25세 미만 아동 수와 가족 유형(자녀가 없는 부부, 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에 따른 분류 - 아동 연령별 가족 유형 - 아동 연령과 배우자와의 법적 혼인상태에 따른 분류 - 아동 연령과 국적에 따른 분류 - 아동 연령과 기준인의 직종에 따른 분류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규모와 기준인의 직종별 분류 - 기준인의 성별 및 연령,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분류 - 기준인의 연령 및 가구형태(단독가구, 다인가구, 한부모가구, 부부가구)별 분류 - 기준인의 성별, 연령, 동거형태(부부+자녀, 한부모+자녀, 부부, 한부모, 다인가구, 단독가구)

자료: 프랑스 INSEE 홈페이지 www.insee.fr

스웨덴에서는 가구를 혼인상태, 성별, 자녀여부 등을 결합하여 분류하고 있다. 가구유형은 혼인상태와 자녀유무(자녀 연령)의 정보를 가지고 분류하고, 이를 다시 가구주의 성, 연령, 자녀수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

72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표 3-4〉 스웨덴의 가구 분류

	가구유형	세분화
가구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가 없는 미혼 - 0~24세 아이가 있는 미혼 - 25세 이상의 아이가 있는 미혼 - 아이가 없는 동거/결혼한 부부 - 0~24세 아이가 있는 동거 부부 - 25세 이상의 아이가 있는 동거 부부 - 자녀가 없는 기타 가구 - 0~24세 자녀가 있는 기타 가구 - 25세 이상 자녀가 있는 기타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 연령 - 자녀 수

자료: 스웨덴 통계청 홈페이지. www.statistikdatabasen.scb.se

스웨덴에서는 가족형태에 대해서도 분류하고 있다. 재혼여부,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아동연령, 부/모의 국적 및 연령 등의 자료로 세분화된 가족을 볼 수도 있다.

〈표 3-5〉 스웨덴의 가족 분류

	가족유형	아동 연령	세분화
가족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가족, 결혼한 부부 - 핵가족, 동거하는 부부 - 재혼가족, 결혼한 부부 - 재혼가족, 동거하는 부부 - 기타 가족, 결혼한 부부 - 기타 가족, 동거하는 부부 - 한부모 가정(모) - 한부모 가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세 - 6~12세 - 13~17세 - 18~2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의 국적(내국인/외국인) • 부의 국적(내국인/외국인) • 모의 연령(5세 간격) • 부의 연령(5세 간격)

자료: 스웨덴 통계청 홈페이지. www.statistikdatabasen.scb.se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가구를 1개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2개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기타 가구로 가구를 분류한다. 그리고 각 가구에 대해 세부적으로 가족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노르웨이의 경

우 통상 단독가구로 분리되는 유형(1인으로 구성된 가구)을 “가족”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6〉 노르웨이의 가족유형별 가족 분류

가구분류	가족분류	
	1단계	2단계
1개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1인 가족	- 가구주 연령 • 30세 미만 • 30~44세 • 45~66세 • 67세 이상
	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부부	- 최고령자 연령 • 30세 미만 • 30~44세 • 45~66세 • 67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결혼한 부부	- 가장 어린 자녀 연령 • 0~5세
	자녀가 있는 동거하는 부부	• 6~17세 • 18세 이상
	자녀가 있는 한부모	- (부)가장 어린 자녀 연령 • 0~5세 • 6~17세 • 18세 이상 - (모)가장 어린 자녀 연령 • 0~5세 • 6~17세 • 18세 이상
2개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0~17세 동거 자녀가 없이 2개 이상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2개 이상의 1인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0~17세 동거 자녀가 없이 2개 이상 가족으로 구성된 기타 가구	
	자녀(가장 어린 자녀 기준 0~17세)가 있는 2개 이상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기타 가구	-	

자료: Statistics Norway 홈페이지. www.ssb.no

2. 국내 동향: 인구동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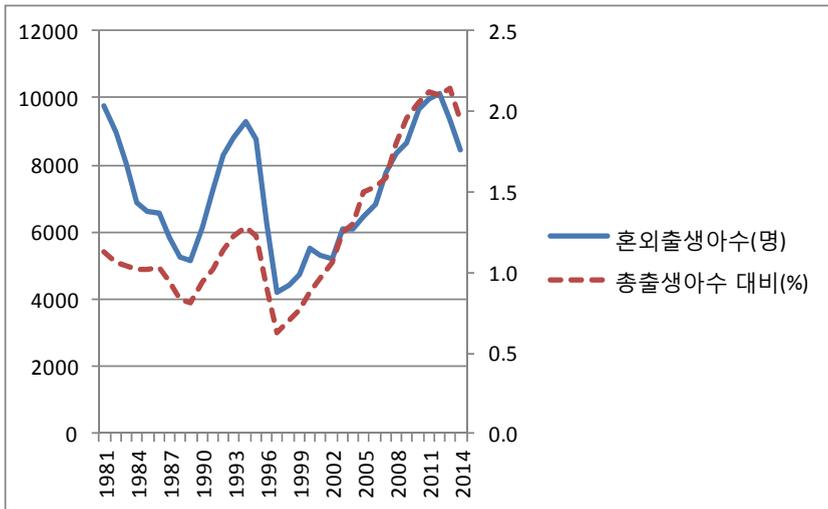
가. 혼외출산(미혼모) 동향

우리나라에서 미혼모 혹은 미혼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된 이유로는 한국사회에서 미혼모 혹은 미혼부의 지위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아직도 사회적 제약이 존재하며, 현실적으로 인구센서스 등 통계조사에서 관련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혼화 등에 따라 신체적 연령과 사회적 연령 간의 차이(socio-bio gap)가 커짐에 따라 미혼모 혹은 미혼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이미 서구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초혼연령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법률혼이 아닌 경우 쉽게 출산을 할 수 없다는 사회적 특징으로 인하여 혼인상태가 미혼을 유지하면서 출산을 하는 미혼모 혹은 미혼부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구로 미혼부/모 가정의 증가 추세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동태 중 출생통계를 이용하여 혼외 출생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혼외출생아수는 롤러코스터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1981년 9,741명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1989년 5,161명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9,272명을 정점으로 3년 후인 1997년에 4,196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3년 9,332건으로 1997년 이후 약 1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이에 따라 혼외 출생아수가 전체 출생아수 중에 차지하는 비율도 롤러코스터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체 출생아수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혼외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에 약 2%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혼외출생아의 비중은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 54.4%, 프랑스 56.7%, 영국 47.6%, 노르웨이 55.2% 등으로 절반 정도는 법률혼 외에서 태어나고 있다(Eurostat, 2015).¹⁹⁾ 한국사회가 단기간에 산업화와 도시화 등을 이룩하면서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였으나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문화적 냉대 등으로 인하여 혼외 출산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1] 혼외 출생아수 및 전체 출생아 중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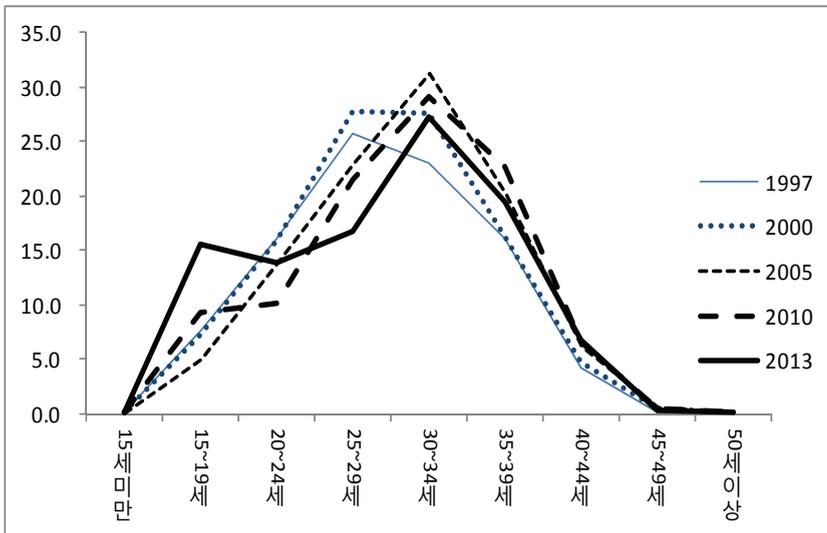


주: 혼외출생아 비율 계산 시 미상은 제외
 자료: 통계청, KOSIS, 출생통계, 2015.10.11.일 반출

19)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2013년 기준, 프랑스와 영국은 2012년도 기준 통계치임.
 (Eurostat, 2015.10.30.일 반출)

미혼모의 연령은 교육, 취업, 자녀양육 능력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혼모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만혼화 추이와 맞물려 미혼모도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1997년만 해도 미혼모의 연령대 중 25~29세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5년과 2013년에는 30~34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한편, 최근에 올수록 15~19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30~34세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만혼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청소년의 성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저연령층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자의 경향은 교육, 취업, 자녀양육 능력 등에 있어서 불리한 여건으로 양육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 미혼모의 연령 분포



주: 연령분포 계산 시에는 연령 미상 제외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 각년도 자료 분석.

〈표 3-7〉 미혼모의 연령 변동 추이

(단위: %, 명)

구분	1997	2000	2005	2010	201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196)	(5,540)	(6,459)	(9,639)	(9,332)
15세미만	0.1	0.1	0.1	0.1	0.2
15~19세	7.6	7.3	5.0	9.3	15.6
20~24세	16.0	15.9	13.7	10.2	13.9
25~29세	25.7	27.7	23.0	21.5	16.7
30~34세	23.0	27.6	31.2	29.2	27.2
35~39세	16.0	16.2	20.3	22.6	19.4
40~44세	4.2	4.7	6.1	6.5	6.7
45~49세	0.2	0.4	0.6	0.4	0.3
50세이상	0.1	0.1	0.0	0.1	0.1

주: 전체에는 연령 미상을 포함하였으며, 연령분포 계산 시에는 연령 미상 제외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 각년도 자료 분석.

미혼모/부가 출생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경제력으로서, 이는 취업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미혼모의 취업 상태는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력의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미혼모 취업 시 자녀의 양육문제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미혼모 중 직업을 가진 비율은 15% 내외에서 최근에 올수록 증가하면서 2013년에는 23.0%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77%는 무업 상태이며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여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취업 미혼모의 직업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사무종사자 및 전문직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과거에는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 올수록 전문가 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8〉 혼외출생아 모의 직업 변동 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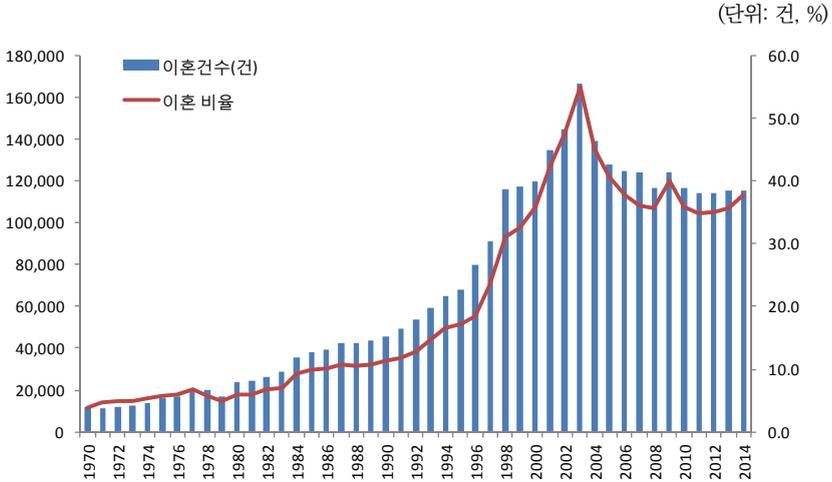
혼외출생아 모의 직업	1997	2000	2005	2010	2013
전체 (명)	100.0 (4,196)	100.0 (5,540)	100.0 (6,459)	100.0 (9,639)	100.0 (9,332)
무업	83.6	85.9	86.0	80.6	77.0
유업	16.4	14.1	14.0	19.4	23.0
의회임원 및 고위관리자	1.4	2.3	0.6	4.6	4.7
전문가	9.1	11.0	10.2	25.1	25.6
기술공 및 준전문가	6.7	7.6	6.9	-	-
사무종사자	20.2	22.8	28.5	35.3	28.5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46.2	40.5	43.2	29.3	32.9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9.5	6.3	2.9	0.8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1	3.6	2.7	2.3	1.9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 종사자	0.3	0.1	0.3	0.8	0.9
단순노무 종사자	3.4	5.8	4.7	1.8	4.5

주: 전체에는 직업 미상을 포함하였으며, 직업분포 계산 시에는 미상 제외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 각 년도 자료 분석.

나. 이혼 동향

산업화와 현대화, 가치관 등의 경향으로서 한국사회에서도 이혼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11만건 이상(한해 결혼건수의 37.8%)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이혼건수 중 일부는 재혼으로 이어지나 다른 일부는 이혼상태 그대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가정의 규모가 누적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3] 이혼건수 및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 비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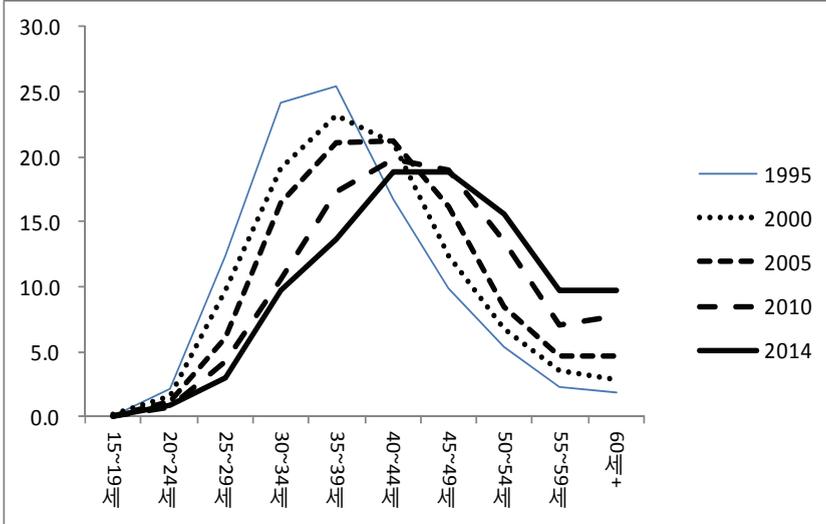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혼인·이혼통계(KOSIS), 2015.10.11. 일 반출

부부의 이혼연령은 자녀의 연령과 연관되어 자녀 양육에 중요한 요소이며, 재혼 시 추가 출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남녀 공히 이혼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우 1995년만 해도 30대에 50%가 집중되었으나 2014년에는 40대와 50대 초반에 점차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1995년에 20대 후반과 30대 초에 집중되어 있다면 2014년에는 30대 후반과 4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이혼 시 자녀들이 존재하고, 이들 자녀의 연령은 중·고등학교 혹은 일부 대학 시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혼여성의 경우 재혼 시 추가 출산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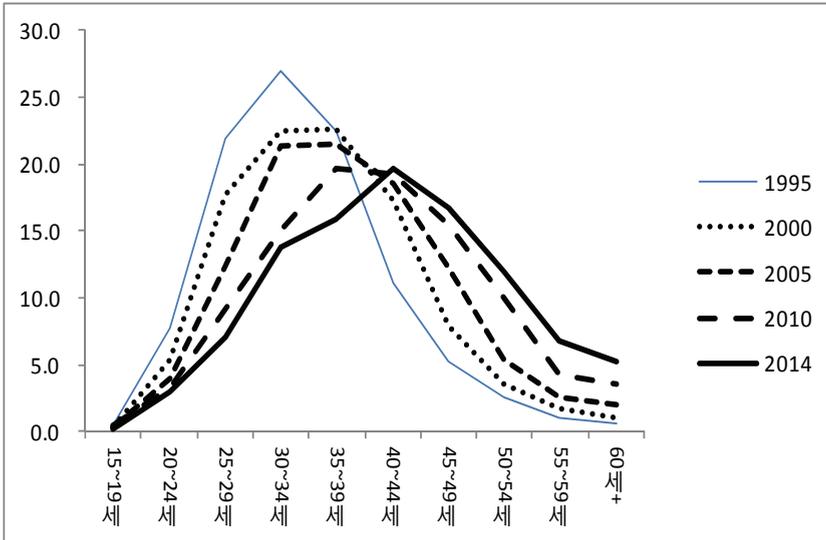
80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그림 3-4] 남성의 이혼 연령 분포



자료: 통계청, 이혼통계, 각 년도 원자료 분석

[그림 3-5] 여성의 이혼 연령 분포



자료: 통계청, 이혼통계, 각 년도 원자료 분석.

〈표 3-9〉 이혼남녀의 연령 분포 변화 추이

(단위: %, 건)

	1995	2000	2005	2010	2014
이혼건수	68,279	119,455	128,035	116,858	115,510
부 기준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세	0.0	0.1	0.0	0.0	0.0
20~24세	2.1	1.6	1.2	0.7	0.8
25~29세	12.4	9.7	6.0	4.2	3.0
30~34세	24.1	19.1	16.5	10.6	9.7
35~39세	25.4	23.1	21.1	17.3	13.7
40~44세	16.7	21.1	21.2	19.8	18.8
45~49세	9.9	12.4	16.1	18.9	18.8
50~54세	5.3	6.8	8.5	13.5	15.6
55~59세	2.3	3.5	4.7	7.1	9.7
60세+	1.9	2.8	4.6	7.7	9.7
모 기준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세	0.4	0.3	0.3	0.4	0.2
20~24세	7.8	5.4	3.9	3.2	3.0
25~29세	21.9	17.7	12.3	9.1	7.1
30~34세	27.0	22.5	21.3	15.1	13.8
35~39세	22.5	22.6	21.5	19.6	15.9
40~44세	11.1	17.3	18.5	19.2	19.6
45~49세	5.2	7.9	12.2	15.5	16.7
50~54세	2.5	3.5	5.4	10.0	11.9
55~59세	1.0	1.7	2.6	4.3	6.7
60세+	0.6	1.0	2.0	3.5	5.2

자료: 통계청, 이혼통계. 각 년도 원자료 분석.

이혼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수는 0명이 증가하고 1명 이상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 2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이혼부부의 비율은 28.6%로 낮았으나 2014년에는 50.4%로 빠르게 높아졌다. 저출산의 영향도 존재하나 이혼부부의 고연령화에 따라 20세 미만의 자녀도 빠르게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표 3-10〉 이혼부부의 20세 미만 자녀수 분포 변화 추이

(단위: %, 건)

20세 미만 자녀수	1995	2000	2005	2010	2014
전체 (건)	100.0 (68,279)	100.0 (119,455)	100.0 (128,035)	100.0 (116,858)	100.0 (115,510)
0명	28.6	28.4	35.9	46.0	50.4
1명	32.9	32.3	27.6	25.7	26.0
2명	32.9	34.8	31.8	24.3	20.3
3명 이상	5.5	4.4	4.7	4.0	3.4

주: 전체에는 미상을 포함하였으며, 분포 계산 시에는 미상 제외.
자료: 통계청, 이혼통계, 각 년도 원자료 분석.

이혼 시 자녀는 남편 혹은 부인이 양육을 맡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혼 부부의 취업은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소득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혼 당시 부의 취업률은 최근에 올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세 미만의 자녀수가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에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작은 경향이 있다. 이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세 미만 자녀가 없는 이혼부의 경우 고연령으로 이미 은퇴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력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이혼을 꺼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혼 당시 부인의 취업 패턴은 그 수준만 낮을 뿐 남편의 취업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3-11〉 이혼부부의 20세 미만 자녀수별 취업률 변화 추이

(단위: %)

	1995	2000	2005	2010
전체 남편	77.2	75.3	76.7	82.2
0명	73.2	70.1	71.8	77.3
1명	78.2	77.2	79.6	86.4
2명	79.5	79.1	82.2	88.2
3명 이상	78.2	77.6	80.5	86.3
전체 부인	23.7	31.7	39.1	51.7
0명	21.1	26.5	31.9	45.3
1명	25.5	35.5	45.3	58.3
2명	24.2	34.3	45.4	58.9
3명 이상	22.9	31.2	40.9	50.7

자료: 통계청, 이혼통계. 각 년도 원자료 분석.

다. 재혼 동향

재혼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남성 초혼-여성 재혼’, ‘남성 재혼-여성 초혼’, ‘남성 재혼-여성 재혼’이다. 재혼 건수는 1990년 42,663건에서 2005년 79,447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감소하여 2014년 기준으로 65,91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감소세는 가임기 인구의 감소에 더해 전체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발생한 전체 혼인 건수 중 재혼의 비율이 1990년 10.7%에서 2014년 21.6%로 증가하였음을 볼 때, 전반적으로 재혼 경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사회에서도 재혼 가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인구센서

스의 경우 혼인상태로서 재혼 여부를 질문하지 않고 있어 재혼가정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혼가정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는데, 표본조사들의 경우에도 유효표본수가 아주 적어 대표성이 낮다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표 3-12〉 혼인형태별 건수 및 비율 변동 추이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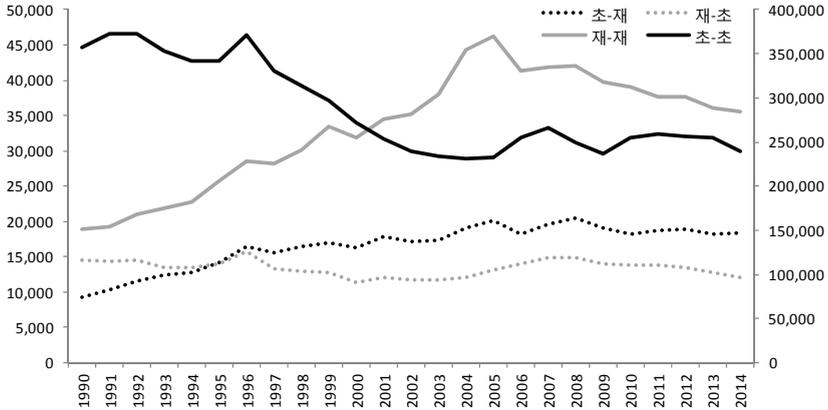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초-초	356,649	341,634	271,843	232,048	254,630	239,427
초-재	9,315	14,099	16,219	20,079	18,275	18,424
재-초	14,510	14,086	11,447	13,061	13,873	12,020
재-재	18,838	25,682	31,863	46,307	39,125	35,471
(재혼 계)	(42,663)	(53,867)	(59,529)	(79,447)	(71,273)	(65,915)
전체	399,312	395,501	331,372	311,495	325,903	305,342
구성비						
초-초	89.3	86.4	82.0	74.5	78.1	78.4
초-재	2.3	3.6	4.9	6.4	5.6	6.0
재-초	3.6	3.6	3.5	4.2	4.3	3.9
재-재	4.7	6.5	9.6	14.9	12.0	11.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초-초는 '남성 초혼-여성 초혼', 초-재는 '남성 초혼-여성 재혼', 재-초는 '남성 재혼-여성 초혼', 재-재는 '남성 재혼-여성 재혼'을 각각 의미함.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 각 년도 원자료 분석.

재혼 유형별 추이를 보면, 과거 '남성 초혼-여성 재혼' 건수가 가장 적었으나 1996년부터는 '남성 재혼-여성 초혼' 건수를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녀 모두 재혼인 건수는 2005년까지 아주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다. 최근까지 남녀 모두 재혼인 건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성 초혼-여성 재혼', '남성 재혼-여성 초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재혼 유형별 변동 추이



주: 초-초는 '남성 초혼-여성 초혼', 초-재는 '남성 초혼-여성 재혼', 재-초는 '남성 재혼-여성 초혼', 재-재는 '남성 재혼-여성 재혼'을 각각 의미함.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 2015.10.11.일 반출

추가 출산이나 자녀양육 시기와 관련하여 재혼 당시 여성의 연령을 살펴보면,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1년 기준으로 '남성 초혼-여성 재혼'인 경우, 20대가 49.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44.7%로 높다. 40대 4.5%를 제외하면 이후 연령층에서는 거의 무시할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20대의 비중이 14.2%로 아주 낮고, 그 대신 30대의 비중이 53.4%, 40대의 비중이 26.1%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 재혼-여성 초혼'의 경우 1991년 20대 57.4%, 30대 29.4%, 40대 6.7% 등으로 나타나나, 2014년에는 20대 비중이 30.7%로 줄어들고, 30대는 47.4% 그리고 40대는 14.4%로 높아졌다. '남성 재혼-여성 재혼'의 경우 1991년에 20대 23.2%, 30대 46.3%, 40대 20.4%, 50대 8.9% 등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에는 4.4%, 22.2%, 39.4%, 33.8% 등으로 20대~30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40대~50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연령이 상승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모든 유형의 재혼가정에서 재혼

당시 여성의 연령이 높아졌다는 것은 자녀(들)가 존재하며, 이들 자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릴 것이라는 점에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행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한편,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 여성의 5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이혼-재혼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3-13〉 혼인형태별 건수 및 비율 변동 추이

(단위: %, 천명)

	1991					2014				
	계	초-초	초-재	재-초	재-재	계	초-초	초-재	재-초	재-재
10대	4.3	4.6	0.5	3.8	1.2	1.3	1.4	0.1	2.9	0.1
20대	85.4	90.7	49.5	57.4	23.2	45.0	54.1	14.2	30.7	4.4
30대	8.3	4.5	44.7	29.4	46.3	41.3	42.9	53.4	47.4	22.2
40대	1.4	0.1	4.5	6.7	20.4	7.9	1.5	26.1	14.4	39.4
50대	0.6	0.0	0.8	2.7	8.9	4.6	0.1	6.2	4.7	33.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천명)	(416)	(372)	(10)	(14)	(19)	(305)	(239)	(18)	(12)	(35)

주: 초-초는 '남성 초혼-여성 초혼', 초-재는 '남성 초혼-여성 재혼', 재-초는 '남성 재혼-여성 초혼', 재-재는 '남성 재혼-여성 재혼'을 각각 의미함.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 각 년도 원자료 분석.

제2절 인구센서스 상 가구 구성

1. 가구의 정의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센서스 상 가구구성 분류는 대체적으로 유엔의 정의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에서는 가구의 정의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가구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⁰⁾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2. 가구원 구성

우리나라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구주와의 관계를 적용하여 가구 구성원을 질문하고 있다. 최초의 근대적인 인구센서스로 간주되고 있는 1960년도 센서스 이래 가구 분류는 사회경제현상 변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1960년 센서스만 해도 가구주와의 관계는 매우 단순하게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 단순하게 여부만을 묻고 있으며, 친척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관계보다는 친척 여부를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다. 비혈연의 동거인 여부도 응답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 남성과 여성으로 성을 분리하여 묻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당시 사회에 만연하였던 남아선호사상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1966년 센서스에서는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묻되, 친인척으로서 일부 직계존비속의 방계관계도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구주의 형제자매, 조부모의 형제자매, 삼촌·고모·기타 친척 등이 응답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동거인의 경우에도 그 상태를 다소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6명 이상 고용원을 포함한 집단가구도 일반가구와 함께 질문하고 있다. 자녀 혹은 손자녀의 성을 구분하여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지는 않고 있다.

1970년 센서스와 1975년 센서스에서는 가구주의 자녀와 가구주의 형

20) 통계설명자료 홈페이지 <http://meta.narastat.kr/>

21) 통계설명자료 홈페이지 <http://meta.narastat.kr/>

제자매에 대해 미혼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기혼자녀의 경우 아들만을 구체화하여 질문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배우자 이외에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존해 있는 여성과 그 자녀에 대해서도 각각 질문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1970년 센서스와 1975년 센서스 간 유일한 차이는 1975년 센서스에서 동거인 중 가정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 센서스와 1985년 센서스에서 묻고 있는 가구주와의 관계는 동일하다. 이들 두 센서스에서는 가구주의 경우 과거 조부모에서 증조모까지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과거 부모에서 조부모 및 증조모까지 확대하여 질문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증조부모 대신 증조모만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증조부모의 경우 증조모만이 생존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추측된다. 방계가족으로서 가구주와 그 배우자의 기혼 형제자매의 가족사항에 대해서도 세분화하여 질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그 자녀 및 기타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다. 기혼자녀에 대한 질문항목도 세분화하여 포함하고 있는데, 우선 아들과 딸로 구분하고 각각의 배우자 및 자녀를 질문하고 있다. 이러한 세분화 항목들은 기혼 손자녀는 물론 기타 친척(사돈 포함), 가정부가사 및 영업사용인, 기타동거인까지 적용되고 있다.

1990년 센서스 상 가구주와의 관계 분류는 이전의 1980년 및 1985년 센서스와 유사하다. 다만, 차이는 가구주와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형제자매 그리고 그 배우자 여부도 질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배우자의 기타친척의 배우자, 배우자의 기타친척의 자녀도 질문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1995년 센서스부터는 가구주와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이는 자료처리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1995년 센서스와 2000년 센서스 상 가구주와의 관계는 세대구성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항목으로서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가구주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 증손자녀와 그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와 그 배우자, 기타 친인척, 기타 동거인 등만이 포함되어 있다. 2005년 센서스와 2010년 센서스도 1995~2000년 센서스와 마찬가지로 관계항목이 분류되어 있으며, 유일한 차이는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 3-14〉 센서스 상 가구주와의 관계(가족지위) 분류

1960	1966	1970	1975
가구주	가구주	가구주	가구주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아들	자녀들	미혼자녀	미혼자녀
딸	부모	미혼 형제, 자매	미혼 형제, 자매
손자, 손녀	조부모	부모	부모
부모	조부모의 형제, 자매	조부모	조부모
조부모	가구주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매
친척	삼촌, 고모, 기타 친척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동거인	하숙인, 가정부, 고용인 (6명 미만) 1인가구 (하숙인, 호텔 거주자) 집단가구 (양로원, 교아원, 수도원) 집단가구(양로원, 교아원, 수도원)의 구성원 집단가구(6명이상 고용원을 포함) 집단가구(6명이상 고용원을 포함)의 구성원	기혼 아들 기타 친척 하숙생, 가정부(식모), 고용인 1인가구의 가구주 가구주의 처 이외에 결혼해서 생존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인(20) 20의 자녀 제 3의 경우 30의 자녀	기혼아들(가구주의 며느리 및 손자녀 포함) 기타 친척 동거인, 가사 및 영업사원 가정부(식모) 1인의 단독가구주 가구주의 처 이외에 결혼해서 생존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인(20) 20의 자녀 제3의 경우(30) 30의 자녀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90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1980	1985
가구주	가구주
배우자	배우자
미혼자녀	미혼자녀
미혼 형제, 자매	미혼 형제, 자매
부모	부모
조부모	조부모
증조모	증조모
배우자의 형제, 매	배우자의 형제, 매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이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증조모	배우자의 증조모
배우자의 기혼형제, 자매	배우자의 기혼형제, 자매
배우자의 기혼형제, 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기혼형제, 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기혼형제, 자매의 자녀	배우자의 기혼형제, 자매의 자녀
배우자의 기타친척	배우자의 기타친척
기혼아들 및 기혼딸	기혼아들 및 기혼딸
기혼아들 및 기혼딸의 배우자	기혼아들 및 기혼딸의 배우자
기혼아들 및 기혼딸의 자녀	기혼아들 및 기혼딸의 자녀
기혼 형제자매	기혼 형제자매
기혼 형제자매의 배우자	기혼 형제자매의 배우자
기혼 형제자매의 자녀	기혼 형제자매의 자녀
기혼 손자, 손녀	기혼 손자, 손녀
기혼 손자, 손녀의 배우자	기혼 손자, 손녀의 배우자
기혼 손자, 손녀의 자녀	기혼 손자, 손녀의 자녀
기타 친척(사돈)	기타 친척(사돈)
기타 친척(사돈)의 배우자	기타 친척(사돈)의 배우자
기타 친척(사돈)의 자녀	기타 친척(사돈)의 자녀
가정부, 가사 및 영업사용인	가정부, 가사 및 영업사용인
가정부, 가사 및 영업사용인의 배우자	가정부, 가사 및 영업사용인의 배우자
가정부, 가사 및 영업사용인의 자녀	가정부, 가사 및 영업사용인의 자녀
기타동거인(기숙사, 특수사회시설)	기타동거인(기숙사, 특수사회시설)
기타동거인(기숙사, 특수사회시설)의 배우자	기타동거인(기숙사, 특수사회시설)의 배우자
기타동거인(기숙사, 특수사회시설)의 자녀	기타동거인(기숙사, 특수사회시설)의 자녀
단독가구	단독가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1990	1995
가구주	가구주
배우자	가구주의 배우자
미혼자녀	자녀
미혼 형제, 자매	자녀의 배우자
부모	가구주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증조모	손자녀, 그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증손자녀, 그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형제, 매	형제자매, 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배우자의 조부모	기타 친인척
배우자의 증조모	기타 동거인
배우자의 기혼형제, 자매	
배우자의 기혼형제, 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기혼형제, 자매의 자녀	
배우자의 기타친척	
배우자의 기타친척의 배우자	
배우자의 기타친척의 자녀	
기혼아들 및 기혼딸	
기혼아들 및 기혼딸의 배우자	
기혼아들 및 기혼딸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	
기혼형제자매	
기혼형제자매의 배우자	
기혼형제자매의 자녀	
기혼 손자, 손녀	
기혼 손자, 손녀의 배우자	
기혼 손자, 손녀의 자녀	
기타 친척(사돈)	
기타 친척(사돈)의 배우자	
기타 친척(사돈)의 자녀	
가정부, 가사 및 영업사용인	
가정부, 가사 및 영업사용인의 배우자	
가정부, 가사 및 영업사용인의 자녀	
기타동거인(기숙사, 특수사회시설)	
기타동거인(기숙사, 특수사회시설)의 배우자	
기타동거인(기숙사, 특수사회시설)의 자녀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2000	2005	2010
가구주	가구주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	자녀	자녀
자녀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가구주의 부모	가구주의 부모	가구주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그 배우자	조부모	손자녀, 그 배우자
증손자녀, 그 배우자	손자녀, 그 배우자	증손자녀, 그 배우자
조부모	증손자녀, 그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 그 배우자	형제자매, 그 배우자	형제자매, 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기타 친인척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기타 동거인	기타 친인척	기타 친인척
	기타 동거인	그 외 같이 사는 사람 (고용인, 하숙인 등)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3. 가구의 분류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한 가구 분류에 관한 통계는 1970년부터 제공하고 있다.²²⁾ 1970년의 가구 분류는 초기 단계로 매우 간단하게 집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세대수별 가구(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상, 단독가구, 비혈연가구)를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1세대 가구 중에서는 부부가구, 2세대 가구 중에서는 부부+자녀, 한부모+자녀, 부부+양친, 부부+한부모,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그리고 3세대가구에서는 부부+자녀+양친, 부부+자녀+한부모를 세분화하여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1975년도 센서스, 1980년도 센서스, 1985년 센서스 그리고 1990년도 센서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2) 195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가구 결과에는 “본국인 보통가구, 본국인 준가구, 외국인 가구”로만 분류되어 있으며, 1960년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상으로 간략하게 분류하고 있다.

1995년도 센서스 상 가구구성 분류체계는 1970~1990년 기간의 센서스들과 동일한데, 다만 차이점으로는 2세대 가구 중 한부모+자녀를 부+자녀와 모+자녀로 한부모의 성별 분리를 적용하였으며, 조손가정(조부모+손자녀)을 별도로 세분화하여 집계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결손가정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원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0년도 센서스와 2005년도 센서스는 동일한 가구구성 분류체계를 적용하였는데, 이전 센서스와의 차이점으로는 1세대 가구를 세분화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부부+형제자매, 부부+기타 친인척, 가구주+형제자매, 가구주+기타 친인척 등을 추가하여 집계하였다.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등에 따라 가족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인구 및 사회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짐작된다.

2010년도 센서스에서 가구구성 분류는 일부 분류에서 성별 분화를 시도하였고, 동시에 혼인상태를 본격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자녀와 손자녀 및 형제자매가 포함된 가구구성에서는 예외 없이 혼인상태를 조건으로 부여하여 미혼인 경우만 집계하고 있다. 이는 가족핵의 단위로 '부모+미혼자녀', '부+미혼자녀' 및 '모+미혼자녀'의 원리를 충실하게 적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2세대 가구 중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 가구와 조부 가구 혹은 조모 가구를 분리하였으며, 3세대 가구 중 부부+미혼자녀+한부모의 경우 부모의 성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조부모+미혼손자녀'와 '조부 혹은 조모+미혼손자녀'로 그리고 '부부+미혼자녀+부친'과 '부부+미혼자녀+모친'으로 각각 세분화하였다.

이상의 분류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인구센서스 상 가구구성 분류는 UN의 기준에 의거하여 가족핵(family nucleus)을 부부, 부부+미혼자녀 그리고 한부모+미혼자녀로 구분하고, 이러한 가족핵과 가구주와의

94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관계를 기준으로 가구구성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UN의 분류기준과는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동성 부부에 대한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UN에서는 동성부부도 결혼부부로 간주). 둘째, 유엔(UN)의 가족 핵의 수와 2개 이상 가족 핵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분류기준 대신, 가구주를 중심으로 한 세대 (generation) 간의 관계 즉, 혈연관계에 의한 확대가구를 고려하고 있다. 환언하면, 1개 가족핵과 다른 동거인들의 관계 여부, 상호 관계가 있는 2개 이상 가족핵과 기타 동거인의 관계, 상호 관계가 없는 2개 이상 가족핵과 동거인들의 관계 여부 등을 고려한 복합가구에 대한 분류는 하지 않고 있다. 셋째, 가구주와의 관계는 혼인과 혈연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입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표 3-15〉 인구센서스 상 가구구성(가구유형)

구분	인구센서스 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가구 구성 분류	〈1세대가구〉	〈1세대가구〉	〈1세대가구〉	〈1세대가구〉
	부부	부부	부부	부부
	기타	기타	부부+형제자매	부부+미혼형제자매
			부부+기타 친인척	부부+기타친인척
			가구주+형제자매	가구주+미혼형제자매
			가구주+기타친인척	가구주+기타친인척
	기타	기타	기타	기타
	〈2세대가구〉	〈2세대가구〉	〈2세대가구〉	〈2세대가구〉
	부부+자녀	부부+자녀	부부+자녀	부부+미혼자녀
	한부모+자녀	부+자녀	부+자녀	부+미혼자녀
	부부+양친	모+자녀	모+자녀	모+미혼자녀
	부부+한부모	부부+양친	부부+양친	부부+양친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부부+한부모	부부+한부모	부부+한부모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부부+미혼자녀+ 부부미혼형제자매
		조부모+손자녀	조부모+손자녀	조부모+미혼손자녀
기타	기타	기타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구분	인구센서스 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가구 구성 분류	<3세대가구>	<3세대가구>	<3세대가구>	<3세대가구>
	부부+자녀+양친	부부+자녀+양친	부부+자녀+양친	부부+미혼자녀+양친
	부부+자녀+한부모	부부+자녀+한부모	부부+자녀+한부모	부부+미혼자녀+부친
	기타	기타	기타	부부+미혼자녀+모친
	<4세대 이상 가구>	<4세대 이상 가구>	<4세대 이상 가구>	<4세대 이상 가구>
	단독가구	1인가구	1인가구	1인가구
	비혈연가구	비혈연가구	비혈연가구	비친족가구

주: 195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가구 결과에는 “본국인 보통가구, 본국인 준가구, 외국인 가구”로, 1960년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상으로 간략하게 분류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동시에 기존의 인구마저 아주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지역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위치한 농촌지역(면의 리에 소재한 촌락)에서 가구형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²³⁾

이 지역에서는 이혼향도 현상의 장기간 진행으로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결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의 형성(formation)이 거의 중지되었다. 고령화 추세와 남녀 간 평균수명의 차이로 인하여 여성노인 홀로 사는 이른바 여성노인단독가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노인단독가구의 여성노인 각자는 독립적인 주거단위로서 주택을 점하고 있으나, ‘잠’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상생활(예를 들어, 취사, 여가 등)은 경로당(노인회관) 등을 중심으로 공동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전통적인 관행으로 각자 주택을 보유한 채 단독가구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이들 노인은 집단화하여 공동생활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새

23) 사례지역은 남원시 산내면 장흥리 000 부락으로 노인부부 4가구, 자녀+손자녀 2가구, 여성노인 단독가구 3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로운 가족들이 거의 형성되지 못하여 과거 혈연중심의 집성촌 형태가 무너지고 있다. 과거에는 마을의 공동생활체가 혈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홀로 남은 비혈연관계의 노인들이 공동장소에 모여 부분적으로 거주를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 조사의 결과가 제시해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로 노인단독가구는 성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홀로 사는 노인들 간의 공동생활 집단화를 새로운 유형의 비혈연(비친족) 가구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제3절 우리나라 가구 재구조화

앞서 국내 및 국외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가구구성 분류는 획일적이거나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구구성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현상과 더불어 사회·경제현상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외 가구구성 분류가 변화하는 양상은 몇몇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가구구성이 성별로 분리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부모+자녀’ 등에서 한부모를 부(남성)와 모(여성)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가구구성이 혼인상태별로 분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자녀’에서 자녀가 미성년 자녀로 특정되었다. 과거에는 부모와 미혼자녀 또는 기혼자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 보편적이었으나, 점차 도시화와 산업화 등에 따라 핵가족화가 빠르게 촉진되면서 기혼자녀가 출가하여 부모로부터 거주공간을 분리하게 됨에 따라 자녀의 혼인상태를 특화하여 분류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경향으로 부부의 경우에도 법률혼 여부에 따라 동거를 분리하고 있으며, 미혼상태로서의 부

혹은 모의 지위도 부여하고 있다.

셋째, 가구구성이 혼인과 혈연 중심에서 비혈연관계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법률적인 관계 중심에서 실제 혈연관계(생물학적 관계)를 구분하고 있다.

넷째, 가구구성 분류에서 연령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섯째, 경제활동상태를 가구구성의 분류기준으로 중시하고 있다.

여섯째, 가구주를 포함한 가족핵 중심에서 다른 가족핵들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일곱째, 가구 구성원으로서 자녀의 연령과 혼인상태를 조건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 수도 가구구성의 분류기준이 되고 있다.

여덟째,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가구 구성원들을 한 가구(가족)로 묶은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예로, 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가족(transnational families)'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하여 가구구성의 분류기준을 1차적 기준, 2차적 기준 및 3차적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가구구성 분류체계에 기반을 두되,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예측하기 위하여 생물학적(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1차적 가구구성 분류기준은 생물학적 속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2차적 가구구성 분류기준은 사회적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3차적 가구구성 분류기준은 공간적 혹은 지리적 속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1차적 가구구성 분류기준은 생물학적(인구학적) 관계로 혈연관계(친자, 친부모, 친인척), 자녀 수, 성(sex), 연령 등을 그 요소로 한다. 혈연관계는 출생에 의거한 관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분류체계에서는 출생과 입양이 구분되지 않고 단순하게 '자녀'로만 구분하고 있다. 보다 정

밀한 자료 구축 등을 위해서는 ‘자녀’를 출생 혹은 입양에 따라 세분할 필요가 있다.²⁴⁾ 출생자녀의 경우 친자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친자는 친모 혹은 친부와도 연계된다. 이혼 등에 따른 재혼가정이 증가하면서 동일한 가구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누구의 출생자녀인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동일 가구 내에서 ‘친자’, ‘친부’, ‘친모’로 세분화하여 가구통계를 적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모와 부는 모두 친부모가 아닐 수 있으며, 둘 중 한명만 친부 또는 친모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자녀의 수도 가구분류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출산율이 2명 미만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동거하고 있는 자녀의 수로 1명, 2명, 3명 이상으로 제한하는 분류도 고려될 수 있다. 이는 비단 출산력 측정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녀 부양 부담, 가족복지 등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성(sex)은 국내외 가구구성 분류체계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점차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가구주의 성은 물론 부모 중 한 사람만이 동일 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성을 구분하고 있다(부 혹은 모, 조부 혹은 조모 등). 특히, 노인1인가구를 포함한 1인가구의 가구주의 성은 사회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자녀의 성 구조가 과거에는 매우 중요한 가구구성의 분류에 포함되어 있으나 남아선호사상의 퇴색과 더불어 최근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연령도 가구분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는 주로 인구고령화와 연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경우 1명 혹은 부부 및 집단으로 거주하는 형태의 가구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 동일 가구 내에서 동거하는 자녀의 경우에도 혼인상태와 더불어 연

24) 입양에 대해서는 사회학적 분류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령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자녀의 독립성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 동거 자녀의 연령을 25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데, 아마 25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와 동등한 가구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의 분류로서 부모 혹은 조부모와 동거하는 ‘자녀’ 혹은 ‘손자녀’의 기준으로 미혼상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일정한 연령 기준(서구와 같이 25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는 만혼 현상이 심화되면서 부모와 오랫동안 동거하는 자녀세대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인구학적, 사회학 및 경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2차적 가구구성 분류기준은 사회경제적 관계로서 혼인상태와 입양 및 경제활동 등을 그 요소로 한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간의 관계로 일반적으로 미혼(never married), 유배우(currently married), 사별(widowed) 및 이혼(divorced)으로 구분된다. 입양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혈연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현행 가구구성 분류체계에서 혼인상태가 ‘배우자 있음’에 해당될 경우 ‘부부’로서 가구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법률적 부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동거의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고려하여 가구지위로 ‘부부’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인구센서스에서는 사실혼에 입각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 법률적인 부부관계와 구별하여 동거부부 가구에 관한 자료가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구성 분류체계 중 한부모(‘부’ 또는 ‘모’)는 해당 가구 내에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모나 부가 홀로 사는 경우를 설정하여 가구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부는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 가구가 분리된

다. 해혼(dissolution)이 아니더라도 직장 등의 이유로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그 가구는 단독가구나 부+자녀, 모+자녀 가구로 분류되고 있다. 미혼모 혹은 미혼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혼인상태가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기혼인 모나 부와 동일하게 ‘모+자녀’ 혹은 ‘부+자녀’로 분류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서구사회에서 동거와 미혼모 혹은 미혼부가 빠르게 증가하여 왔고, 이혼가정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현대 가족의 변화의 흐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혼은 물론 최근 동거와 미혼모/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논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가구구성 분류체계로는 실제 혼인상태에 따른 가구구성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로 단독가구로 분류되거나 한부모 가구로 분류되는 가구의 가구주의 혼인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이와 같은 가구 구성이 혼인상태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이유 등에서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가구 자체를 단순히 주거 공간의 개념에 한정하지 않고, 가구 이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가구의 경제적 혹은 정서적 특성을 직·간접적으로 이해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 가구 내 모 혹은 부의 혼인상태를 미혼, 유배우, 이혼 및 사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한다. 혼인상태가 미혼인 모 혹은 부는 미혼모 혹은 미혼부로 규정하고, 유배우인 모와 부는 실제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직장 등의 이유로 주거공간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사별 또는 이혼인 모 혹은 부는 이른바 사회복지학에서 일컫는 한부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부부의 혼인횟수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의 동향으로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구체적으로 부부가 일방 혹은 쌍방이 재혼 후

결합인 경우 출산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양육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결혼횟수에 의한 가족 분류로는 남편-부인의 혼인횟수에 따라 초혼-초혼 가족, 초혼-재혼 가족, 재혼-초혼 가족, 재혼-재혼 가족으로 구분된다.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반드시 출생이라는 혈연관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입양을 통해서도 형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한 자녀에 대해 현행 우리나라 가구구성 분류체계에서는 '자녀'로만 분류함으로써 별도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가문계승의 명분으로 혈연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실제 통계조사에서도 고려되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 입양 여부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 것이 관례화되어 왔다. 그러나 불임이 증가하는 영향으로 그리고 아동복지 차원에서 국내입양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다가, 입양형태도 점차 비밀입양(secret adoption)에서 공개입양(open adoption)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사회 변화를 감안할 때, 가구구성 분류체계에서도 '자녀'에 대해 친자녀와 입양자녀로 구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경제활동 여부는 해당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원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하는데 그리고 자녀와 노부모 돌봄과 관련하여 주 돌봄자의 여부 등을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부 외국 국가들의 경우 부와 모의 경제활동참가 여부를 가구 분류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가구주의 경제활동 여부, 미성년자나 노부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부의 경제활동(맞벌이) 여부, 가구원들 모두 노인들이거나 미혼자인 경우 적어도 한명이라도 경제활동 참여 여부 등을 가구분류 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

3차적 가구구성 분류기준은 가구구성에 있어서 공간적 혹은 지리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기준은 가구구성원들이나 가구들이 공간적 혹은 지리적 요소를 기반으로 상호 관계가 형성되는 가구 혹은 유사가구(공동생활 등)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1차적 기준(생물학적 요소)이나 2차적 기준(사회학적 요소)에 의거한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비혈연'으로 가구지위를 부여)이 가구나 시설 등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거나 공동생활을 하는 이른바 비혈연가구는 이미 기존의 가구구성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비혈연가구의 구성원들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전제하에 중요한 특징에 따른 세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비혈연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 부재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 목적에서 한계로 작동할 것이다. 요컨대, 비혈연가구의 특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 즉, 가구주나 가구구성원에 대해 일부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분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혈연가구에 관한 논의를 1인가구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는 가구구성원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가구주의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비혈연가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비혈연가구나 1인가구와 결합할 생물학적 요소로는 성과 연령이 중요하며, 사회적 요소로는 혼인상태가 중요하다 하겠다. 비혈연가구의 경우 규모도 매우 중요한 분류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비혈연 가구원의 규모가 집단화되어 가는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주택(혹은 거처)의 면적, 후생 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센서스에서는 비혈연가구를 6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규모 파악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6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가구가 아닌 시설조사구로 구분하여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거리적 요소에 의거한 가구분류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외국에서 이주하여 한국 내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990년대 중반부터 결혼이주 여성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다문화가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노동시장의 미스매칭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전자의 결혼을 매개로 형성된 가구(가족)의 경우는 앞서의 생물학적 요소(인구학적 요소)나 사회적 요소(혼인상태)에 의거하여 특정 가구형태로 분류될 것이다. 그러나 가구구성원 전체 혹은 일부가 외국 출신(원 국적이 외국인)인 가구를 별도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든 정책적으로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가구 구성원 중 일부만이 외국 출신인 경우, 이들과 내국인 간의 관계(혼인상태, 가족관계 등)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 유학 등으로 한 가족이 국경을 넘어 2개의 가구를 형성하는 기러기가족 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남성이 한국에서 혼자 거주하게 되면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1인 가구로 분류되는데, 남성 1인가구와 자녀 유학 등으로 혼자 거주하는 가구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노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다른 가구를 형성하여 살고 있으나 지리적이나 공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 올수록 1세대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3세대 이상의 가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주거 공간 측면에서 빠르게 분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노인부양, 자녀돌봄 등을 이유로 자녀-부모 간의 끈끈한 관계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세대간 독립적인 가구를 각각 형성하고 있으나 노부모 부

양이나 자녀돌봄 등을 이유로 위-아래층, 옆집, 이웃 또는 인접한 위치에 거주하는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가구들은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단독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내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히 농촌에서 노인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생활단위가 등장하고 있다. 예로 노인1인가구 각각 각자의 독립적인 집은 있으나 생활 대부분을 일정한 공간(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 공동화가 가속되면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형태의 가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센서스 상 별도의 항목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가구의 변화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가구구성의 분류체계를 <표 3-16>과 같이 재구조화하였다.

<표 3-16> 가구 재구조화(유형)

기존 가구구성	생물학적(인구학적) 요소			사회경제적 요소		공간적 요소
	성	연령	자녀	혼인상태	경제활동	국적
1세대 가구						
부부		노인여부	자녀 유무	부부 혼인횟수	맞벌이 여부	외국적 여부 (이하 공통)
부부+미혼형제자매		노인여부	자녀 유무	부부 혼인횟수	맞벌이 여부	
부부+기타친인척		노인여부	자녀 유무	부부 혼인횟수	맞벌이 여부	
가구주+미혼형제자매		모두 노인여부		모두미혼 여부	취업여부	거주지
가구주+기타 친인척		모두 노인여부		모두미혼 여부	취업여부	
기타		모두 노인여부		모두미혼 여부	취업여부	

기존 가구구성	생물학적(인구학적) 요소			사회경제적 요소		공간적 요소
	성	연령	자녀	혼인상태	경제활동	국적
2세대 가구						
부부+미혼자녀			미혼자녀 25세 미만	부부 혼인횟수	맞벌이 여부	
부+미혼자녀			미혼자녀 25세 미만	부 혼인상태	취업여부	
모+미혼자녀			미혼자녀 25세 미만	모 혼인상태	취업여부	
부부+양친		모두 노인 여부	자녀유무			
부부+한부모		모두 노인 여부	자녀 유무			
부부+미혼자녀+ 부부미혼형제자매			미혼자녀 25세 미만	부부 혼인횟수		
조부모+미혼손자녀			손자녀 (18세 미만)		취업여부	
조부/모+미혼손자녀	남/녀		손자녀 (18세 미만)		취업여부	
기타						
3세대 가구						
부부+미혼자녀+양친/ 부친/모친	-		미혼자녀 25세 미만	부부 혼인횟수		
부+미혼자녀+양친/ 부친/모친	남/녀		미혼자녀 25세 미만	부 혼인상태		
모+미혼자녀+양친/ 부친/모친	남/녀		미혼자녀 25세 미만	모 혼인상태		
기타						
4세대+가구						
1인 가구	남/녀	노인여부	미혼자녀 25세 미만	부모 혼인상태		
비친족 가구		모두 노인여부				



제 4 장

가구구성 변화 추이와 전망

제1절 세대 변동 추이와 전망

제2절 가구 유형별 특성 및 변동 추이



4

가구구성 변화 추이와 전망 <<

제1절 세대 변동 추이와 전망

통계청의 가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세대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선 총 가구수(일반가구)는 1970년 5,576천 가구에서 2010년 17,339천 가구로 약 210%가 증가하였다.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35년에는 22,261천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세대가구와 1인가구는 빠르게 증가하여 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1세대가구는 1970년 376천 가구에서 2010년 3,027천 가구로 증가하였으며, 2035년에는 5,558천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1인가구는 1975년 281천 가구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4,142천 가구로 증가하였으며, 2035년에는 7,628천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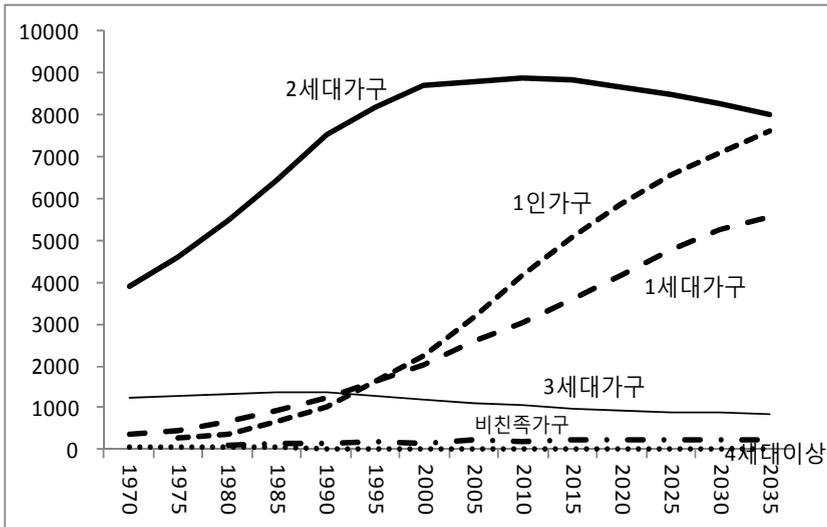
이들 세대와 달리 3세대가구와 4세대 이상 가구는 계속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3세대가구는 1970년 1,230천 가구에서 2010년 1,063천 가구로 감소(-13.6%)하였으며, 2035년에는 851천 가구로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4세대 이상 가구는 1970년 64천 가구에서 2010년 13천 가구로 감소(-80.0%)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세가 향후에도 지속되어 2035년에는 4천 가구에 불과할 전망이다.

2세대 가구와 비친족가구의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세대가구의 경우 1970년 3,906천 가구에서 2010년 8,892천 가구로 증가(약 127%)하였고, 2011년 9,910천

가구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5년에는 7,994천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비친족가구는 1980년 117천 가구에서 2010년 202천 가구로 증가(72.9%)하였으며, 2023년 241천 가구를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4-1] 세대별 가구의 변동 추이와 전망

(단위: 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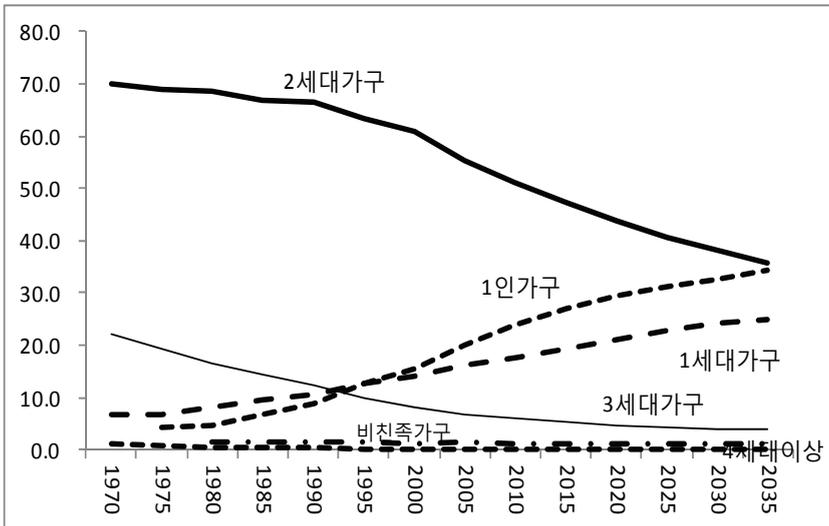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1). 장래가구전망.

세대별 가구들이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세대가구는 1970년 전체 가구 중 6.8%에 불과하였으나 40년이 지난 2010년에는 급격하게 17.5%로 높아졌으며, 2035년에는 25.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1인가구의 비중도 1975년 4.2%에서 2010년 23.9%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증가세가 향후에도 지속되어 2035년에는 34.3%에 육박할 전망이다. 2세대가구는 지난 40년 동안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들 가구가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70.0%에서 51.3%로 오히려 낮아졌으며, 향후 가구규모도 감소세로 전환하여 그 비중은 2035년에 35.9%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3세대가구의 비중은 1970년 22.1%에서 2010년 6.1%로 낮아졌으며, 2035년에는 3.8%에 불과할 전망이다. 4세대 이상 가구는 1970년 1.1%에서 2010년 0.1%까지 낮아졌으며, 2035년에는 0.0%로 거의 무시할 수준이 될 전망이다. 비친족가구의 비중은 1980년 1.5%에서 2010년 1.2%로 낮아졌으며, 2035년에는 1.0%로 아주 낮을 전망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1인가구와 1세대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41.4%로 2세대가구(51.3%)에 점차적으로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가구들의 비중은 2035년에는 59.3%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그림 4-2] 세대별 구성비의 변동 추이와 전망

(단위: 천 가구)



자료: 통계청(2011). 장래가구전망.

112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표 4-1〉 세대 유형별 가구 변동 추이와 전망

(단위: 천 가구, %)

구분	세대 유형						
	총계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이상 가구	1인가구	비친족가구
가구수(1,000)							
1970	5,576	376	3,906	1,230	64	na	na
1975	6,648	447	4,580	1,278	62	281	na
1980	7,969	658	5,457	1,312	42	383	117
1985	9,571	916	6,412	1,383	40	661	160
1990	11,355	1,220	7,529	1,383	35	1,021	166
1995	12,958	1,640	8,200	1,266	26	1,642	183
2000	14,312	2,034	8,696	1,176	22	2,224	159
2005	15,887	2,575	8,807	1,093	16	3,171	226
2010	17,339	3,027	8,892	1,063	13	4,142	202
2015	18,705	3,583	8,834	992	10	5,061	225
2020	19,878	4,155	8,670	931	8	5,877	237
2025	20,937	4,753	8,485	891	7	6,561	241
2030	21,717	5,256	8,262	869	6	7,091	232
2035	22,261	5,558	7,994	851	4	7,628	225
증가율							
1970~2010	210.9	704.2	127.7	-13.6	-80.0	1474.0	72.9
2010~2035	28.4	83.6	-10.1	-19.9	-65.1	84.2	11.1
1970~2035	299.2	1376.5	104.7	-30.9	-93.0	2614.5	92.1
구성비(%)							
1970	100.0	6.8	70.0	22.1	1.1	na	na
1975	100.0	6.7	68.9	19.2	0.9	4.2	na
1980	100.0	8.3	68.5	16.5	0.5	4.8	1.5
1985	100.0	9.6	67.0	14.4	0.4	6.9	1.7
1990	100.0	10.7	66.3	12.2	0.3	9.0	1.5
1995	100.0	12.7	63.3	9.8	0.2	12.7	1.4
2000	100.0	14.2	60.8	8.2	0.2	15.5	1.1
2005	100.0	16.2	55.4	6.9	0.1	20.0	1.4
2010	100.0	17.5	51.3	6.1	0.1	23.9	1.2
2015	100.0	19.2	47.2	5.3	0.1	27.1	1.2
2020	100.0	20.9	43.6	4.7	0.0	29.6	1.2
2025	100.0	22.7	40.5	4.3	0.0	31.3	1.1
2030	100.0	24.2	38.0	4.0	0.0	32.7	1.1
2035	100.0	25.0	35.9	3.8	0.0	34.3	1.0

자료: 통계청. KOSIS. 장래가구전망. 2015.10.11. 일 반출

제2절 가구 유형별 특성 및 변동 추이

이 절에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1%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유형별 특성 및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를 재구조화하고, 의미 있는 유형에 대하여 1985~2010년 간 시계열 자료를 통해 가구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 1인 가구

가. 1인 가구의 주요 특성

전체적으로 1인 가구의 성별 분포는 남성 43.1%, 여성 56.9%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2.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50~64세, 30~39세 등으로 고연령층 일수록 많이 나타났다. 고연령층 일수록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만, 40대의 비중은 13.8%로 10대를 제외하면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이들 대부분이 유배우 상태이면서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20대와 30대 1인 가구의 비율이 40대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교육, 직업 등을 이유로 가족을 떠나 홀로 살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남녀 간 비교를 해보면 50세 이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외의 연령층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상대적으로 길어 노년기에 사별 후 홀로 살고 있는 경향이 높고, 이외의 연령층에서 남성들이 교육, 직업 등으로 인하여 1인 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겠다.

〈표 4-2〉 1인 가구의 연령 구성, 2010

(단위: 가구, %)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 이상	합계
계	464	7,106	7,279	6,269	9,419	14,991	45,528
남성	230	3,743	4,679	3,848	4,239	2,870	19,608
여성	235	3,363	2,600	2,421	5,180	12,121	25,920
계	1.0	15.6	16.0	13.8	20.7	32.9	100.0
남성	1.2	19.1	23.9	19.6	21.6	14.6	100.0
여성	0.9	13.0	10.0	9.3	20.0	46.8	100.0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1인 가구의 혼인상태로는 유배우가 13.3%이고, 미혼은 38.8%, 사별 35.4%, 이혼 12.5%로 나타난다. 미혼, 사별 및 이혼의 합이 86.7%이다. 1인가구 중 미혼인 비율은 남녀 공히 저연령층 일수록 높다. 10대는 100%, 20대는 98% 수준으로 나타난다. 30대에서 미혼비율은 남성 84.6%로 여성 78.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40대에서도 미혼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데, 남성의 경우 무려 50.2%이며, 여성의 경우 33.2%로 나타난다. 이후 연령층에서 미혼비율은 급격히 낮아지지만 50~64세에서 남성 18.4%, 여성 9.2% 등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1인 가구 중 사별인 비율은 남녀 공히 고연령층 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홀로 사는 노인인구의 경우 남성 60.0%, 여성 91.8%가 사별이다. 50~64세에서는 남성 11.8%, 여성 48.0%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사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이미 40대부터 사별비율이 7.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1인 가구 중 이혼인 비율은 주로 40대와 50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40대 21.6%, 50~64세 33.1%, 65세 이상 12.0%로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에는 30대 11.5%, 40대 38.6%, 50~64세 25.3% 등

으로 나타난다. 1인 가구 중 유배우인 비율은 남성의 경우 30대 10.8%, 40대 26.7%, 50~64세 36.7%, 65세 이상 24.4% 그리고 여성의 경우 9.5%, 20.7%, 17.5%, 4.2% 등으로 각각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유배우 1인 가구는 주로 직장 등을 이유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미혼 1인가구의 경우 저연령층은 직장과 교육 등을 이유로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미혼 중 중고연령층과 이혼 및 사별은 주로 혼인상태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보면, 1인 가구는 고연령층일수록 압도적으로 혼인상태를 이유로 형성되었으며, 젊은층과 일부 중연령층에서는 직장과 교육 등을 이유로 형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4-3〉 1인 가구의 혼인상태, 2010

(단위: 가구, %)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 이상	전체
남성 (가구)	100.0 (229)	100.0 (3,743)	100.0 (4,679)	100.0 (3,848)	100.0 (4,239)	100.0 (2,870)	100.0 (19,608)
미혼	100.0	98.3	84.6	50.2	18.4	3.7	54.5
유배우	0.0	1.5	10.8	26.7	36.7	24.4	19.6
사별	0.0	0.0	0.2	1.5	11.8	60.0	11.7
이혼	0.0	0.1	4.4	21.6	33.1	12.0	14.2
여성 (가구)	100.0 (235)	100.0 (3,363)	100.0 (2,600)	100.0 (2,421)	100.0 (5,180)	100.0 (12,121)	100.0 (25,920)
미혼	100.0	97.9	78.5	33.2	9.2	1.2	27.0
유배우	0.0	1.7	9.5	20.7	17.5	4.2	8.6
사별	0.0	0.0	0.5	7.6	48.0	91.8	53.3
이혼	0.0	0.4	11.5	38.6	25.3	2.8	11.2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1인 가구의 취업 여부를 보면, 유업율은 남성의 경우 67.5%로 여성(44.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 1인 가구

의 경우 유업비율은 30대 86.6%, 40대 81.0%, 50~64세 68.6%, 20대 59.6%, 65세 이상 31.8%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1인 가구의 경우 30대 78.4%, 40대 72.5%, 20대 65.9%, 50~64세 53.1%, 65세 이상 23.4% 순으로 나타난다. 20세 미만의 경우 유업 비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교육의 이유로 가구가 형성되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미혼비율이 가장 높은 20대와 30대에서 유업 비율도 높게 나타난 것은 직장으로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였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고연령층 1인 가구일수록 유업 비율이 낮다는 것은 이들 집단이 자녀들이나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4〉 1인 가구의 연령별 유업 여부, 2010

(단위: 가구, %)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 이상	합계
남성 (가구)	100.0 (230)	100.0 (3,743)	100.0 (4,679)	100.0 (3,848)	100.0 (4,239)	100.0 (2,870)	100.0 (19,609)
유업	7.8	59.6	86.6	81.0	68.6	31.8	67.5
무업	91.7	40.4	13.4	19.0	31.4	68.2	32.5
여성 (가구)	100.0 (235)	100.0 (3,363)	100.0 (2,600)	100.0 (2,421)	100.0 (5,180)	100.0 (12,121)	100.0 (25,920)
유업	19.1	65.9	78.4	72.5	53.1	23.4	44.9
무업	80.9	34.1	21.6	27.5	46.9	76.6	55.1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남성의 혼인상태별로 유업 비율은 미혼인 경우 70.1%, 유배우인 경우 79.8%, 사별인 경우 36.5%, 이혼인 경우 66.2%로 나타났다. 여성의 혼인상태별로는 미혼 67.3%, 유배우 56.8%, 사별 29.2%, 이혼 56.6%로 나타났다. 사별, 이혼의 경우 고연령층의 비율이 높아 유업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 유업 비율이 미혼에게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유배우인 경

우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배우 남성들이 직업(직장)을 이유로 별도 가구를 형성하여 살고 있는 경향이 강하고, 미혼 여성들이 직장 등을 이유로 별도 가구를 형성하여 살고 있는 경향이 강함을 제시해 준다. 미혼남성의 유업 비율도 유배우 남성보다는 낮으나 70%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직장 등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5〉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취업 여부, 2010

(단위: 가구, %)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남성 (가구)	100.0 (19,608)	100.0 (10,682)	100.0 (3,843)	100.0 (2,292)	100.0 (2,791)
유업	67.5	70.1	79.8	36.5	66.2
무업	32.5	29.9	20.2	63.5	33.8
여성 (가구)	100.0 (25,920)	100.0 (6,991)	100.0 (2,220)	100.0 (13,811)	100.0 (2,898)
유업	44.9	67.3	56.8	29.2	56.6
무업	55.1	32.7	43.2	70.8	43.4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여성 1인 가구 중 기혼인 경우에는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거나, 다른 곳에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유배우 여성의 경우 91.9%, 사별인 여성의 경우 97.6%, 이혼인 경우 89.3%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혼상태로서 홀로 가구를 형성하고 살고 있는 경우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출산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혼으로 인하여 출산 가능성이 줄어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사별인 경우 혼인관계가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출산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평균수명이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대부분 출산을 한 후 고연령층에서 사별상태로 전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유배우인 경우 출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떨어져서 홀로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이유로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이혼인 상태와 비교하여 출산 경험비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생존자녀 유무 비율은 출산 경험 비율에 비해 다소 수준만 낮을 뿐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4-6〉 여성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자녀 유무, 2010

(단위: 가구, %)

	기혼 전체	유배우	사별	이혼
여성 1인 가구	18,929	2,220	13,811	2,898
출산여부	100.0	100.0	100.0	100.0
없음	4.4	8.1	2.4	10.7
있음	95.6	91.9	97.6	89.3
생존자녀	100.0	100.0	100.0	100.0
없음	5.2	8.6	3.3	11.4
있음	94.8	91.4	96.7	88.6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나. 1인 가구 변동 추이

이상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미혼 1인 가구의 경우 저연령층에서는 주로 교육과 직장을 이유로 그리고 유배우 1인 가구의 경우 주로 직장을 이유로 1인 가구를 각각 형성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미혼 1인 가구 중 고연령층과 이혼 및 사별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혼인상태가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남녀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인 가구를 성별 및 혼인상태별로 분류하고, 이 중 미혼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다시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변동 추이를 분석하였다.

1) 성별 및 연령별 1인 가구

전체 1인 가구는 1985~2010년간 7.0배 증가하였다. 남성 1인 가구가 8.4배 증가하여 여성 1인 가구의 6.2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들의 경우 만혼화, 유배우일지라도 자녀의 교육이나 본인의 직업으로 원가족과 독립하여 사는 가구 증가, 이혼 후 단독가구 형성 등의 경향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표 4-7〉 성별 1인 가구 변동 추이

(단위: 가구,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0/'85
1인 가구	6,527	10,720	16,412	22,378	32,501	45,528	7.0
남성	2,346	4,378	6,946	9,191	13,494	19,608	8.4
여성	4,181	6,342	9,466	13,187	19,007	25,920	6.2
1인 가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남성	35.9	40.8	42.3	41.1	41.5	43.1	-
여성	64.1	59.2	57.7	58.9	58.5	56.9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성별 및 연령대별 1인 가구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65세 이상, 50대, 40대 및 30대 순으로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전체 남성 1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난다. 65세 이상의 경우 1985~2010년간 23.0배 증가하였으며, 50~64세의 경우 17.1배, 40대 16.8배, 30대 13.4배 증가하였다. 즉, 고연령층일수록 1인가구의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났다. 반면, 10대와 20대의 경우에 동 기간 동안 1.2배와 3.1배 증가한데 그쳤다.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65세 이상(12.0배 증가), 50~64세(4.3배),

40대(7.5배), 30대(6.3배) 등으로 나타났다. 50~64세의 경우 1985년에 이미 상당히 많은 1인 가구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10대와 20대 여성 1인가구의 증가폭은 1.4배와 3.1배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8〉 성별 및 연령대별 1인 가구 변동 추이

(단위: 가구)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0/'85
1인 가구	6,527	10,720	16,412	22,378	32,501	45,528	7.0
남성	2,346	4,378	6,946	9,191	13,494	19,608	8.4
10대	195	173	219	212	195	229	1.2
20대	1,200	2,134	2,782	2,802	3,255	3,743	3.1
30대	349	941	1,835	2,510	3,705	4,679	13.4
40대	229	425	829	1,560	2,515	3,848	16.8
50~64세	248	458	786	1,353	2,283	4,239	17.1
65세 이상	125	247	495	754	1,541	2,870	23.0
여성	4,181	6,342	9,466	13,187	19,007	25,920	6.2
10대	165	220	203	210	216	235	1.4
20대	1,078	1,434	1,793	2,283	2,850	3,363	3.1
30대	413	740	1,117	1,421	1,930	2,600	6.3
40대	323	507	877	1,430	2,081	2,421	7.5
50~64세	1,191	1,689	2,438	2,922	3,727	5,180	4.3
65세 이상	1,011	1,752	3,038	4,921	8,203	12,121	12.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이와 같이 성별 및 연령대별로 증가속도에 차이가 존재하여 그 구성비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1985년에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1.2%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30대 14.9%, 50~64세 10.6%, 40대 9.8%, 10대 8.3%, 65세 이상 5.3%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30대가 2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64세 21.6%, 40대 19.6%, 20대 19.1%, 65세 이상 14.6%, 10대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1인가구의 경우 1985년에 50~64세 28.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대 25.8%, 65세 이상 24.2%, 30대 9.9%, 40대 7.7%, 10대 3.9%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2010년 기준으로는 65세 이상이 46.8%로 아주 높고, 다음으로 50~64세 20.0%, 20대 13.0%, 30대 10.0%, 40대 9.3%, 10대 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과거 20대에서 교육, 취업 등을 이유로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최근에는 30대에 집중되고 있으며, 자녀 교육 및 지역 간 직장 이동 등으로 인하여 40~50대도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이나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사별 후 홀로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수명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여성노인의 1인 가구 형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대의 취업, 교육 등을 이유로 이동 후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은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다른 연령층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동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9〉 성별 및 연령별 1인 가구 구성비 변동 추이

(단위: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남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대	8.3	4.0	3.2	2.3	1.4	1.2
20대	51.2	48.7	40.1	30.5	24.1	19.1
30대	14.9	21.5	26.4	27.3	27.5	23.9
40대	9.8	9.7	11.9	17.0	18.6	19.6
50~64세	10.6	10.5	11.3	14.7	16.9	21.6
65세 이상	5.3	5.6	7.1	8.2	11.4	14.6
여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대	3.9	3.5	2.1	1.6	1.1	0.9
20대	25.8	22.6	18.9	17.3	15.0	13.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30대	9.9	11.7	11.8	10.8	10.2	10.0
40대	7.7	8.0	9.3	10.8	10.9	9.3
50~64세	28.5	26.6	25.8	22.2	19.6	20.0
65세 이상	24.2	27.6	32.1	37.3	43.2	46.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2) 성별 및 혼인상태별 1인 가구

성별 및 혼인상태별로 1인 가구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다. 남성1인가구의 경우, 1985~2010년 기간 동안 이혼남성1인가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약 31.4배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사별남성1인가구 11.8배, 유배우남성1인가구 8.1배, 미혼1인남성가구 6.7배 순으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증가속도의 차이로 인하여 미혼남성1인가구가 전체 남성1인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67.6%에서 2010년 54.5%로 감소하고, 대신 사별남성1인가구의 비중은 1985년 8.3%에서 2010년 11.7% 그리고 이혼남성1인가구의 비중은 동 기간 3.8%에서 14.2%로 높아졌다. 반면, 유배우남성1인가구의 비중은 동 기간 20.2%에서 19.6%로 감소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남성1인가구는 교육, 취업 등을 이유로 여전히 미혼층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배우남성1인가구도 직장 이동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향으로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남성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아졌으며, 평균수명 상승으로 인하여 사별 후 남성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향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여성1인가구의 경우, 1985~2010년 기간 동안 이혼여성1인가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약 11.4배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사별여성1인가구 6.9배, 미혼1인여성가구 5.0배, 유배우여성1인가구 4.2배 등의 순으로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1인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낮으며, 특히 유배우인 경우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다. 이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유배우여성 등이 홀로 가구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배우여성1인가구가 전체 여성1인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도 1985년 12.6%에서 2010년 8.6%로 감소하였다. 한편, 미혼여성1인가구가 전체 여성1인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33.1%에서 2010년 27.0%로 감소하고, 이혼여성1인가구의 비중은 동기간 6.1%에서 11.2% 그리고 사별여성1인가구의 비중은 48.2%에서 53.3%로 높아졌다. 요컨대, 여성1인가구는 남녀 간 평균수명의 차이 등으로 사별 가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혼층이 교육, 직장 등을 이유로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그 증가속도는 낮으나 유배우여성도 직장 이동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향으로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여성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빠르게 높아졌다.

〈표 4-10〉 성별 및 혼인상태별 1인가구 변동 추이

(단위: 가구,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85/'10
남성	2,346	4,378	6,946	9,191	13,494	19,608	8.4
미혼	1,587	3,042	4,621	5,561	7,870	10,682	6.7
유배우	475	733	1,200	1,666	2,154	3,843	8.1
사별	195	412	721	968	1,602	2,292	11.8
이혼	89	191	404	996	1,868	2,791	31.4
여성	4,181	6,342	9,466	13,187	19,007	25,920	6.2
미혼	1,386	2,091	2,742	3,749	5,267	6,991	5.0
유배우	527	568	774	1,055	1,311	2,220	4.2
사별	2,014	3,236	5,256	7,100	10,381	13,811	6.9
이혼	254	447	694	1,283	2,048	2,898	11.4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85/'10
구성비(%)							
남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미혼	67.6	69.5	66.5	60.5	58.3	54.5	-
유배우	20.2	16.7	17.3	18.1	16.0	19.6	-
사별	8.3	9.4	10.4	10.5	11.9	11.7	-
이혼	3.8	4.4	5.8	10.8	13.8	14.2	-
여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미혼	33.1	33.0	29.0	28.4	27.7	27.0	-
유배우	12.6	9.0	8.2	8.0	6.9	8.6	-
사별	48.2	51.0	55.5	53.8	54.6	53.3	-
이혼	6.1	7.0	7.3	9.7	10.8	11.2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3) 성별, 연령별 및 혼인상태별 1인가구

남성1인가구 중 10대는 모두 미혼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20대의 경우에도 미혼층이 압도적이며, 유배우와 이혼 등이 일부 존재할 뿐이다. 30대의 경우에는 미혼가구가 1985~2010년 기간 동안 19.4배 증가하였으며, 이혼가구 7.4배, 유배우가구 4.8배, 사별가구 0.8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에는 미혼가구가 1985~2010년 기간 동안 62.3배 증가하였으며, 이혼가구 24.5배, 유배우가구 6.9배, 사별가구 3.9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64세의 경우에는 미혼가구가 1985~2010년 기간 동안 78.1배 증가하였으며, 이혼가구 66.8배, 유배우가구 11.2배, 사별가구 6.4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미혼가구가 1985~2010년 기간 동안 105배 증가하였으며, 이혼가구 114배, 유배우가구 21.9배, 사별가구 19.3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남성 1인가구: 성별 연령별 및 혼인상태별 1인가구 변동 추이

(단위: 가구)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0/'85
남성	2,346	4,378	6,946	9,191	13,494	19,608	8.4
10대	195	173	219	212	195	229	1.2
미혼	195	173	219	212	195	229	1.2
20대	1,200	2,134	2,782	2,802	3,255	3,743	3.1
미혼	1,146	2,098	2,706	2,722	3,204	3,679	3.2
유배우	50	27	68	62	41	58	1.2
사별	1	1	0	2	1	0	0
이혼	3	8	8	16	9	6	2
30대	349	941	1,835	2,510	3,705	4,679	13.4
미혼	204	678	1,426	1,980	3,113	3,958	19.4
유배우	105	197	287	345	350	503	4.8
사별	12	14	22	22	10	10	0.8
이혼	28	52	100	163	232	208	7.4
40대	229	425	829	1,560	2,515	3,848	16.8
미혼	31	62	214	498	1,009	1,930	62.3
유배우	149	248	385	578	733	1,027	6.9
사별	15	42	64	62	69	59	3.9
이혼	34	73	166	422	704	832	24.5
50~64세	248	458	786	1,353	2,283	4,239	17.1
미혼	10	26	48	126	316	781	78.1
유배우	139	208	378	547	766	1,554	11.2
사별	78	170	250	332	432	502	6.4
이혼	21	54	110	348	769	1,402	66.8
65세이상	125	247	495	754	1,541	2,870	23.0
미혼	1	5	8	23	33	105	105
유배우	32	53	82	134	264	701	21.9
사별	89	185	385	550	1,090	1,721	19.3
이혼	3	4	20	47	154	343	114.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여성1인가구 중 10대도 거의 미혼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20대의 경우에도 미혼층이 3.3배 증가하여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유배우와 이혼 등은 일부만 있을 뿐이다. 30대의 경우에는 미혼가구가 1985~2010년 기간 동안 11.7배 증가하였으며, 이혼가구 3.1배, 유배우가구 2.3배, 사별가구 0.4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에는 미혼가구가 1985~2010년 기간 동안 20.6배 증가하였으며, 이혼가구 12.0배, 유배우가구 4.9배, 사별가구 1.8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64세의 경우에는 미혼가구가 1985~2010년 기간 동안 36.7배 증가하였으며, 이혼가구 23.4배, 유배우가구 5.1배, 사별가구 2.6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미혼가구가 1985~2010년 기간 동안 35.8배 증가하였으며, 이혼가구 37.4배, 유배우가구 7.9배, 사별가구 11.9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연령대 그리고 대부분 혼인상태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 남녀 공히 모든 연령대에서 미혼1인가구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 연령대에 걸쳐 만혼화 및 비혼화의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혼1인가구의 경우에도 그 절대적 규모는 아직 작으나 65세 이상 연령층을 제외하면 남녀 공히 미혼1인가구 다음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별1인가구도 남녀 간 평균수명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다소나마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사별1인가구의 경우 고연령층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는 사별하는 경우 자녀세대와 동거를 하는 경향이 우세하였다면,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사별 후 자녀세대와 분리하여 농촌 등에 홀로 거주하는 경향이 우세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4-12〉 여성 1인가구: 성별 연령별 및 혼인상태별 1인가구 변동 추이

(단위: 가구)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0/'85
여성	4,181	6,342	9,466	13,187	19,007	25,920	6.2
10대	165	220	203	210	216	235	1.4
미혼	163	220	201	208	216	235	1.4
유배우	2	0	2	2	0	0	0.0
20대	1,078	1,434	1,793	2,283	2,850	3,363	3.1
미혼	992	1,350	1,702	2,177	2,754	3,292	3.3
유배우	70	64	80	78	73	57	0.8
사별	3	3	1	3	2	0	0.0
이혼	13	17	10	25	21	14	1.1
30대	413	740	1,117	1,421	1,930	2,600	6.3
미혼	175	394	619	874	1,403	2,041	11.7
유배우	109	144	235	221	187	246	2.3
사별	31	36	50	29	13	13	0.4
이혼	98	166	213	297	327	300	3.1
40대	323	507	877	1,430	2,081	2,421	7.5
미혼	39	84	161	352	591	803	20.6
유배우	102	125	226	321	391	500	4.9
사별	104	149	206	246	243	183	1.8
이혼	78	149	284	511	856	935	12.0
50~64세	1,191	1,689	2,438	2,922	3,727	5,180	4.3
미혼	13	29	50	113	229	477	36.7
유배우	179	178	189	329	473	904	5.1
사별	943	1,385	2,034	2,124	2,356	2,487	2.6
이혼	56	97	165	356	669	1,312	23.4
65세 이상	1,011	1,752	3,038	4,921	8,203	12,121	12.0
미혼	4	14	9	25	74	143	35.8
유배우	65	57	42	104	187	513	7.9
사별	933	1,663	2,965	4,698	7,767	11,128	11.9
이혼	9	18	22	94	175	337	37.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성·연령별 혼인상태별 1인가구의 증가 속도의 차이는 그 구성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성 1인가구의 경우, 40대까지 연령층에서는 미혼 1인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진 반면, 유배우 1인가구의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40대 이상에서는 이혼 1인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40대의 경우 미혼 1인가구 다음으로 이혼 1인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졌다. 50~64세 연령층의 경우에는 유배우 1인가구의 비중과 그 다음으로 사별 1인가구의 비중이 감소한 대신, 이혼 1인가구와 미혼 1인가구의 비중은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에는 사별 1인가구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고, 대신 이혼 1인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졌다.

〈표 4-13〉 남성 1인가구: 성별 연령별 및 혼인상태별 1인가구 구성비 변동 추이
(단위: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남성						
20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혼	95.5	98.3	97.3	97.1	98.4	98.3
유배우	4.2	1.3	2.4	2.2	1.3	1.5
사별	0.1	0.0	0.0	0.1	0.0	0.0
이혼	0.3	0.4	0.3	0.6	0.3	0.2
30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혼	58.5	72.1	77.7	78.9	84.0	84.6
유배우	30.1	20.9	15.6	13.7	9.4	10.8
사별	3.4	1.5	1.2	0.9	0.3	0.2
이혼	8.0	5.5	5.4	6.5	6.3	4.4
40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혼	13.5	14.6	25.8	31.9	40.1	50.2
유배우	65.1	58.4	46.4	37.1	29.1	26.7
사별	6.6	9.9	7.7	4.0	2.7	1.5
이혼	14.8	17.2	20.0	27.1	28.0	21.6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50~64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혼	4.0	5.7	6.1	9.3	13.8	18.4
유배우	56.0	45.4	48.1	40.4	33.6	36.7
사별	31.5	37.1	31.8	24.5	18.9	11.8
이혼	8.5	11.8	14.0	25.7	33.7	33.1
65세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혼	0.8	2.0	1.6	3.1	2.1	3.7
유배우	25.6	21.5	16.6	17.8	17.1	24.4
사별	71.2	74.9	77.8	72.9	70.7	60.0
이혼	2.4	1.6	4.0	6.2	10.0	12.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여성1인가구의 경우에도 40대까지 연령층에서는 미혼1인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진 반면, 유배우1인가구의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40대에서 이혼1인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남성과 다소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40대 남성의 경우 미혼1인가구, 이혼1인가구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나, 40대 여성의 경우에는 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50~64세 연령층의 경우에는 평균수명 상승으로 인하여 사별1인가구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대신, 이혼1인가구와 미혼1인가구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다. 65세 이상의 여성노인 1인가구의 경우 사별인 경우가 90%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혼으로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은 다소 상승하였는데 황혼이혼 증가 등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비추어 보아 만혼화, 이혼 증가, 평균수명 상승 등에 따라 미혼1인가구와 이혼1인가구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최근에 올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유배우1인가구와 사별1인가구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30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표 4-14〉 여성 1인가구: 성별 연령별 및 혼인상태별 1인가구 구성비 변동 추이
(단위: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여성						
10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혼	98.8	100.0	99.0	99.0	100.0	100.0
유배우	1.2	0.0	1.0	1.0	0.0	0.0
20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혼	92.0	94.1	94.9	95.4	96.6	97.9
유배우	6.5	4.5	4.5	3.4	2.6	1.7
사별	0.3	0.2	0.1	0.1	0.1	0.0
이혼	1.2	1.2	0.6	1.1	0.7	0.4
30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혼	42.4	53.2	55.4	61.5	72.7	78.5
유배우	26.4	19.5	21.0	15.6	9.7	9.5
사별	7.5	4.9	4.5	2.0	0.7	0.5
이혼	23.7	22.4	19.1	20.9	16.9	11.5
40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혼	12.1	16.6	18.4	24.6	28.4	33.2
유배우	31.6	24.7	25.8	22.4	18.8	20.7
사별	32.2	29.4	23.5	17.2	11.7	7.6
이혼	24.1	29.4	32.4	35.7	41.1	38.6
50~64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혼	1.1	1.7	2.1	3.9	6.1	9.2
유배우	15.0	10.5	7.8	11.3	12.7	17.5
사별	79.2	82.0	83.4	72.7	63.2	48.0
이혼	4.7	5.7	6.8	12.2	18.0	25.3
65세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혼	0.4	0.8	0.3	0.5	0.9	1.2
유배우	6.4	3.3	1.4	2.1	2.3	4.2
사별	92.3	94.9	97.6	95.5	94.7	91.8
이혼	0.9	1.0	0.7	1.9	2.1	2.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노인 1인가구는 경제적 부양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을 받고 있다. 물론, 노인 1인가구의 성별로 경제적 지위나 건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분석에서는 1인가구를 성별과 노인가구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우선 노인1인가구의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남녀 공히 노인1인가구의 증가폭이 비노인1인가구에 비해 월등하게 높음을 볼 수 있다. 전체 노인1인가구는 1985~2010년 기간 동안 13.2배가 증가하여 비노인1인가구의 5.7배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남성노인1인가구도 동 기간 동안 23.0배가 증가하여 남성 비노인1인가구의 13.2배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여성노인1인가구의 경우 12.0배로 여성 비노인1인가구 4.4배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사별이나 이혼(황혼 이혼 증가 경향을 고려할 경우)으로 홀로 된 노인들이 도시의 자녀들과도 별거하면서 그 규모나 비중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남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남녀 간 평균수명의 차이로 과거부터 여성노인이 많은 관계로 노인1인가구의 비중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여성노인1인가구가 전체 여성1인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24.2%에서 2010년 46.8%로 높아진데 반해 남성노인1인가구의 비중은 동 기간 동안 5.3%에서 14.6%로 높아진데 그치고 있다. 실제 노인1인가구의 성비는 1985년 12.4에서 2010년 23.7로 높아지고 있으나, 비노인 1인가구의 성비가 1985년 70.3, 2010년 121.3 등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15〉 노인 1인가구의 변동 추이

(단위: 가구,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0/'85
1인가구	6,536	10,732	16,427	22,393	32,504	45,529	7.0
비노인	2,354	4,388	6,953	9,201	13,495	19,609	5.7
노인	2,229	4,141	6,458	8,442	11,954	16,739	13.2
남성1인	2,354	4,388	6,953	9,201	13,495	19,609	5.7
비노인	2,229	4,141	6,458	8,442	11,954	16,739	13.2
노인	125	247	495	759	1,541	2,870	23.0
여성1인	4182	6,344	9,474	13,192	19,009	25,920	6.2
비노인	3171	4,592	6,435	8,270	10,806	13,799	4.4
노인	1011	1,752	3,039	4,922	8,203	12,121	12.0
구성비(%)							
1인가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비노인	82.6	81.4	78.5	74.6	70.0	67.1	-
노인	17.4	18.6	21.5	25.4	30.0	32.9	-
남성 1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비노인	94.7	94.4	92.9	91.8	88.6	85.4	-
노인	5.3	5.6	7.1	8.2	11.4	14.6	-
여성 1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비노인	75.8	72.4	67.9	62.7	56.8	53.2	-
노인	24.2	27.6	32.1	37.3	43.2	46.8	-
1인가구의 성비							
전체	56.3	69.2	73.4	69.7	71.0	75.7	-
비노인가구	70.3	90.2	100.4	102.1	110.6	121.3	-
노인가구	12.4	14.1	16.3	15.4	18.8	23.7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2. 1세대가구

가. 1세대 가구의 주요 특성

1) 1세대가구의 세부 유형

1세대 가구는 크게 부부가구와 기타 가구(비부부 가구)로 구분된다. 이들 가구는 다시 누구와 동거하고 있느냐에 따라 세분화된다. 주요 동거인으로는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형제자매 제외), 비혈연이 포함된다. 2010년도 인구센서스 1% 표본자료를 집계한 결과, 부부 혹은 동거인으로 구성되는 1세대 가구 중 98%가 부부만이 사는 가구로 나타나며, 부부+기타친인척 0.8%, 부부+형제자매 0.7%, 부부+비혈연 0.3%으로 나타난다. 적어도 현대 사회에서 부부+형제자매의 분류는 인구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이유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분포를 고려할 경우, 혈연과 비혈연관계만으로 구분하여 부부가구를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부부+혈연관계는 1.6%, 부부+비혈연관계는 0.3%, 기타(부부+혈연+비혈연) 0.0%로 각각 나타난다.

가구주 1인과 동거인으로 구성되는 1세대가구의 경우 가구주+형제자매 42.1%, 가구주+비혈연 39.1%, 가구주+기타친인척 14.6% 등이며, 이외의 유형은 아주 낮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형제자매와 기타친인척을 구분하는 별도의 실익이 없다고 간주할 경우, 가구주+혈연관계와 가구주와 비혈연관계로 재분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가구주+혈연관계는 59.7%, 가구주+비혈연관계는 39.1%, 기타(가구주+혈연+비혈연) 1.2%로 각각 나타난다.

〈표 4-16〉 1세대가구: 부부가구 및 비부부가구 분포, 2010

(단위: 가구, %)

	가구			가구	
	가구	%		가구	%
부부가구	32,609	100.0	비부부가구	4,774	100.0
부부	31,968	98.0		-	-
부부+형제자매	222	0.7	가구주+형제자매	2,010	42.1
부부+기타친인척	275	0.8	가구주+기타친인척	698	14.6
부부+형제자매+기타친인척	23	0.1	가구주+형제자매+기타친인척	141	3.0
부부+형제자매+비혈연	6	0.0	가구주+형제자매+비혈연	39	0.8
부부+기타친인척+비혈연	5	0.0	가구주+기타친인척+비혈연	15	0.3
부부+혈연+비혈연	-	-	가구주+혈연+비혈연	5	0.1
부부+비혈연	110	0.3	가구주+비혈연	1,866	39.1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2) 노인만으로 구성된 1세대가구

부부가구 중 부부 모두 노인인 경우와 동거인 모두 노인인 경우를 살펴보았다. 노인부부가구도 부양 등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동거인까지 노인으로 구성하여 노인만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가구의 추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10년도 인구센서스 자료를 집계한 결과, 전체 부부가구 중 가구원 모두 노인인 비율은 31.0%로 나타난다. 부부만이 사는 가구에서 부부 모두 노인인 비율은 31.6%로 나타난다. 이외에 부부+형제자매인 경우 3.2%, 부부+기타친인척인 경우 2.2%, 부부+비혈연 1.8%로 각각 나타난다.

〈표 4-17〉 부부가구: 부부 및 가구원의 연령대별 가구, 2010

(단위: 가구, %)

구분	가구				비율(%)		
	부부 노인	부부 중 1명 노인	모두 비노인	합계	가구구성원 모두 노인	부부 노인	모두 노인
부부 핵(전체)	10,190	4,263	18,156	32,609	10,125	31.2	31.0
부부	10,110	4,207	17,651	31,968	10,110	31.6	31.6
부부+형제자매	15	14	193	222	7	6.8	3.2

구분	가구				가구구성원 모두 노인	비율(%)	
	부부 노인	부부 중 1명 노인	모두 비노인	합계		부부 노인	모두 노인
부부+기타친인척	44	28	203	275	6	16.0	2.2
부부+형제자매+기타친인척	1	0	22	23	-	4.3	-
부부+형제자매+비혈연	0	1	5	6	-	0.0	-
부부+기타친인척+비혈연	0	1	4	5	-	0.0	-
부부+혈연+비혈연	-	-	-	-	-	-	-
부부+비혈연	20	12	78	110	2	18.2	1.8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비부부 가구인 경우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는 6.4%, 가구구성원 모두가 노인인 경우는 2.5%로 나타난다. 가구주와 기타 친인척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가구주가 노인인 비율은 14.1% 그리고 가구원 모두가 노인인 비율은 3.3%로 나타난다.

〈표 4-18〉 비부부가구: 가구주 및 가구원의 연령대별 가구, 2010

(단위: 가구, %)

구분	가구				비율(%)	
	가구주 노인	가구주 비노인	합계	모두 노인	가구주 노인	모두 노인
비부부 가구(전체)	305	4,469	4,774	120	6.4	2.5
가구주+형제자매	47	1,963	2,010	25	2.3	1.2
가구주+기타친인척	97	592	689	23	14.1	3.3
가구주+형제자매+기타친인척	3	138	141	0	2.1	0.0
가구주+형제자매+비혈연	1	38	39	0	2.6	0.0
가구주+기타친인척+비혈연	0	14	14	0	0.0	0.0
기타	0	5	5	0	0.0	0.0
가구주+비혈연	154	1,712	1,866	70	8.3	3.7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3) 1세대가구 부부 및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

1세대 부부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48.5%로 나타나며, 부부 중 최소 1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73.0%로 나타난다. 부부가구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우선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맞벌이는 48.4%, 맞벌이와 홀벌이 등 부부 중 최소 1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72.8%로 나타난다. 부부+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중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는 58.1%, 부부+기타 친인척으로 구성된 가구의 45.5%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9〉 부부가구: 부부의 경제활동상태별 가구, 2010

(단위: 가구, %)

	부부 경제활동상태				비율	
	맞벌이	홀벌이	부부 모두 비취업	합계	맞벌이	부부 중 최소 1인 취업
부부 핵(전체)	15,808	7,986	8,815	32,609	48.5	73.0
부부	15,469	7,809	8,690	31,968	48.4	72.8
부부+형제자매	129	65	28	222	58.1	87.4
부부+기타 친인척	125	84	66	275	45.5	76.0
부부+형제자매+기타 친인척	11	7	5	23	47.8	78.3
부부+형제자매+비혈연	4	1	1	6	66.7	83.3
부부+기타 친인척+비혈연	4	1	0	5	80.0	100.0
부부+혈연+비혈연	-	-	-	-	-	-
부부+비혈연	66	19	25	110	60.0	77.3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비부부 가구인 경우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우선 비부부 가구 전체 중 가구주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는 69.6%로 나타난다. 비부부 가구의 세부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구주+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의 71.5%, 가구주+기타 친인척으로 구성된 가구의 62.9%, 가

가구+형제자매+기타친인척으로 구성된 가구의 73.0%는 가구주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가구주+비혈연으로 구성된 가구의 69.8%는 가구주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20〉 비부부가구: 가구주 경제활동상태별 가구, 2010

(단위: 가구, %)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			가구주 유업(%)
	유업	무업	합계	
비부부 가구(전체)	1,451	3,323	4,774	69.6
가구주+형제자매	572	1,438	2,010	71.5
가구주+기타 친인척	259	439	698	62.9
가구주+형제자매+기타 친인척	38	103	141	73.0
가구주+형제자매+비혈연	9	30	39	76.9
가구주+기타 친인척+비혈연	7	8	15	53.3
가구주+혈연+비혈연	2	3	5	60.0
가구주+비혈연	564	1,302	1,866	69.8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4) 1세대가구에 외국 국적 가구원의 포함여부

전체 부부가구 중 부부 모두가 내국인인 가구는 9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원 중 최소 1인이 외국인인 가구는 1.4%로 나타난다. 부부가구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부부 모두가 한국국적인 경우가 98.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로 구성된 경우는 1.0%, 외국인 남편+한국인 아내로 구성된 가구는 0.2%,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0.2%로 나타난다. 부부+형제자매 가구 중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를 둔 가구는 2.7%로 나타나고, 부부 모두 외국인인 가구는 1.8%로 나타난다. 부부+기타 친인척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부부 중 최소 한사람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2.6%이며,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3.6%로 나타난다. 한편, 부부+비혈연으로 구성된 가구 중 최소 한사람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2%로 나타난다.

〈표 4-21〉 부부가구: 외국 국적 가구원 포함 여부, 2010

(단위: 가구, %)

	계	부부 기준			개인기준	
		부부 모두 내국인	남편 한국인+ 부인 외국인	남편 외국인+ 부인 한국인	부부 모두 외국인	최소 1인 외국인 포함
부부 핵(전체)	32,609	32,173	332	55	49	449
부부	31,968	31,550	320	54	44	418
부부+형제자매	222	212	6	0	4	10
부부+기타 친인척	275	268	5	1	1	10
부부+형제자매+기타 친인척	23	22	1	0	0	1
부부+형제자매+비혈연	6	6	0	0	0	0
부부+기타 친인척+비혈연	5	5	0	0	0	1
부부+혈연+비혈연	0	-	-	-	-	-
부부+비혈연	110	110	0	0	0	9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비부부가구 전체에서 가구원 중 한사람이라도 외국국적을 가진 비율은 1.5%로 나타난다. 비부부가구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가구주+형제자매인 가구의 0.3%, 가구주+기타 친인척 가구의 1.9%, 가구주+형제자매+기타 친인척 가구의 1.4%, 가구주+비혈연 가구의 2.7%는 가구원 중 한사람이라도 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4-22〉 비부부가구: 외국 국적 가구원 포함 여부, 2010

(단위: 가구, %)

	계	내국인으로 구성	한사람이라도 외국국적을 가진 가구	
			명	비율
비부부 가구(전체)	4,774	4,702	72	1.5
가주주+형제자매	2,010	2,003	7	0.3
가주주+기타친인척	698	685	13	1.9
가주주+형제자매+기타친인척	141	139	2	1.4
가주주+형제자매+비혈연	39	39	0	0.0
가주주+기타친인척+비혈연	15	15	0	0.0
가주주+혈연+비혈연	5	5	0	0.0
가주주+비혈연	1,866	1,816	50	2.7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나. 1세대가구의 변동 추이

1) 1세대 가구의 세부 유형

1세대 부부가구의 경우 1985~2010년 기간 동안 4.6배 증가하였다. 1세대 부부가구 중 부부만 사는 가구는 동 기간 4.9배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부부+혈연 가구는 1.9배 증가하였다. 반면, 부부+비혈연 가구나 부부+혈연+비혈연 가구는 오히려 규모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1세대 부부가구 중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91.6%에서 2010년 98.0%로 증가하여, 1세대 부부가구 거의 대부분이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서 젊은층 사이에 초혼 후에도 자녀 출산을 늦추거나 전혀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른바 무자녀 부부나, 자녀가 있더라도 딸뿐이나 자녀의 교육 등으로 자녀와 떨어져 사는 가구에 기인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 추이에 따라 노인 부

부만 사는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과거에는 자녀나 친인척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그러한 경향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표 4-23〉 1세대 부부가구 변동 추이

(단위: 가구, %)

	1985	1990	2000	2005	2010	'10/'85
부부가구(전체)	7,065	10,189	19,191	26,102	32,609	4.6
부부	6,473	9,657	18,692	25,546	31,968	4.9
부부+혈연	271	315	375	422	520	1.9
부부+비혈연	304	203	118	129	110	0.4
부부+혈연+비혈연	17	14	6	5	11	0.6
부부가구(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
부부	91.6	94.8	97.4	97.9	98.0	-
부부+혈연	3.8	3.1	2.0	1.6	1.6	-
부부+비혈연	4.3	2.0	0.6	0.5	0.3	-
부부+혈연+비혈연	0.2	0.1	0.0	0.0	0.0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1세대 비부부가구 전체는 1985~2010년 기간 동안 1.2배 증가하였다. 1세대 비부부가구 중 가구주+혈연 가구가 1.3배로 가장 빨리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구주+비혈연(1.1배)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가구주+혈연+비혈연 가구는 그 규모가 감소하였다. 1세대 비부부가구 중 56% 정도는 가구주+혈연 가구이며, 그 다음으로 가구주+비혈연 가구(2010년 기준 40%), 가구주+혈연+비혈연(2010년 기준 1.2%)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패턴은 1985년 이래 2010년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표 4-24〉 1세대 비부부가구 변동 추이

(단위: 가구, %)

	1985	1990	2000	2005	2010	'10/'85
비부부가구(전체)	3,911	3,705	3,894	3,862	4,774	1.2
가주주+혈연	2,123	2,083	2,191	2,286	2,849	1.3
가주주+비혈연	1,634	1,555	1,620	1,531	1,866	1.1
가주주+혈연+비혈연	154	67	83	45	59	0.4
비부부가구(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
가주주+혈연	54.3	56.2	56.3	59.2	59.7	-
가주주+비혈연	41.8	42.0	41.6	39.6	39.1	-
가주주+혈연+비혈연	3.9	1.8	2.1	1.2	1.2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2) 맞벌이 가구

1세대 부부가구 중 맞벌이가구는 1985년 2,184가구에서 2010년 15,808가구로 7.2배 증가하였다. 1세대 부부가구의 동거인에 따라 분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1985년 2,051가구에서 2010년 15,469가구로 7.5배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부부와 혈연(형제자매 또는 친인척)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에는 맞벌이가구가 54가구에서 265가구로 4.9배 증가하였다. 부부와 비혈연으로 구성된 가구는 76가구에서 66가구로 다소 감소하였다.

맞벌이 가구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1세대 부부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1985년 30.9%에서 2010년 48.5%까지 증가하였다.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31.7%에서 48.4%로 그리고 부부+(비)혈연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22.5%에서 52.9%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맞벌이부부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주택이나 결혼 생활 비용, 자녀양육비, 노후대책 등 생애과정에서 상당한 지출이 필요해

짐에 따라 남성과 여성 모두 맞벌이를 희망하는 혹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여야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맞벌이 선호 경향은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시 일가정양립 곤란으로 특히 여성은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사회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적으로 맞벌이 선호도가 증가하나 사회적으로 일가정양립이 계속 곤란하다면 결국 출산을 포기하거나 억제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자녀 부부의 증가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표 4-25〉 1세대 부부가구: 맞벌이 가구 변동 추이

(단위: 가구,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0/'85
부부가구(전체)	7,065	10,189	15,026	19,191	26,102	32,609	4.6
맞벌이	2,184	3,715	6,462	7,915	11,123	15,808	7.2
비맞벌이	4,881	6,474	8,564	11,276	14,979	16,801	3.4
부부	6,473	9,657	14,482	18,692	25,546	31,968	4.9
맞벌이	2,051	3,544	6,256	7,703	10,900	15,469	7.5
비맞벌이	4,422	6,113	8,226	10,989	14,646	16,499	3.7
부부+혈연	271	315	397	375	422	520	1.9
맞벌이	54	99	153	165	164	265	4.9
비맞벌이	217	216	244	210	258	255	1.2
부부+비혈연	304	203	140	118	129	110	0.4
맞벌이	76	70	50	43	55	66	0.9
비맞벌이	228	133	90	75	74	44	0.2
부부+혈연+비혈연	17	14	7	6	5	11	0.6
맞벌이	3	2	3	4	4	8	2.7
비맞벌이	14	12	4	2	1	3	0.2
맞벌이가구 비율							
전체 부부가구	30.9	36.5	43.0	41.2	42.6	48.5	-
부부만 가구	31.7	36.7	43.2	41.2	42.7	48.4	-
부부+(비)혈연	22.5	32.1	37.9	42.5	40.1	52.9	-

주: 혈연 관계에는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포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3) 무자녀 부부(childless couple) 가구

1세대 부부가구를 자녀 유무에 따라 분리하였다.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가임기 기혼여성의 출생아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기에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부부가구 중 출생자녀가 없는 가구는 1985년 3,503가구에서 2005년 5,567가구로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그 규모가 감소하여 출생자녀가 없는 가구는 3,880가구로 나타난다.

부부가구를 동거인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부부만 동거하는 가구의 경우 출생자녀가 없는 경우는 1985년 3,307가구에서 2005년 5,344가구로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그 규모가 감소하여 출생자녀가 없는 가구는 3,755가구로 나타난다. 이외의 유형은 규모가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부+혈연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무자녀 가구는 1985년 221가구에서 2010년 107가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유자녀인 가구는 동 기간 50가구에서 413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부+비혈연으로 구성된 가구 중 무자녀인 가구는 110가구에서 16가구로, 유자녀인 가구는 194가구에서 94가구로 감소하였다.

전체 부부가구 중 무자녀가구의 비중은 1985년 49.6%에서 빠르게 감소하여 2010년에는 11.9%로 나타났다.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48.9%에서 11.7%로 감소하였다. 부부와 기타 혈연 혹은 비혈연인과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56.9%에서 19.5%로 감소하였다. 부부가구 중 무자녀가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직장 등의 이유로 자녀와 분리하여 거주하는 가구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석 시 주의할 점은 부부가구 중 무자녀 가구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여 2세대 이상을 형성하는 경

우가 많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그러한 경향이 약화되어 자녀 출산 후에도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1세대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무자녀 가구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표 4-26〉 1세대 부부가구: 자녀 유무별 가구의 변동 추이

(단위: 가구, %)

	1985	1990	2000	2005	2010
부부가구(전체)	7,065	10,189	19,191	26,102	32,609
무자녀	3,503	4,490	5,291	5,567	3,880
유자녀	3,562	5,699	13,900	20,535	28,729
부부	6,473	9,657	18,692	25,546	31,968
무자녀	3,166	4,191	5,065	5,344	3,755
유자녀	3,307	5,466	13,627	20,202	28,213
부부+혈연	271	315	375	422	520
무자녀	221	224	205	185	107
유자녀	50	91	170	237	413
부부+비혈연	304	203	118	129	110
무자녀	110	65	20	34	16
유자녀	194	138	98	95	94
부부+혈연+비혈연	17	14	6	5	11
무자녀	6	10	1	4	2
유자녀	11	4	5	1	9
무자녀가구 비율					
전체 부부가구	49.6	44.1	27.6	21.3	11.9
부부 가구	48.9	43.4	27.1	20.9	11.7
부부+혈연+비혈연	56.9	56.2	45.3	40.1	19.5

주: 1) 혈연 관계에는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포함
 2) 1995년은 출생아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분석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4) 미혼층으로만 구성된 1세대가구

미혼층이 직업, 교육 등을 이유로 홀로 혹은 집단으로 거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1세대 가구 중 부부가 아닌 가구원과 구성원 모두 미혼인 가구를 집계하였다. 1세대 비부부가구 중 미혼층으로만 구성된 가구 규모는 1985년 1,276가구에서 2005년 1,672가구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다만, 2010년에는 2005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가구 중 미혼층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비중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다소 불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구주 혹은 가구원 중 기혼층이 거주하는 1세대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층도 1세대가구를 형성하여 거주하는 경향도 있지만, 직장 이동, 이혼 증가,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기혼인구가 배우자나 자녀 없이 1세대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세대 가구의 세부 유형별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가구주+혈연 가구 중 구성원 모두가 미혼인 비율은 1985년 2.2%에서 1995년 8.0%까지 증가하였다가 2000년 6.1%로 다소 낮아진 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 10.6%로 나타난다. 가구주+비혈연으로 구성된 가구 중 구성원 모두가 미혼인 비율은 1985년 68.9%에서 1995년 76.1%까지 증가하였다가 2010년 63.7%까지 다시 감소하였다. 가구주+혈연+비혈연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가구구성원 모두가 미혼인 비율은 1985년 66.9%에서 1990년 80.7%로 높아졌다 다시 감소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54.2%로 나타난다.

〈표 4-27〉 1세대 비부부가구: 구성원의 혼인상태별 가구의 변동 추이

(단위: 가구,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비부부가구(전체)	3,911	3,705	3,894	3,862	4,589	4,774
구성원 모두 미혼	1,276	1,255	1,475	1,280	1,672	1,522
기타	2,635	2,450	2,419	2,582	2,917	3,252
구성원 모두 미혼(%)	32.6	33.9	37.9	33.1	36.4	31.9
가구주+혈연						
구성원 모두 미혼	47	89	175	140	186	302
기타	2,076	1,994	2,016	2,146	2,340	2,547
구성원 모두 미혼(%)	2.2	4.3	8.0	6.1	7.4	10.6
가구주+비혈연						
구성원 모두 미혼	1,126	1,119	1,233	1,112	1,444	1,188
기타	508	436	387	419	561	678
구성원 모두 미혼(%)	68.9	72.0	76.1	72.6	72.0	63.7
가구주+혈연+비혈연						
구성원 모두 미혼	103	47	67	28	42	32
기타	51	20	16	17	16	27
구성원 모두 미혼(%)	66.9	70.1	80.7	62.2	72.4	54.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5) 노인만으로 구성된 1세대가구

결혼·출산 등과 거리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1세대 가구 중 노인(65세 이상)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다.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부부가구 중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살펴보면, 1985년 702가구에서 2010년 10,190가구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들 노인만으로 구성된 부부가구 중 순수하게 부부만 사는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난다. 노인 부부와 노인들로만 구성된 친인척 혹은 비혈연인들과 살고 있는 가구는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각 유형별로 전체 가구 중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부부가 포함된 1세대 가구 전체적으로 1985년 9.9%에서 2010년

31.2%로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부부만이 살고 있는 가구 중 노인들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은 동 기간 동안 10.3%에서 31.6%로 빠르게 상승하였다. 부부+친인척 가구 중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도 동 기간 동안 1.5%에서 11.5%로 높아졌다. 부부+비혈연 가구의 경우에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은 1985년 11.2%에서 2010년 18.2%로 높아졌다. 결국 노인부부만이 사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친인척 혹은 비혈연과 사는 경우에도 노인집단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인만이 사는 부부 혹은 집단화 가구의 증가는 노인들의 안전 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 4-28〉 1세대 부부가구 중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변동 추이

(단위: 가구,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부부가구	7,065	10,189	15,026	19,191	26,102	32,609
노인+비노인으로 구성	6,363	9,038	12,866	15,560	18,990	22,419
부부	5,809	8,522	12,354	15,096	18,497	21,858
부부+혈연	267	312	381	353	378	460
부부+비혈연	270	190	124	105	110	90
부부+혈연+비혈연	17	14	7	6	5	11
노인만으로 구성	702	1,151	2,160	3,631	7,112	10,190
부부	664	1,135	2,128	3,596	7,049	10,110
부부+혈연	4	3	16	22	44	60
부부+비혈연	34	13	16	13	19	20
부부+혈연+비혈연	0	0	0	0	0	0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						
부부가구(전체)	9.9	11.3	14.4	18.9	27.2	31.2
부부	10.3	11.8	14.7	19.2	27.6	31.6
부부+친인척	1.5	1.0	4.0	5.9	10.4	11.5
부부+비혈연	11.2	6.4	11.4	11.0	14.7	18.2
부부+혈연+비혈연	0.0	0.0	0.0	0.0	0.0	0.0

주: 노인부부는 부부 모두 노인(65세 이상), 1명이라도 65세 미만인 경우 비노인부부
 노인가구는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노인, 1명이라도 노인이 아닌 경우 비노인가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한편, 1세대 비부부가구 중 가구주를 포함하여 모두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1985년 107가구에서 2010년 305가구로 증가하였다. 가구주+친인척 및 가구주+비혈연 가구로서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도 동 기간 동안 18가구에서 149가구로 그리고 85가구에서 154가구로 각각 증가하였다.

1세대 비부부가구로서 노인만이 사는 가구의 비중도 1985년 2.7%에서 2010년 6.4%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구주+혈연 가구의 경우 노인만이 사는 가구의 비중은 동 기간 동안 5.2%에서 8.3%로 높아졌다. 가구주+비혈연 가구의 경우 노인만이 사는 가구의 비중은 동 기간 동안 2.6%에서 3.4%로 높아졌다. 이는 노인부부가구 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한 1세대 비부부가구의 경우에도 노인집단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표 4-29〉 1세대 비부부가구 중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변동 추이

(단위: 가구,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비부부가구	3,911	3,705	3,894	3,862	4,589	4,774
비노인 포함	3,804	3,600	3,780	3,722	4,364	4,469
가구주+혈연	2,105	2,060	2,143	2,227	2,418	2,700
가구주+비혈연	1,549	1,474	1,554	1,451	1,891	1,712
기타	150	66	83	44	55	57
노인만으로 구성	107	105	114	140	225	305
가구주+혈연	18	23	48	59	108	149
가구주+비혈연	85	81	66	80	114	154
기타	4	1	0	1	3	2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						
비부부가구	2.7	2.8	2.9	3.6	4.9	6.4
노인가구주	0.8	1.1	2.2	2.6	4.3	5.2
가구주+혈연	5.2	5.2	4.1	5.2	5.7	8.3
가구주+비혈연	2.6	1.5	0.0	2.2	5.2	3.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3. 2세대 가구

가. 2세대 가구의 주요 특성

1) 2세대 가구의 세부유형

2세대 가구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부부+자녀를 기본 핵으로 구성하고 있는 가구는 63,050가구로 나타난다. 이들 가구 중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는 61,227가구로 전체의 97.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부부+자녀+기타 친인척으로 구성된 가구가 839가구(1.3%), 부부+자녀+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가 702가구(1.1%), 부부+자녀+비혈연으로 구성된 가구가 205가구(0.3%), 부부+자녀+혈연+비혈연으로 구성된 가구가 77가구(0.1%)로 나타난다.

〈표 4-30〉 2세대 부부+자녀 가구의 동거인에 따른 분류, 2010

(단위: 가구, %)

	규모	구성비
전체	63,050	100.0
부부+자녀	61,227	97.1
부부+자녀+형제자매	702	1.1
부부+자녀+기타친인척	839	1.3
부부+자녀+비혈연	205	0.3
부부+자녀+혈연+비혈연	77	0.1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부 또는 모 + 자녀의 기본 핵으로 구성된 가구를 살펴보면, 부+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총 3,720가구로 나타난다. 이들 가구 중 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는 3,460가구로 전체의 대부분(93.0%)을 차지하고 있다.

모+자녀가구는 11,886가구로 부+자녀 가구보다 그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가구 중 96%는 모+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로 나타난다.

〈표 4-31〉 2세대 부/모+자녀 가구의 동거인에 따른 분류, 2010

(단위: 가구, %)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전체	3,720	100.0	전체	11,886	100.0
부+자녀	3,460	93.0	모+자녀	11,356	95.5
부+자녀+형제자매	71	1.9	모+자녀+형제자매	151	1.3
부+자녀+기타친인척	100	2.7	모+자녀+기타친인척	212	1.8
부+자녀+비혈연	72	1.9	모+자녀+비혈연	129	1.1
부+자녀+혈연+비혈연	17	0.5	모+자녀+혈연+비혈연	38	0.3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전체 조손가구는 1,431가구로 나타난다. 이들 중 46.9%는 조모+손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46.5%는 조부모+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부+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6.6%로 낮은 수준이다.

〈표 4-32〉 2세대 조손가구의 세부 분류, 2010

(단위: 가구, %)

	규모	구성비
전체	1,431	100.0
조부모+손자녀	665	46.5
조부+손자녀	95	6.6
조모+손자녀	671	46.9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부부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2세대 가구는 총 1,855가구로 나타난다. 이들 가구의 동거인에 따라 분류를 세분화하면, 부부와 남성의 부모가 함께 사는 가구가 1,596가구로 86.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부부와 여성의 부모가 동거하는 경우로 이들은 249가구로 13.4%를 차지하

고 있다. 부부가 양쪽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3,433가구로 나타난다. 우선 남성 가구주가 본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2,521가구로 73.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 가구주가 본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839가구(24.4%)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 가구주가 남성의 부모(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49가구(1.4%)로 나타난다.

〈표 4-33〉 2세대 부부+부모 또는 가구주+부모 가구의 세부 분류, 2010

(단위: 가구, %)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부부+부모	1,855	100.0	가구주+부모	3,433	100.0
부부+남성의 부모	1,596	86.0	남성+남성 부모	2,521	73.4
부부+여성의 부모	249	13.4	남성+여성 부모	23	0.7
부부+양 부모	10	0.5	남성+양 부모	1	0.0
			여성+여성 부모	839	24.4
			여성+남성 부모	49	1.4
			여성+양 부모	-	0.0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2) 맞벌이 가구

부부+자녀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29,110가구로 전체의 4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 유형은 부부+자녀+비혈연 가구인데, 이들 가구의 55.1%가 맞벌이로 나타난다. 이러한 가구는 가사나 육아에 대한 외부의 도움을 통해 맞벌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부부와 자녀만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혈연 또는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서

맞벌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부+부모로 구성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144가구로 7.8%에 불과하다. 부부+남성의 부모로 구성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8.0%, 부부+여성의 부모로 구성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0%로 나타난다. 이들 가구의 경우 부모 부양을 이유로 부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는 어려워 맞벌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34〉 2세대 가구: 맞벌이 부부가구, 2010

	전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율
부부+자녀(전체)	63,050	29,110	33,940	46.2
부부+자녀	61,227	28,229	32,998	46.1
부부+자녀+형제자매	702	315	387	44.9
부부+자녀+기타친인척	839	414	425	49.3
부부+자녀+비혈연	205	113	92	55.1
부부+자녀+혈연+비혈연	77	39	38	50.6
부부+부모(전체)	1,855	144	1,711	7.8
부부+남성의 부모	1,596	127	1,469	8.0
부부+여성의 부모	249	15	234	6.0
부부+양 부모	10	2	8	20.0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2)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부부+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의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라 부부의 돌봄 내지 양육 부담이 달라질 것이다. 특히, 5세 이하의 자녀는 부모의 돌봄 부담이 큰 시기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부부+자녀 가구 중 5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24.3%로 나타난다. 부부+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은 24.2%이며, 부부+자녀+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중 그 자녀가 5세 미만인 비율은 48.6%로 나타난다. 친인척 및 비혈연인과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20% 수준으로 나타난다.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체 부부+자녀 가구의 34.7%는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맞벌이 비율은 부부+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부부+자녀 핵을 중심으로 혈연(형제자매나 친인척)이나 비혈연인과 동거하는 경우에 다소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부부+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에서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34.5%로 나타나는 반면, 부부+자녀+형제자매 가구의 경우 37.0%, 부부+자녀+기타 친인척 가구의 경우 36.7%로 나타난다. 부부+자녀+비혈연 가구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요컨대, 어린 자녀의 양육과 부부의 경제활동을 양립하기 위하여 혈연이나 비혈연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4-35〉 부부+자녀(5세 이하) 가구: 부부의 경제활동상태, 2010

(단위: 가구, %)

	부부+자녀		부부+5세 이하 자녀가구			
	가구 전체	소계	전체 대비(%)	경황상태		
				맞벌이	홀벌이	비경제활동
전체	63,050	15,342	24.3	5,319	9,480	543
부부+자녀	61,227	14,791	24.2	5,105	9,160	526
부부+자녀+형제자매	702	341	48.6	126	203	12
부부+자녀+기타친인척	839	169	20.1	62	102	5
부부+자녀+비혈연	205	41	20.0	26	15	0
부부+자녀+혈연+비혈연	77	0	0.0	0	0	0
구성비						
전체		100.0	-	34.7	61.8	3.5
부부+자녀		100.0	-	34.5	61.9	3.6

	부부+자녀 가구 전체	부부+5세 이하 자녀가구				
		소계	전체 대비(%)	경황상태		
				맞벌이	홀벌이	비경제활동
부부+자녀+형제자매		100.0	-	37.0	59.5	3.5
부부+자녀+기타친인척		100.0	-	36.7	60.4	3
부부+자녀+비혈연		100.0	-	63.4	36.6	0
부부+자녀+혈연+비혈연		-	-	-	-	-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전체 부+자녀 가구 중 7.1%가 5세 이하 미혼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중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은 6.5%로 나타나는 반면, 형제자매나 친인척 등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5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만큼 이들 가구의 경우 친인척이나 비혈연인 등의 도움으로 자녀 양육 등을 지원받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 가구의 87.2%는 남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참여 모두에서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

〈표 4-36〉 부+자녀(5세 이하) 가구: 부의 경제활동상태, 2010

(단위: 가구, %)

	부+ 자녀가구 전체	부+5세 이하 자녀가구					
		소계	전체 대비(%)	경황상태			
				유업	무업	유업율	무업율
전체	3,720	265	7.1	231	34	87.2	12.8
부+자녀	3,460	225	6.5	198	27	88.0	12.0
부+자녀+형제자매	71	13	18.3	11	2	84.6	15.4
부+자녀+기타 친인척	100	16	16.0	11	5	68.8	31.3
부+자녀+비혈연	72	8	11.1	8	0	100.0	0.0
기타	17	3	17.6	3	0	100.0	0.0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전체 모+자녀 가구 중 5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은 5.7%로 나타난다. 모+자녀 가구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모+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의 5.6%, 모+자녀+형제자매 가구의 10.6%, 모+자녀+기타 친인척 가구의 5.2%, 모+자녀+비혈연 가구의 7.8% 등으로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혈연이나 비혈연 등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가구는 부+자녀 가구와 마찬가지로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 지원을 받기 위함일 것이다.

한편, 모+5세 이하 자녀 가구의 54.3%는 여성이 유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부+자녀 가구의 유업비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자녀의 교육이나 직업 등을 이유로 부부가 떨어져 사는 이른바 기러기 가족일 경우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의 유업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어린 자녀와 사는 한부모 가구나 미혼모 가구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린 자녀 양육 부담에 더해 노동시장참여 제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표 4-37〉 모+자녀(5세 이하) 가구: 모의 경제활동상태, 2010

(단위: 가구, %)

	모+자녀가구 전체	모+5세 이하 자녀가구					
		소계	전체 대비(%)	경제활동상태			
				유업	무업	유업율	무업율
전체	11,886	676	5.7	367	309	54.3	45.7
모+자녀	11,356	632	5.6	338	294	53.5	46.5
모+자녀+형제자매	151	16	10.6	8	8	50.0	50.0
모+자녀+기타 친인척	212	11	5.2	9	2	81.8	18.2
모+자녀+비혈연	129	10	7.8	7	3	70.0	30.0
모+자녀+혈연+비혈연	38	7	18.4	5	2	71.4	28.6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3) 25세 이상 미혼자녀와 거주하고 있는 가구

25세 이상의 미혼자녀 유무는 성년 미혼인구의 부모와의 독립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전체 부모+자녀 가구 중 25세 이상 미혼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22.7%로 나타난다. 부부+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중에는 22.8%, 부부+자녀+형제자매 가구의 경우 11.3%, 부부+자녀+기타 친인척 가구의 경우 25.3%, 부부+자녀+비혈연 가구의 경우 30.2%가 25세 미혼자녀가 포함된 가구로 나타난다.

이들 가구는 늦어지는 졸업이나 취업 그리고 만혼화 경향으로 미혼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하여 부모와 함께 살며 부모에게 의존하는 소위 말하는 썬더족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세대를 부양하는 가구일 수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표 4-38〉 부부 + 자녀(25세 이상 미혼) 가구, 2010

(단위: 가구, %)

	전체가구	부부+25세 이상 미혼 자녀	
		소계	전체 대비(%)
부부가구(전체)	63,050	14,325	22.7
부부+자녀	61,227	13,960	22.8
부부+자녀+형제자매	702	79	11.3
부부+자녀+기타 친인척	839	212	25.3
부부+자녀+비혈연	205	62	30.2
부부+자녀+혈연+비혈연	77	12	15.6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전체 부+자녀 가구의 32.3%는 25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는 33.1%, 부+자녀+형제자매 가구의 22.1%, 부+자녀+기타 친인척 가구의 22.0%, 부+자녀+비혈연 가구

의 22.2%가 25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부+자녀 핵 이외의 혈연 또는 비혈연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25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둔 가구는 부+자녀 핵으로만 구성된 가구에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전체 모+자녀 가구의 경우 부+자녀 가구에 비해 25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의 규모도 크고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모+자녀 가구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모+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의 42.5%, 모+자녀+형제자매 가구의 26.5%, 모+자녀+기타 친인척 가구의 37.3%, 모+자녀+비혈연 가구의 36.4%가 25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자녀 가구에서 살펴보았듯이 25세 이상의 미혼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거나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볼 수 있다.

〈표 4-39〉 부 또는 모 + 자녀(25세 이상 미혼) 가구, 2010

(단위: 가구, %)

	전체가구	부/모+25세 이상 미혼자녀	
		소계	전체 대비(%)
부+자녀가구(전체)	3,720	1,202	32.3
부+자녀	3,460	1,145	33.1
부+자녀+형제자매	71	15	21.1
부+자녀+기타 친인척	100	22	22.0
부+자녀+비혈연	72	16	22.2
부+자녀+혈연+비혈연	17	4	23.5

	전체가구	부/모+25세 이상 미혼자녀	
		소계	전체 대비(%)
모+자녀가구(전체)	11,886	5,000	42.1
모+자녀	11,356	4,827	42.5
모+자녀+형제자매	151	40	26.5
모+자녀+기타 친인척	212	79	37.3
모+자녀+비혈연	129	47	36.4
모+자녀+혈연+비혈연	38	7	18.4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4) 18세 이하의 손자녀를 둔 조손가구

조손가구의 경우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두었다면 돌봄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다. 전체 조손가구 중 18세 미만의 미혼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75.4%로 나타난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부모+손자녀 가구의 경우 87.5%, 조부+손자녀 가구의 경우 73.7%, 조모+손자녀 가구의 경우 63.6%가 18세 미만의 미혼 손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40〉 조손가정: 손자녀 연령, 2010

(단위: 가구, %)

	손자녀 연령		
	계	18세 미만 1명 이상	18세 미만 없음
전체	1,431	1,079	352
조부모+손자녀	665	582	83
조부+손자녀	95	70	25
조모+손자녀	671	427	244
전체	100.0	75.4	24.6
조부모+손자녀	100.0	87.5	12.5
조부+손자녀	100.0	73.7	26.3
조모+손자녀	100.0	63.6	36.4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나. 2세대가구의 변동 추이

1) 전체 가구

자녀를 둔 2세대가구(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는 1985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세대 가구의 증가 규모는 1인가구나 1세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확대가족에서 부부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으로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한편, 부부 핵 그리고 1인 단독 가구로의 분화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세대 가구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부부+자녀 가구가 동 기간 동안 1.3배 증가한데 비해, 부+자녀 가구는 3.5배, 모+자녀 가구는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 내 자녀의 기·미혼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부부+미혼자녀 1.2배, 부부+기혼자녀 4.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미혼자녀는 3.7배, 부+기혼자녀는 4.9배, 모+미혼자녀는 1.8배, 모+기혼자녀는 6.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세대 가구에서의 특이점은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가구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기혼자녀와의 동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나 생활비 절약 등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결혼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신갱거루족 또는 부메랑족이 해당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고령화로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함께 사는 가구일 수 있다.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여전히 그 규모가 절대적으로 높은데, 이들 가구의 경우 미혼자녀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고학력화, 청년 실업 증가, 고용 불안정, 주택비 상승 등으로 독립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160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표 4-41〉 '2세대 가구' 변동 추이

(단위: 가구,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0/'85
2세대가구(전체)	55,972	66,035	74,059	78,103	76,007	76,043	1.4
부부+자녀	48,905	57,804	65,037	67,786	63,631	61,227	1.3
부부+미혼자녀	48,293	57,162	64,374	67,044	62,990	60,264	1.2
부부+기혼자녀	173	248	348	444	481	730	4.2
부부+기미혼자녀	439	394	315	298	160	233	0.5
부+자녀	980	1,420	1,693	2,125	2,679	3,460	3.5
부+미혼자녀	888	1,343	1,542	1,855	2,522	3,258	3.7
부+기혼자녀	32	53	77	98	119	157	4.9
부+기미혼자녀	60	24	74	172	38	45	0.8
모+자녀	6,087	6,811	7,329	8,192	9,697	11,356	1.9
모+미혼자녀	5,860	6,560	6,980	7,788	9,157	10,487	1.8
모+기혼자녀	104	143	241	284	438	716	6.9
모+기미혼자녀	123	108	108	120	102	153	1.2
부부+자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부부+미혼자녀	98.7	98.9	99.0	98.9	99.0	98.4	-
부부+기혼자녀	0.4	0.4	0.5	0.7	0.8	1.2	-
부부+기미혼자녀	0.9	0.7	0.5	0.4	0.3	0.4	-
부+자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부+미혼자녀	90.6	94.6	91.1	87.3	94.1	94.2	-
부+기혼자녀	3.3	3.7	4.5	4.6	4.4	4.5	-
부+기미혼자녀	6.1	1.7	4.4	8.1	1.4	1.3	-
모+자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모+미혼자녀	96.3	96.3	95.2	95.1	94.4	92.3	-
모+기혼자녀	1.7	2.1	3.3	3.5	4.5	6.3	-
모+기미혼자녀	2.0	1.6	1.5	1.5	1.1	1.3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맞벌이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부부+미혼자녀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1985년 11,775가구에서 2010년 27,863가구로 2.4배 증가하였다. 전체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24.4%에서 46.2%로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일인부양체계가 우세하였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이인부양체계로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 가구의 경우 미혼자녀 돌봄과 경제활동참여 간 양립에 대한 욕구가 클 것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표 4-42〉 ‘부부+미혼자녀’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변동 추이

(단위: %, 가구)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0/'85
부부+미혼자녀	48,293	57,162	64,374	67,044	62,990	60,264	1.2
맞벌이	11,775	14,083	19,152	22,057	21,573	27,863	2.4
비맞벌이	36,518	43,079	45,222	44,987	41,417	32,401	0.9
맞벌이%	24.4	24.6	29.8	32.9	34.2	46.2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2)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미혼자녀를 둔 2세대가구 중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1985년 39.5%에서 2010년 21.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경우 동 기간 동안 43.4%에서 24.5%로 감소하였다. 부+미혼자녀 가구의 경우 동 기간 동안 11.8%에서 6.8%로 감소하였다. 모+미혼자녀 가구의 경우 동 기간 동안 11.3%에서 6.0%로 감소하였다.

출산 감소에 따라 어린자녀를 둔 2세대가구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부 또는 모 혼자 5세 이하의 미혼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자녀교육이나 직업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이거

나,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구일 것이다. 특히,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표 4-43〉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2세대 가구의 변동 추이

(단위: %, 가구)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체	55,041	65,065	72,896	76,687	75,477	74,009
5세이하 자녀 가구	21,715	20,663	23,468	22,771	18,007	15,645
(비율)	39.5	31.8	32.2	29.7	23.9	21.1
부부+미혼자녀	48,293	57,162	64,374	67,044	62,990	60,264
5세 이하 자녀 있음	20,945	20,124	22,882	22,060	17,199	14,791
(비율)	43.4	35.2	35.5	32.9	27.3	24.5
부+미혼자녀	888	1,343	1,542	1,855	2,668	3,258
5세 이하 자녀 있음	105	111	94	152	146	223
(비율)	11.8	8.3	6.1	8.2	5.5	6.8
모+미혼자녀	5,860	6,560	6,980	7,788	9,819	10,487
5세 이하 자녀 있음	665	428	492	559	662	631
(비율)	11.3	6.5	7.0	7.2	6.7	6.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5세 이하 어린자녀를 두고 있는 2세대 부부가구 중 부부가 맞벌이하는 비율은 1985년 15.8%에서 2010년 34.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부+5세 이하 자녀 가구의 경우 부의 경제활동상태가 유업인 비율은 동 기간 76.2%에서 87.9%로 높아졌으며, 모+5세 이하 자녀 가구의 경우 모의 유업 비율은 동 기간 40.9%에서 53.4%로 각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어린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 중 부모 모두, 부 혹은 모가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자녀 돌봄 부담이 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4-44〉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2세대 가구: 부부 및 부/모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가구)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부부+미혼자녀	20,945	20,124	22,882	22,060	17,199	14,791
맞벌이	3,302	2,964	4,626	5,256	4,366	5,105
(맞벌이 비율)	15.8	14.7	20.2	23.8	25.4	34.5
부+미혼자녀	105	111	94	152	146	223
유업	80	94	79	122	117	196
(유업율)	76.2	84.7	84.0	80.3	80.1	87.9
모+미혼자녀	665	428	492	559	662	631
유업	272	219	225	269	304	337
(유업율)	40.9	51.2	45.7	48.1	45.9	53.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3) 25세 이상 미혼자녀를 둔 가구

미혼자녀를 두고 있는 2세대 가구 중 25세 이상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1985년 9.1%에서 2010년 26.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독립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썬더족 등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로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도 포함될 것이다. 가구 유형을 세분화하여 25세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미혼자녀 가구 중 25세 이상 미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비율은 동 기간 동안 7.3%에서 22.8%로 높아졌다. 부+미혼자녀 가구의 경우 동 기간 19.0%에서 34.0%, 모+미혼자녀 가구의 경우 동 기간 22.6%에서 44.7%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만혼, 실업 등으로 미혼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여 생활하는 가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모세대는 지속되는 자녀 부양으로 노후 준비 등이 충분치 않을 수 있고 이는 가족 갈등, 노후 빈곤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표 4-45〉 25세 이상 미혼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2세대 가구의 변동 추이

(단위: %, 가구)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체	55,041	65,065	72,896	76,687	74,669	74,009
25세 이상 미혼자녀 (비율)	5,007 9.1	6,767 10.4	9,079 12.5	12,282 16.0	16,006 21.4	19,533 26.4
부부+미혼자녀	48,293	57,162	64,374	67,044	62,990	60,264
25세 이상 미혼자녀 (비율)	3,516 7.3	4,698 8.2	6,537 10.2	9,068 13.5	11,555 18.3	13,738 22.8
부+미혼자녀	888	1,343	1,542	1,855	2,522	3,258
25세 이상 미혼자녀 (비율)	169 19.0	243 18.1	324 21.0	414 22.3	729 28.9	1,109 34.0
모+미혼자녀	5,860	6,560	6,980	7,788	9,157	10,487
25세 이상 미혼자녀 (비율)	1,322 22.6	1,826 27.8	2,218 31.8	2,800 36.0	3,722 40.6	4,686 44.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4) 조손가정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조손가구는 1985년 730가구에서 2010년 1,431가구로 2배 증가하였다. 세부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조부모+손자녀’ 가구는 동 기간 동안 2.5배, ‘조부+손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5.3배, 그리고 ‘조모+손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형 중 ‘조부+손자녀’ 가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가구 규모면에서 ‘조모+손자녀’ 가구의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조부모+손자녀’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조부+손자녀’ 가구의 경우 증가세는 빠르게 나타나나,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조부모+손자녀’ 가구의 비율은 1985년 35.9%에서 2010년 46.5%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조부+손자녀’ 가구의 비율은 동 기간 동안 2.5%에서 6.6%로 높아졌다. 한편, ‘조모+손자

녀' 가구의 비율은 동 기간 동안 61.6%에서 46.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손가구에는 손자녀 부모의 이혼, 별거 등으로 장기간 조부모와 손자녀가 사는 가구가 있을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맞벌이 증가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가구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조부모는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정서(김양희·백선아, 2007; 장승옥·권은정, 2010에서 재인용)를 경험할 수 있으며,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장승옥·권은정, 2010). 특히, 조손가정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조모+손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가 필요하다.

〈표 4-46〉 조손 가구의 변동 추이

(단위: %, 가구)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0/'85
조손가정(전체)	730	872	942	1,066	1,411	1,431	2.0
조부모+손자녀	262	341	376	504	746	665	2.5
조부+손자녀	18	29	26	28	36	95	5.3
조모+손자녀	450	502	540	534	629	671	1.5
조손가정(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조부모+손자녀	35.9	39.1	39.9	47.3	52.9	46.5	-
조부+손자녀	2.5	3.3	2.8	2.6	2.6	6.6	-
조모+손자녀	61.6	57.6	57.3	50.1	44.6	46.9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조손가구 중에서도 손자녀가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들 가구는 1985년 616가구에서 2010년 1,079가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구가 전체 조손가구 중 차지하는 비

율은 동 기간 동안 84.4%에서 75.4%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세 이하 손자녀가 있는 가구의 증가율보다 전체 조손가정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손가구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조부모+손자녀 가구 중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1985년 89.7%에서 1995년 92.3%로 높아진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0년 87.5%로 낮아졌다. 조부+손자녀 가구 중 비율은 1985년 83.3%에서 감소하다가 최근에 다소 높아져 2010년에 73.7%로 나타났다. 조모+손자녀 가구 중 비율은 동 기간 동안 81.3%에서 60%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비중은 다소 낮아졌다 할지라도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의 경우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성장의 시기에 있는 손자녀에게 여러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박경애 외, 2012)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4-47〉 18세 이하 손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조손가구의 변동 추이

(단위: %, 명)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0/'85
조손가정(전체)	730	872	942	1,066	1,411	1,431	2.0
18세이하 손자녀	616	743	782	839	1,090	1,079	1.8
(비율)	84.4	85.2	83.0	78.7	77.3	75.4	-
조부모+손자녀	262	341	376	504	746	665	2.5
18세이하 손자녀	235	313	347	461	675	582	2.5
(비율)	89.7	91.8	92.3	91.5	90.5	87.5	-
조부+손자녀	18	29	26	28	36	95	5.3
18세이하 손자녀	15	22	18	17	26	70	4.7
(비율)	83.3	75.9	69.2	60.7	72.2	73.7	-
조모+손자녀	450	502	540	534	629	671	1.5
18세이하 손자녀	366	408	417	361	389	427	1.2
(비율)	81.3	81.3	77.2	67.6	61.8	63.6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4. 3세대가구

가. 전체 가구

3세대 가구는 부부+자녀+부모로 구성된 핵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²⁵⁾ 전체 3세대 가구는 1985년 9,323가구에서 2010년 6,856가구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세부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부부+자녀+부모로 구성된 가구는 1985년 8,552가구에서 2010년 5,682가구로 감소한 반면, 부+자녀+부모로 구성된 가구는 동 기간 2.0배, 모+자녀+부모로 구성된 가구는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가구의 경우, 3세대가 함께 거주하면서 부부세대(또는 가구주)가 부모 부양과 자녀 부양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를 통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는 가구일 수 있을 것이다. 부부+자녀+부모 가구가 그 비중은 여전히 3세대 가구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나 점차 감소하고 부 또는 모+자녀+부모로 구성된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가구의 경우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모 등 조력자의 도움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한편, 최근 신깡거루족, 부메랑족 등과 같이 결혼 후에도 자녀양육 등을 이유로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부부+자녀+부모 가구가 줄어든 것은 핵가족 중심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함께 살며 부모에게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기보다 인근에 거주하며 서로의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반영될 결과일 것이다.

25) 3세대 가구에는 부부+자녀+손자녀 가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족 구성과 결혼 또는 출산행태 간 연관성을 분석한다는 차원에서 부부+자녀 핵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표 4-48〉 3세대 가구 변동 추이

(단위: %, 가구)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0/'85
3세대 가구(전체)	9,323	8,895	8,856	8,431	7,242	6,856	0.7
부부+자녀+부모	8,552	8,090	7,949	7,348	6,157	5,682	0.7
부+자녀+부모	330	411	504	651	618	661	2.0
모+자녀+부모	441	394	403	432	467	513	1.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부부+자녀+부모	91.7	90.9	89.8	87.2	85.0	82.9	-
부+자녀+부모	3.5	4.6	5.7	7.7	8.5	9.6	-
모+자녀+부모	4.7	4.4	4.6	5.1	6.4	7.5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나. 맞벌이 가구

3세대 부부 가구(부부+자녀+부모) 중 맞벌이 가구 규모는 1985년 3,690가구에서 2010년 3,364가구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 3세대 부부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43.1%에서 59.2%로 증가하였다. 3세대 가구에서 부부세대는 자녀 돌봄과 부모 부양의 이중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논의해온 바와 같이 맞벌이를 지속하기 위하여 자녀양육에 대해 부모의 지원을 받는 가구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49〉 3세대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변동 추이

(단위: %, 가구)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0/'85
부부+자녀+부모	8,552	8,090	7,949	7,348	6,157	5,682	0.7
맞벌이	3,690	3,164	3,584	3,511	3,087	3,364	0.9
비맞벌이	4,862	4,804	4,365	3,834	3,069	2,318	0.5
(맞벌이 비율)	43.1	39.1	45.1	47.8	50.1	59.2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다.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3세대 가구 중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미혼자녀를 둔 전체 3세대 가구 중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1985년 41.8%에서 2010년 2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부부+미혼자녀+부모 가구의 경우 동 기간 43.8%에서 23.6%로, 부+미혼자녀+부모로 구성된 가구는 23.4%에서 7.5%로, 모+미혼자녀+부모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16.3%에서 1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3세대의 확대가족이 줄어드는 경향 등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표 4-50〉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3세대 가구의 변동 추이

(단위: %, 가구)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0/'85
부부/부/모+미혼자녀+부모	9,236	8,827	8,784	8,349	7,195	6,807	0.7
5세 이하 자녀 가구	3,859	2,438	2,464	2,224	1,715	1,450	0.4
(비율)	41.8	27.6	28.1	26.6	23.8	21.3	-
부부+미혼자녀+부모	8,481	8,033	7,904	7,297	6,122	5,647	0.7
5세이하 자녀 있음	3,713	2,348	2,356	2,050	1,579	1,334	0.4
(비율)	43.8	29.2	29.8	28.1	25.8	23.6	-
부+미혼자녀+부모	320	405	488	628	610	651	2.0
5세이하 자녀 있음	75	56	62	112	71	49	0.7
(비율)	23.4	13.8	12.7	17.8	11.6	7.5	-
모+미혼자녀+부모	435	389	392	424	463	509	1.2
5세이하 자녀 있음	71	34	46	62	65	67	0.9
(비율)	16.3	8.7	11.7	14.6	14.0	13.2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3세대 부부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1985년 43.1%에서 2010년 59.2%로 증가하였다. 부+자녀+부모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유업인 비율은 동 기간 86.3%에서 82.6%로 감소한 반면, 모+자녀+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주가 유업인 비율이 67.1%에서 71.9%로 다소 상승하였다.

부부(또는 부/모)+미혼자녀+부모 가구는 핵가족화 경향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맞벌이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모와의 동거를 통해 자녀양육 등에 대한 도움을 받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의 특성도 어느 정도 반영될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51〉 부부+자녀(5세 이하)+부모 가구: 부부 및 부/모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가구)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0/'85
부부+미혼자녀+부모	8,481	8,033	7,904	7,297	6,122	5,647	0.7
맞벌이	3,654	3,139	3,566	3,492	3,072	3,342	0.9
맞벌이 비율(%)	43.1	39.1	45.1	47.9	50.2	59.2	-
부+미혼자녀+부모	320	405	488	628	610	651	2.0
유업	276	345	425	478	484	538	1.9
유업율(%)	86.3	85.2	87.1	76.1	79.3	82.6	-
모+미혼자녀+부모	435	389	392	424	463	509	1.2
유업	292	272	273	289	326	366	1.3
유업율(%)	67.1	69.9	69.6	68.2	70.4	71.9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라. 25세 이상 미혼자녀를 둔 가구

미혼자녀를 둔 3세대 가구 중 25세 이상의 미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는 1985년 571가구(6.1%)에서 2010년 1,226가구(17.9%)로 2.1배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5세 이상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부부+미혼자녀+부모의 경우 동 기간 5.8%에서 17.6%로 증가하였다. 부+미혼자녀+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8.8%에서 17.2%로 그리고 모+미혼자녀+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11.3%에서 21.4%로 증가하였다. 최근의 만혼화, 실업 및 고용불안정, 주택비용 부담 상승 등에 따른 자녀의 늦어지는 독립 시기 등에 기인하는 결과일 것이다.

〈표 4-52〉 25세 이상 미혼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3세대 가구의 변동 추이

(단위: 가구,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0/'85
부부/부/모+미혼자녀+부모	9,323	8,895	8,856	8,431	7,242	6,856	0.7
25세 이상 미혼자녀 가구	571	656	760	1,019	1,031	1,226	2.1
(비율)	6.1	7.4	8.6	12.1	14.2	17.9	-
부부+미혼자녀+부모	8,552	8,090	7,949	7,348	6,157	5,682	0.7
25세 이상 미혼자녀 있음	492	550	652	867	878	1,002	2.0
(비율)	5.8	6.8	8.2	11.8	14.3	17.6	-
남성+미혼자녀+부모	330	411	504	651	618	661	2.0
25세 이상 미혼자녀 있음	29	39	31	55	47	114	3.9
(비율)	8.8	9.5	6.2	8.4	7.6	17.2	-
여자+미혼자녀+부모	441	394	403	432	467	513	1.2
25세 이상 미혼자녀 있음	50	67	77	97	106	110	2.2
(비율)	11.3	17.0	19.1	22.5	22.7	21.4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5. 종합

앞서 분석한 결과 중 결혼, 출산 등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가구에 대해 종합하도록 한다.

우선 부부가구 중 맞벌이가구의 변동 추이에 대한 결과이다. 1~4세대

부부 가구 전체 중 맞벌이 가구는 1985년 27.7%에서 2010년 47.6%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1세대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동 기간 30.9%에서 48.5%로, 2세대 가구의 경우 24.5%에서 46.1%, 3세대 가구의 경우 43.1%에서 59.2%로 증가하였다.

3세대 가구의 경우 부부세대는 소위 말하는 이중 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활동이 다른 가구에 비해 활발하거나, 또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1세대 가구의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맞벌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2세대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 돌봄에 대한 문제로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맞벌이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세대 가구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핵가족화, 여성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욕구 증가,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4-53〉 맞벌이부부 변동 추이

(단위: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체	27.7	27.8	33.4	35.7	37.5	47.6
1세대 가구	30.9	36.5	43.0	41.2	42.6	48.5
2세대 가구	24.5	24.6	29.8	32.9	34.2	46.1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24.4	24.6	29.8	32.9	34.2	46.2
3세대 가구	43.1	39.1	45.1	47.8	50.1	59.2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43.1	39.1	45.1	47.9	50.2	59.2
4세대 가구	40.5	36.4	34.2	32.3	41.9	38.3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50.4	42.9	44.8	40.0	43.1	39.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1세대 가구 중 무자녀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무자녀 부부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녀를 전혀 출산하지 않는 무자녀가구가 감소한다기보다, 1세대 가구 중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직장,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가구가 분리되어 있는 부부가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한 결과일 것이다.

〈표 4-54〉 무자녀부부 변동 추이

(단위: %, 가구)

	1985	1990	2000	2005	2010
무자녀 부부 규모	3,503	4,490	5,291	5,567	3,880
1세대 중 무자녀 부부 비율	49.6	44.1	27.6	21.3	11.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중 5세 이하가 있는 가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부부가구 중 5세 이하의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는 1985년 43.4%에서 2010년 24.5%로 감소하였다. 비부부가구의 경우 그 비중은 동 기간 12.2%에서 6.5%로 감소하였다. 대체적으로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3세대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3세대 가구 중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1985년 41.8%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21.3%로 감소하였다. 3세대 부부가구(부부+자녀+부모)에서 그 비중은 동 기간 43.8%에서 23.6%로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3세대 비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3%에서 10.0%로 감소하였다. 2세대 가구의 경우에는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비중이 39.5%에서 21.1%로 감소하였고, 특히 2세대 부부 가구에서 그 비중은 43.4%에서 24.5%로 빠르게 감소하였다.

〈표 4-55〉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중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변동 추이

(단위: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체	39.8	31.3	31.7	29.4	23.9	21.2
부부가구	43.4	34.5	34.9	32.4	27.2	24.5
비부부가구	12.2	7.2	7.4	8.3	7.0	6.5
2세대 가구	39.5	31.8	32.2	29.7	23.9	21.1
부부가구	43.4	35.2	35.5	32.9	27.3	24.5
비부부가구	11.4	6.8	6.9	7.4	6.5	6.2
3세대 가구	41.8	27.6	28.1	26.6	23.8	21.3
부부가구	43.8	29.2	29.8	28.1	25.8	23.6
비부부가구	19.3	11.3	12.3	16.5	12.7	1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25세 이상 미혼자녀를 둔 가구의 비중은 1985년 8.7%에서 2010년 25.7%로 증가하였다. 세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세대 가구 중 25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는 9.1%에서 26.4%로 증가하였으며, 3세대 가구 중에서 동 비율은 6.1%에서 17.9%까지 증가하였다.

최근 청년 실업, 고용 불안정 증가, 만혼화, 주거비용 증가 등으로 미혼 자녀들의 독립시기가 점차 늦어지면서 캥거루족 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가족 내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 및 심적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비혼 및 만혼화를 야기하고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최연실, 2014). 일본의 경우 최근에는 캥거루족에 이어 취업 악화의 장기화 등으로 35세 이상에서도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녀인 ‘중년의 캥거루족’에 대한 논의도 등장하고 있는데(최연실, 2014), 한국 사회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4-56〉 25세 이상 미혼자녀를 둔 가구 변동 추이

(단위: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체	8.7	10.0	12.0	15.6	20.8	25.7
부부가구	7.1	8.0	9.9	13.4	18.0	22.4
비부부가구	20.9	25.0	28.1	31.4	36.1	40.3
2세대 가구	9.1	10.4	12.5	16.0	21.4	26.4
부부가구	7.3	8.2	10.2	13.5	18.3	22.8
비부부가구	22.1	26.2	29.8	33.3	38.1	42.2
3세대 가구	6.1	7.4	8.6	12.1	14.2	17.9
부부가구	5.8	6.8	8.2	11.8	14.3	17.6
비부부가구	10.2	13.2	11.9	14.0	14.1	19.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제 5 장

가구 유형과 결혼·출산 행태

제1절 가구 유형과 결혼 행태

제2절 부부가구 유형과 출산 실태



5

가구 유형과 결혼·출산 행태 <<

제1절 가구 유형과 결혼 행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2012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가구유형별 결혼행태를 분석하도록 한다.

1. 1인가구의 결혼 행태

전체 1인 가구는 1985년 대비 2010년에 7.0배 증가하였다.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로는 이혼1인가구와 사별1인가구는 16.6배와 7.3배가 각각 증가하여 전체 평균보다 증가폭이 더 컸으며, 나머지 미혼1인가구와 유배우1인가구의 경우에는 각 5.9배와 6.1배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1인가구 대비 미혼1인가구의 비율은 1985년 45.5%에서 2010년 38.8%로 낮아졌으며, 유배우1인가구의 비율도 그 폭은 아주 작으나 동 기간 동안 15.4%에서 13.3%로 낮아졌다. 반면, 이혼1인가구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1985년 5.3%에서 12.5%로 증가하였으며, 사별1인가구의 비율도 33.8%에서 2005년 36.9% 증가하였으며, 다만 2010년에는 35.4%로 다소 낮아졌다.

1인가구의 혼인상태 변화는 몇몇의 시사점을 도출케 한다. 첫째, 유배우이면서도 홀로 사는 가구는 직업이나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별도의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기러기 가족, 주말부부 등이 해당될 것이다. 이들 가구의 경우 주거비나 생활비 부담 등이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에 있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유배우1인가구가 가입기 인구일 경우 출산을 억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이혼1인가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특히 황혼이혼으로 중고령층에서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신체적, 경제적 등 여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미혼1인가구의 경우, 교육이나 직업으로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가구,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개인주의 경향 증대 등으로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 비자발적 비혼가구 등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들 가구의 증가는 저출산 현상 심화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평균수명 상승 등으로 사별1인 가구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은 고령층이면서 홀로 살고 있는 가구로 사회적 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더욱 클 것이다.

〈표 5-1〉 1인가구의 가구주 혼인상태 변동 추이

(단위: 가구,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0/'85
1인 가구(전체)	6,527	10,720	16,412	22,378	32,501	45,528	7.0
미혼	2,973	5,133	7,363	9,310	13,137	17,673	5.9
유배우	1,002	1,301	1,974	2,721	3,465	6,063	6.1
사별	2,209	3,648	5,977	8,068	11,983	16,103	7.3
이혼	343	638	1,098	2,279	3,916	5,689	16.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미혼	45.5	47.9	44.9	41.6	40.4	38.8	-
유배우	15.4	12.1	12.0	12.2	10.7	13.3	-
사별	33.8	34.0	36.4	36.1	36.9	35.4	-
이혼	5.3	6.0	6.7	10.2	12.0	12.5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2. 부(父) 가구의 결혼 행태

미혼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구 내에 부(父)만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부의 혼인상태를 살펴보았다. 우선 2세대 가구에서 부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유배우 비율이 1985년 33.8%에서 2005년 19.5%로 줄어들었다가 2010년에 27.5%로 다시 높아졌다. 반대로 이혼 및 사별인 비율은 1985년 66.2%에서 2005년 80.5%로 높아졌다가 2010년에는 72.5%로 낮아졌다. 3세대 가구의 경우에 부의 유배우 비율은 1985년 33.4%에서 2005년 17.4%까지 낮아졌으나, 2010년에는 다소 상승한 23.5%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의 혼인상태가 이혼 및 사별인 비율은 1985년 66.6%에서 2005년 82.6%까지 높아진 후 2010년에는 76.5%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세대 부+미혼자녀 가구와 3세대 부+미혼자녀+부모 가구 공히 유배우 비율은 감소 경향을 보인 반면, 사별 및 이혼 비율은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직업 등을 이유로 부가 자녀들을 데리고 살고 부인이 따로 사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혼이 증가하면서 남성이 이혼 후 미혼자녀를 데리고 사는 비율이 높아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2세대 부 가구에 비해 3세대 부 가구에서 이혼·사별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는 남성이 이혼 혹은 사별 후에 미혼자녀를 데리고 살기 위해서는 부모 등의 조력자가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5-2〉 비부부가구의 가구주(남성)의 혼인상태 변동 추이

(단위: 가구,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세대 가구						
부+미혼자녀(가구)	888	1,343	1,542	1,855	2,522	3,258
유배우	33.8	33.7	24.9	23.5	19.5	27.5
이혼, 사별	66.2	66.3	75.1	76.5	80.5	72.5
3세대 가구						
부+미혼자녀+부모(가구)	320	404	488	615	610	651
유배우	33.4	32.2	22.7	22.4	17.4	23.5
이혼, 사별	66.6	67.8	77.3	77.6	82.6	76.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3. 모(母) 가구의 결혼 행태

미혼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구 내에 모(母)만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모의 혼인상태를 살펴보았다. 우선 2세대 가구(모+미혼자녀)에서 모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유배우 비율이 1985년 33.1%에서 1995년 26.6%까지 감소한 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0년에는 29.6%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사별 및 이혼인 비율은 1985년 66.9%에서 1995년 73.4%로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0년에는 70.4%로 나타났다. 3세대 가구(모+미혼자녀+부모)에서 모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비율은 대체적으로 35~40% 사이에서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사별 및 이혼인 비율은 60~65% 사이에서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다.

2세대의 모+미혼자녀 가구와 3세대 모+미혼자녀+부모 가구 공히 모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비율과 이혼·사별인 비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고 불규칙하게나마 지속되고 있다. 요컨대, 남편이 직업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가구를 형성하여 사는 가구가 증가하는 동시에 이혼 등으로 인하여 모

가 미혼자녀를 데리고 사는 가구도 거의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요인 모두 출산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출산율 변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표 5-3〉 비부부가구의 가구주(여성) 혼인상태 변동 추이

(단위: 가구,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세대 가구						
모+미혼자녀(가구)	5,860	6,560	6,980	7,788	9,157	10,487
유배우	33.1	27.0	26.6	28.1	29.4	29.6
이혼, 사별	66.9	73.0	73.4	71.9	70.6	70.4
3세대 가구						
모+미혼자녀+부모(가구)	435	389	392	424	463	509
유배우	37.9	27.2	35.7	36.6	38.7	36.3
이혼, 사별	62.1	72.8	64.3	63.4	61.3	63.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분석, 각 년도.

4. 초혼 및 재혼 부부가구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혼인이력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2012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49세 가임기 기혼여성을 대상을 부부의 혼인이력별 가구를 집계하였다. 전체적으로 '남편 초혼-부인 초혼'인 가구가 97.9%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편 재혼-부인 재혼'인 가구가 0.9%, '남편 초혼-부인 재혼'인 가구가 0.7%, '남편 재혼-부인 초혼'인 가구가 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세대 가구의 경우에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남편 초혼-부인 초혼' 가구 93.4%, '남편 재혼-부인 재혼' 가구 3.4%, '남편 초혼-부인 재혼' 가구 2.0%, '남편 재혼-부인 초혼'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세대 가구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2세대 가구의 경우에는 ‘남편 초혼-부인 초혼’ 가구 98.5%, ‘남편 재혼-부인 재혼’ 가구 0.5%, ‘남편 초혼-부인 재혼’ 가구 0.5%, ‘남편 재혼-부인 초혼’ 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세대 가구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부+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부+자녀+비혈연 가구와 부부+부모 가구의 경우 ‘남편 초혼-부인 초혼’ 가구의 비율은 부부+자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97.0%와 91.7%로 각각 나타났다. 부부+자녀+비혈연 가구의 경우에는 ‘남편 초혼-부인 재혼’ 가구가 3.0% 그리고 부부+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남편 재혼-부인 재혼’ 가구가 5.6%, ‘남편 초혼-부인 재혼’ 가구가 2.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세대 가구의 경우에는 ‘남편 초혼-부인 초혼’ 가구 98.1%, ‘남편 재혼-부인 재혼’ 가구 1.1%, ‘남편 재혼-부인 초혼’ 0.5%, ‘남편 초혼-부인 재혼’ 가구 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4세대 가구 등은 표본수가 너무 적어 일반화하기 곤란하거나 아예 사례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다.

종합하면, 1세대, 3세대, 2세대 순으로 ‘남편 초혼-부인 초혼’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남편 재혼-부인 재혼’ 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유형의 부부 결합 형태(초혼-재혼, 재혼-초혼)는 1세대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2세대와 3세대에서는 0.5%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동일 세대수 내에서는 부부만 혹은 부부+자녀만이 사는 가구보다 친인척 혹은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초혼-초혼’ 이외 유형의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4〉 부부의 혼인인력별 가구, 2012

(단위: %, 가구)

	부부혼인인력				계	(가구)
	초-초	초-재	재-초	재-재		
전체	97.9	0.7	0.5	0.9	100.0	(6,324)
1세대가구	93.4	2.0	1.1	3.4	100.0	(732)
부부	93.5	2.1	1.0	3.4	100.0	(725)
부부+혈연	85.7	0.0	14.3	0.0	100.0	(7)
부부+비혈연	-	-	-	-	-	-
2세대가구	98.5	0.5	0.4	0.5	100.0	(5,220)
부부+자녀	98.6	0.5	0.4	0.5	100.0	(5,151)
부부+자녀+혈연	-	-	-	-	-	-
부부+자녀+비혈연	97.0	3.0	0.0	0.0	100.0	(33)
부부+부모	91.7	2.8	0.0	5.6	100.0	(36)
3세대	98.1	0.3	0.5	1.1	100.0	(368)
부부+자녀+부모	98.1	0.3	0.5	1.1	100.0	(368)
4세대이상	100.0	0.0	0.0	0.0	100.0	(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2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부부가구 유형과 출산 실태

2012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가구 유형을 도출하고, 이들 가구유형별로 가임기 여성(15~49세)의 평균 출생아수를 산정하였다. 한편, 평균 출생자녀수의 경우 부인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을 경우 출산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수준을 측정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센서링효과(censoring effect)를 제외하기 위해 조사시점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수에다가 앞으로 추가하여 출산할 자녀수를 합한 개념인 기대자녀수를 선정하였다. 이상자녀수는 본인의 출산 의지나 실제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자녀수

이다. 이론적으로 이상자녀수는 실제 출생자녀수나 기대자녀수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정립되어 있다.

1. 세대별 및 세부 가구유형별 출산 실태

우선 전체적으로 평균 출생아수는 1.75명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3세대 2.00명, 2세대 1.90명, 1세대 0.5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1세대 가구의 경우 아직 출산 전이거나, 출산을 한 경우라도 다른 곳에 자녀를 맡겨 양육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아직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이 어려워 가구를 따로 형성하고 있어 평균 출생아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각 세대 내 세부 가구유형별 평균 출생자녀수도 대체적으로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곤란하다. 3세대 가구의 동거하고 있는 부모세대의 다자녀 가치관과 돌봄 조력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에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에서 출생아수가 많았던 사실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부부가구의 평균 기대자녀수는 1.96명으로 나타난다. 세대수별로는 1세대가구 1.51명, 2세대가구 2.02명, 3세대가구 2.08명으로 세대수가 작을수록 기대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1세대가구의 경우 조사시점에도 무자녀이지만 향후에도 불임, 가치관 등을 이유로 무자녀로 남아있을 부부가구가 상당 비중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세대가구에 비해 3세대가구에서 기대자녀수가 다소 큰데, 앞서의 출생자녀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모 세대와의 동거에 따른 여러 영향의 결과일 것이다.

전체 부부가구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20명으로 나타난다. 세대수별

로는 1세대가구 2.02명, 2세대가구 2.23명, 3세대가구 2.18명으로 나타난다. 평균 출생자녀수와 기대자녀수 모두 세대수와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평균 이상자녀수는 3세대 부부가구가 2세대 부부가구에 비해 다소 적게 나타난다. 이는 3세대 부부가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더 많이 출산을 하고 있으나 응답부인의 관점에서 보면 3세대가 동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수가 많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자녀수는 오히려 적게 응답한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표 5-5〉 부부가구의 가구구성별 평균 출생자녀수, 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

(단위: 명, 가구)

	출생아수	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	가구수
전체 부부 가구	1.75	1.96	2.20	(6,306)
1세대 가구	0.58	1.51	2.02	(732)
부부	0.58	1.51	2.02	(725)
부부+혈연	0.67	1.52	2.27	(7)
부부+비혈연	-	-	-	-
2세대 가구	1.90	2.02	2.23	(5,203)
부부+자녀	1.90	2.02	2.23	(5,135)
부부+자녀+혈연	1.91	1.93	2.50	(33)
부부+자녀+비혈연	-	-	-	-
부부+부모	1.09	1.49	2.09	(35)
3세대	2.00	2.08	2.18	(367)
부부+자녀+부모	2.00	2.08	2.18	(367)
4세대 이상	1.77	1.99	2.30	(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2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맞벌이 및 1인 생계모형 부부가구의 출산 실태

전체적으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평균 출생아수는 1.75명으로 비맞벌이 부부(1.76명)보다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1세대 가구의 경우에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0.61명으로 비맞벌이부부의 0.54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다. 2세대 가구의 경우에도 맞벌이부부(1.92명)가 비맞벌이부부(1.88명)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3세대 가구의 경우에는 비맞벌이 부부의 평균 자녀수가 2.05명으로 맞벌이 부부의 1.96명보다 약 0.1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5-6〉 맞벌이 및 1인생계모형 부부가구의 평균 출생자녀수

(단위: 명, 가구)

	맞벌이 가구		비맞벌이 가구	
	평균 출생자녀수	가구수	평균 출생자녀수	가구수
전체 부부 가구	1.75	(3,137)	1.76	(3,169)
1세대 가구	0.61	(418)	0.54	(314)
부부	0.60	(414)	0.55	(311)
부부+혈연	1.18	(4)	0.00	(3)
부부+비혈연	-	-	-	-
2세대 가구	1.92	(2,492)	1.88	(2,711)
부부+자녀	1.93	(2,451)	1.88	(2,684)
부부+자녀+혈연	1.88	(16)	1.93	(17)
부부+자녀+비혈연	-	-	-	-
부부+부모	1.28	(25)	0.62	(10)
3세대	1.96	(224)	2.05	(143)
부부+자녀+부모	1.96	(224)	2.05	(143)
4세대 이상	2.03	(3)	1.00	(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2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맞벌이 부부의 여부별로 평균 기대자녀수를 보면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1.95명, 비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1.97명으로 비맞벌이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출생자녀수에서는 맞벌이와 비맞벌이 가구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기대자녀수는 비맞벌이가구에 조금이나마 높게 나타난 것이다. 맞벌이가구인 경우 일-가정양립 곤란 등으로 추

가출산이 좌절되는 등으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1세대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의 기대자녀수(1.57명)가 비맞벌이가구(1.43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기대자녀수는 2.0명이 채 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불임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또는 가치관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출산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2세대 가구와 3세대 가구에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비맞벌이 가구에서 기대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 가구 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맞벌이 가구의 기대자녀수가 작다는 것은 이들의 일-가정양립 곤란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이며, 이와 같은 출산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표 5-7〉 맞벌이 및 1인생계모형 부부가구의 평균 기대자녀수

(단위: 명, 가구)

	맞벌이부부		비맞벌이부부	
	평균 기대자녀수	가구	평균 기대자녀수	가구
전체 부부 가구	1.95	(3,137)	1.97	(3,169)
1세대 가구	1.57	(418)	1.43	(314)
부부가구	1.57	(414)	1.43	(311)
부부+혈연	1.88	(4)	1.03	(3)
부부+비혈연	-	-	-	-
2세대 가구	2.00	(2,492)	2.03	(2,711)
부부+자녀	2.01	(2,451)	2.03	(2,684)
부부+자녀+혈연	1.93	(16)	1.93	(17)
부부+자녀+비혈연	-	-	-	-
부부+부모	1.54	(25)	1.38	(10)
3세대	2.04	(224)	2.15	(143)
부부+자녀+부모	2.04	(224)	2.15	(143)
4세대 이상	2.32	(3)	1.00	(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2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전체 부부 가구 중 맞벌이부부 가구의 이상자녀수가 2.21명, 비맞벌이 부부가구의 이상자녀수가 2.19명으로 맞벌이부부가 다소 크게 나타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1세대 부부가구와 2세대 부부 가구, 3세대 부부가구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한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라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는 2.2명 정도이나, 자녀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것에서 오는 자녀양육 문제, 교육 문제, 경제적 문제, 본인의 경력 관리 등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제 본인의 출산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표 5-8〉 맞벌이 및 1인생계모형 가구의 평균 이상자녀수

(단위: 명, 가구)

	맞벌이		비맞벌이	
	평균 이상자녀수	가구	평균 이상자녀수	가구
전체 부부가구	2.21	(3,137)	2.19	(3,169)
1세대 가구	2.03	(418)	2.01	(314)
부부가구	2.03	(414)	2.01	(311)
부부+혈연	2.48	(4)	2.00	(3)
부부+비혈연	-	-	-	-
2세대 가구	2.24	(2,492)	2.22	(2,711)
부부+자녀 가구	2.24	(2,451)	2.22	(2,684)
부부+자녀+혈연	2.21	(16)	2.78	(17)
부부+자녀+비혈연	-	-	-	-
부부+부모	2.13	(25)	1.98	(10)
3세대	2.23	(224)	2.11	(143)
부부+자녀+부모	2.23	(224)	2.11	(143)
4세대 이상	2.40	(3)	2.00	(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2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편, 일반적으로 맞벌이부부가 비맞벌이부부에 비해 출생자녀수, 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 등이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일부 결과에서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은 맞벌이가구 중에는 출산을 거의 완료한 고연령층의 여성들이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임시일용직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비맞벌이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등으로 일시적으로나 장기간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가구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여가 M커브를 이루고 있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3. 부부가구의 혼인상태별 출산 실태

전체적으로 ‘남편 초혼-부인 재혼’ 가구의 평균 출생자녀수가 2.1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편 초혼-부인 초혼’ 가구 1.75명, ‘남편 재혼-부인 재혼’ 가구 1.70, ‘남편 재혼-부인 초혼’ 가구 0.98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남편 초혼-부인 재혼’ 가구의 경우 부인이 2번 이상 결혼을 함으로서 그만큼 출생자녀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남편 재혼-부인 초혼’ 가구의 경우에는 이미 남편이 전 부인과 자녀를 두고 있는 등의 이유로 초혼인 부인의 출산이 억제되는 경향이 있어 평균 출생자녀수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편 재혼-부인 재혼’ 가구의 평균 출생자녀수는 ‘남편 초혼-부인 재혼’ 가구의 평균 출생자녀수와도 비교할 수 있다. 부인의 경우 재혼으로 공통적이거나 ‘남편 재혼-부인 재혼’ 가구에 비해 ‘남편 초혼-부인 재혼’ 가구의 평균 출생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편 재혼-부인 재혼’ 가구의 경우 남편이나 부인 모두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자녀(들)를 두고 있어 고연령, 양육 부담 등으로 인하

여 추가적인 출산이 축소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부의 혼인이력별 평균 출생자녀수의 차이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세대별 및 세부 가구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곤란한 유형은 해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우선 1세대 부부가구의 경우 '남편 재혼-부인 재혼' 가구의 평균 출생자녀수는 1.38명으로 '남편 초혼-부인 초혼' 가구의 평균 출생자녀수인 0.54명에 비해 0.8명 정도 많게 나타난다. 즉, 1세대 부부가구 중 '남편 초혼-부인 초혼' 가구는 비교적 젊은 부부로서 아직 출산이 완료되지 않아 평균 출생자녀수가 1명 미만이며, 이와 달리 '남편 재혼-부인 재혼' 가구의 경우에는 부인의 혼인회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 평균 출생자녀수도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세대 가구는 실질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모든 부부의 혼인이력에서 1세대 가구에 비해 평균 출생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2세대가구의 평균출생아수는 '남편 초혼-부인 재혼' 가구 2.40명, '남편 재혼-부인 재혼' 가구 2.00명, '남편 초혼-부인 초혼' 가구의 경우 1.89명, '남편 재혼-부인 초혼' 가구 1.3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2세대가구(대체적으로 '부부+자녀' 가구)의 부부 혼인이력별 평균 출생자녀수는 대체적으로 전체 가구의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차이점으로는 '남편 재혼-부인 재혼' 가구의 평균 출생자녀수가 '남편 초혼-부인 초혼' 가구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전체 가구에서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으나 2세대 가구의 결과는 부부의 혼인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혼인회수가 많은 경우에 출생자녀수가 더 많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표 5-9) 부부가구의 혼인상태별 평균 출생자녀수

(단위: 명, 가구)

	남편 초혼- 부인 초혼		남편 초혼- 부인 재혼		남편 재혼- 부인 초혼		남편 재혼- 부인 재혼	
	출생아	가구	출생아	가구	출생아	가구	출생아	가구
전체 부부 가구	1.75	(6,174)	2.19	(43)	0.98	(31)	1.70	(56)
1세대 가구	0.54	(682)	1.57	(15)	0.00	(8)	1.38	(25)
부부	0.53	(676)	1.57	(15)	0.00	(7)	1.38	(25)
부부+혈연	0.84	(6)	-	-	0.00	(1)	-	-
부부+비혈연	-	-	-	-	-	-	-	-
2세대 가구	1.89	(5,128)	2.40	(27)	1.30	(21)	2.00	(27)
부부+자녀 가구	1.90	(5,063)	2.43	(25)	1.30	(21)	2.04	(26)
부부+자녀+혈연	1.89	(32)	3.00	(1)	-	-	-	-
부부+자녀+비혈연	-	-	-	-	-	-	-	-
부부+부모	1.11	(33)	1.00	(1)	-	-	1.00	(1)
3세대	2.00	(360)	6.00	(1)	1.48	(2)	1.69	(4)
부부+자녀+부모	2.00	(360)	6.00	(1)	1.48	(2)	1.69	(4)
4세대 이상	1.75	(4)	-	-	-	-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2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센서링효과(집단 간 연령구조의 차이)를 제거한 기대자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기대자녀수는 ‘남편 초혼-부인 재혼’ 가구 2.35명, ‘남편 초혼-부인 초혼’ 가구 1.97명, ‘남편 재혼-부인 재혼’ 가구 1.79명, ‘남편 재혼-부인 초혼’ 가구 1.20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패턴은 실질적인 출생자녀수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대개 남편의 혼인상태가 초혼인 경우,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타난다. 남편이 재혼인 경우에는 기존 자녀의 양육, 고연령 등에 따른 추가 출산 곤란 등으로 출산이 억제(혹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세대 혹은 세부가구 유형들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5-10〉 부부가구의 혼인상태별 평균 기대자녀수

(단위: 명, 가구)

	남편 초혼-부인 초혼		남편 초혼-부인 재혼		남편 재혼-부인 초혼		남편 재혼-부인 재혼	
	기대 자녀수	가구수	기대 자녀수	가구수	기대 자녀수	가구수	기대 자녀수	가구수
전체 부부 가구	1.97	(6,174)	2.35	(43)	1.20	(31)	1.79	(56)
1세대 가구	1.52	(682)	1.83	(15)	0.43	(8)	1.43	(25)
부부가구	1.52	(676)	1.83	(15)	0.38	(7)	1.43	(25)
부부+혈연	1.64	(6)	-	-	1.00	(1)	-	-
부부+비혈연	-	-	-	-	-	-	-	-
부부+혈연+비혈연	-	-	-	-	-	-	-	-
2세대 가구	2.02	(5,128)	2.51	(27)	1.46	(21)	2.08	(27)
부부+자녀	2.02	(5,063)	2.55	(25)	1.46	(21)	2.12	(26)
부부+자녀+혈연	1.92	(32)	3.00	(1)	-	-	-	-
부부+자녀+비혈연	-	-	-	-	-	-	-	-
부부+부모	1.52	(33)	1.00	(1)	-	-	1.00	(1)
3세대	2.09	(360)	6.00	(1)	1.48	(2)	2.11	(4)
부부+부모+자녀	2.09	(360)	6.00	(1)	1.48	(2)	2.11	(4)
4세대 이상	1.96	(4)	-	-	-	-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2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본인의 현 혼인상태나 자녀출산 등과 무관한 것으로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자녀수 즉, 이상자녀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편 재혼-부인 재혼’ 가구 2.28명, ‘남편 초혼-부인 초혼’ 가구 2.20명, ‘남편 재혼-부인 초혼’ 가구 2.15명, ‘남편 초혼-부인 재혼’ 가구 1.90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남편과 부인이 초혼 또는 재혼으로 동일한 경우 이상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앞서의 출생자녀수나 기대자녀의 경우에는 남편이 재혼인 경우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나, 이상자녀수의 경우에는 남편이 재혼인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조금 많게 나타난다. 혼인상태에 따라 실제 출산이 억제되어 있음을 짐작케 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5-11〉 부부가구의 혼인상태별 평균 이상자녀수, 2012

(단위: 명, 가구)

	남편 초혼- 부인 초혼		남편 초혼- 부인 재혼		남편 재혼- 부인 초혼		남편 재혼- 부인 재혼	
	이상 자녀수	가구수	이상 자녀수	가구수	이상 자녀수	가구수	이상 자녀수	가구수
전체 부부 가구	2.20	(6,174)	1.90	(43)	2.15	(31)	2.28	(56)
1세대 가구	2.02	(682)	1.96	(15)	1.98	(8)	2.12	(25)
부부가구	2.02	(676)	1.96	(15)	2.06	(7)	2.12	(25)
부부+혈연	2.43	(6)	-	-	1.00	(1)	-	-
부부+비혈연	-	-	-	-	-	-	-	-
2세대 가구	2.23	(5,128)	1.79	(27)	2.13	(21)	2.45	(27)
부부+자녀	2.23	(5,063)	1.77	(25)	2.13	(21)	2.51	(26)
부부+자녀+혈연	2.48	(32)	3.00	(1)	-	-	-	-
부부+자녀+비혈연	-	-	-	-	-	-	-	-
부부+부모	2.14	(33)	1.00	(1)	-	-	1.00	(1)
3세대	2.17	(360)	4.00	(1)	2.97	(2)	2.11	(4)
부부+자녀+부모	2.17	(360)	4.00	(1)	2.97	(2)	2.11	(4)
4세대 이상	2.29	(4)	-	-	-	-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2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분석 결과 종합

제2절 정책적 제언

제3절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6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제1절 분석 결과 종합

가족은 특정한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현상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한다. 한국사회 역시 근대화, 압축적인 경제성장, 급격한 인구전환 등으로 가족이 다양하게 변화하여 왔을 것이다. 가족 모습의 다양화는 결혼이나 출산행태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은 확대가족, 핵가족 등 가족 핵의 수에 따른 모습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동거가족, 미혼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도 미흡하여 이들 가족에 대한 특성 분석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결혼 및 출산행태는 개인 단위로 발생하지 않고 가구 단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결혼이나 출산행태의 특성을 알고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구 모습의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가구 구조의 변화와 결혼 및 출산 행태를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결혼 및 출산 관련 요소들을 중심으로 가구를 재구조화하였다. 가구 재구조화를 위하여 국내외 가족 및 가구분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구구성의 분류기준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기본적으로 기존 통계청의 가구구성 분류체계에 기반을 두되, 1차적 기준으로 생물학적(인구학적) 요소, 사회경제적 요소(혼인상태, 경제활동)를 2차적 기준으로 두었다. 끝으로 국적을 초월한 가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간적 또는 지리적 속성에 근거하

여 3차적 기준을 두었다. 이들 3가지 기준 중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통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정보만을 토대로 가구를 재구조화하였다.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되, 동 조사에서 파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보완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 재구조화를 통한 가구의 주요 특성 및 시계열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첫째, 1인가구는 1985~2010년 간 7.0배 증가하였다. 만혼화 및 비혼화의 영향으로 남녀 공히 모든 연령대에서 미혼1인가구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혼1인가구의 경우, 그 규모는 작으나 증가 속도는 미혼1인가구 다음으로 높다. 사별1인가구의 경우, 고연령층 특히, 여성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고, 혼자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남성에 비해 수월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임기 연령대에서 미혼, 이혼, 사별 1인가구의 증가는 만혼화와 이혼 증가 등의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이며, 이는 출산 수준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1세대 가구는 1985~2010년 간 4.6배 증가하였다. 1세대 가구의 대부분은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이다. 이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자녀 출산을 늦추거나 출산을 전혀 하지 않는(무자녀)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함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세대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동 기간 7.2배 증가하였다. 여성의 고학력화, 경제적 부담에 대한 증가로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가 많아진 것이다. 1세대 부부가구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독립하여 다른 가구를 구성하거나, 양육 문제로 친인척 등에 맡겨져 따로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일을 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어렵

다고 느낄 경우 무자녀로 남거나 출산의향을 억제할 수 있다. 맞벌이로 자녀를 친인척 등에 맡겨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가정양립에 대한 욕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력단절이 발생하거나 출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2세대 가구(부부+자녀 또는 부/모+자녀)는 1985~2010년 기간 동안 1.4배 증가하였다. 미혼자녀와 거주하는 가구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기혼자녀와 거주하는 가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부부와 기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부모세대를 부양하기 위하여 함께 거주하거나 결혼 후 주택마련비용 부담 등으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구(신캥거루족, 부메랑족 등)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5세 이하 자녀를 둔 2세대 가구 중 맞벌이가구는 1985년 15.8%에서 2010년 34.5%로 증가하였다. 이들 가구의 경우 어린 자녀 돌봄과 직장 생활에 대한 이중부담이 있을 것이며, 이는 특히 부/모 가정일 경우 더욱 클 것이다. 한편, 25세 이상의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2세대가구도 1985년 9.1%에서 2010년 26.4%로 증가하였다. 만혼화, 고학력화, 취업난 등으로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늦어지는 경향(캥거루족)이 반영된 결과이다.

넷째, 3세대 가구(부부+자녀+부모 또는 부/모+자녀+부모)의 경우 부부세대가 이중 돌봄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샌드위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신캥거루족)일 수 있다. 부부+자녀+부모가구는 1985~2010년 기간 동안 다소 감소하고, 부/모+자녀+부모 가구는 동 기간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5세 이하 자녀를 둔 3세대 가구는 감소하였다. 이는 핵가족의 보편화로 3세대를 형성하는 가구가 많지 않고,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세대에게 자녀 돌봄에 대한 도움을 받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거주하며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25세 이상

미혼자녀를 둔 3세대 가구는 증가하였다. 2세대 가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이들 가구에서 부부세대는 부모세대에 대한 부양과 자녀세대에 대한 이중 부담을 지고 있을 것이다.

부부가구의 유형과 출산행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 부부가구의 평균 출생아수는 세대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1세대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평균 출생아수가 0.58명으로 매우 낮는데, 이는 아직 결혼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출산 전이거나 또는 출산을 하였더라도 자녀교육, 양육, 부모 직장 문제 등으로 자녀와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며 출산을 축소한 결과에 기인할 것이다. 불임부부 증가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대자녀수도 세대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1세대 부부가구의 경우 기대자녀수가 2.0명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가구의 출생아수도 작으데다가 향후 출산의향도 낮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부가구(전체)의 이상자녀수는 2.20명으로 2세대 2.23명, 3세대 2.18명, 1세대 2.02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둘째, 출산행태를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면, 비맞벌이 부부가구의 평균출생아수(1.76명)가 맞벌이 가구(1.75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다. 평균 기대자녀수는 비맞벌이 부부가구가 1.97명으로 맞벌이 부부가구(1.95명)에 비해 0.02명 정도 높게 나타난다. 1세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경향성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3세대 부부가구의 경우 출생자녀수와 기대자녀수 모두 맞벌이 부부에 비해 비맞벌이 부부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거하는 부모의 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 또는 부모세대의 손자녀돌봄에 따른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한편, 이상자녀수의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가구(2.21명)가 비맞벌이 부부가구(2.19명)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난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맞벌이 부부가구의 경우 출산과 자녀를 양육하면서 맞벌이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만큼 자녀출산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맞벌이부부와 비맞벌이부부 간 출생아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맞벌이가구 중에는 출산을 거의 완료한 고연령층 여성들이 포함되었고, 비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등으로 일시적 또는 장기간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가구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부부의 혼인이력에 따른 출산행태는 부인이 재혼인 경우 대체적으로 출생아수가 많고, 남편이 재혼인 경우 출생아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인이 재혼인 경우에는 고연령층에 속하기 때문에 출생이력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난 결과일 것이며, 남편이 재혼인 경우에는 전 혼인관계에서의 자녀양육, 고연령, 양육 부담 등으로 출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대자녀수의 경우에도 출생자녀수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남편이 재혼인 경우에는 기존 자녀의 양육, 고연령 등에 따른 추가 출산 곤란 등으로 출산이 억제(혹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상자녀수의 경우에는 출생자녀수나 기대자녀수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남편이 재혼인 경우 이상자녀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혼인상태에 따라 실제 출산 의향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제2절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가족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 유형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고, 가구의 세부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의 분석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일 가구유형에 속하더라도 세분화된 가구유형들 각각의 변화 방향이나 정도, 일부 구체적인 특성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책 수립 및 추진 등에 있어서 현행 가구분류체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세부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각에 적합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접근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우선 1인가구에 대한 접근은 20~30대 미혼층(취업 혹은 비취업), 20~30대 유배우 취업자, 이혼·사별 상태의 중년층 및 노인층 등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30대 미혼층(취업 혹은 비취업)의 경우, 이들이 단독가구를 형성함으로써 주거비 등 지출이 커져 자산형성이 어렵고 이는 만혼이나 비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들 중 비취업 중인 미혼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자산형성 뿐만 아니라 부모의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1인 가구를 위하여 자산형성프로그램이나, 공공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거나 월세 내지 전세임대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1인 여성 미혼가구의 경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20~30대 유배우 취업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원가족(배우자 등)으로부터 분리되어 거주하는 경우 혹은 주말부부 등의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직간접적으로 출산이 억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교통비 등의 비용 증가도 생활비용을 증가시켜 자녀양육에 부담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삶의 질도 크게 저하될 것이다. 이러한 유배우 취업 1인 가구를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근무지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등 사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혼·사별인 중년층은 홀로 고립되어 살 수 있다는 점

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혼·사별 중인 노인층의 경우에는 고립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 등이 이미 사회적인 관심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중고령층인 가구에 대해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1세대 가구에 대한 접근이다. 결혼을 하였음에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무자녀 1세대 부부가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은 아직 동거기간이 짧아 출산을 하지 않았거나, 난임 혹은 가치관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현재 서구사회에서 무자녀 부부(childless couple)의 증가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자녀 부부 증가의 원인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여 난임 등 비자발적인 원인을 제거하는데 사회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맞벌이 부부이면서 실제 자녀를 두고 있는 1세대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만큼 자녀양육이 어려워 부모 등에 자녀를 맡겨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간 어린이집 등 다양한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왔으나, 그럼에도 이러한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문제는 부부와 자녀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추가 출산을 억제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부부가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남성의 평균수명 상승, 재혼의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노인부부가구의 생활안전문제와 고립 등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1세대 가구이면서 가구원 모두 미혼이거나 노인인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1세대가구가 혼인상태 혹은 연령이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거주가 집단화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집단화된 가구의 경우 화재 등 안전문제에 취약하며, 생활환경이 열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단화 일반가구에 대한 안전대책 등이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세대가구에 대한 시사점이다. 2세대 부부+미혼자녀 중 부부가 맞벌이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부/모+미혼자녀이면서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 가구 중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결국, 맞벌이 혹은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특히 5세 이하의 어린자녀들이 양육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구들이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혹은 한부모 취업가정에 대해 보육 서비스 등에 대해 우선권을 제공하며 근로시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모+미혼자녀 중 부모의 혼인상태가 이혼·사별인 2세대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미혼자녀 중 5세 이하인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결국, 부/모+미혼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돌봄문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자립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가구해체 등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취약가정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만혼화, 고학력화, 청년실업률 증가 등에 따라 25세 이상 미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부부+미혼자녀(캥거루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구의 증가는 자녀양육 부담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부모로부터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직업 간 연계 강화 등 사회정책 내지 고용정책 등이 매우 중요해짐을 시사해준다.

3세대 가구에 대한 시사점이다. 3세대 가구의 경우 앞서의 부부(부/모)+미혼자녀에다가 부모가 추가된 형태가 일반적이다. 결국 맞벌이 부부이거나 경제활동 중인 부/모가 미혼자녀(특히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동거는 강한 지지가 될 것이다. 적어도 이혼 혹은 사별 중인 부/모가 경제활동을 할 경우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부모가

동거하는 3세대에 대해서는 부모의 양육 노력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노부모의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회적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상호 보조적인 기능이 강화된 3세대 가구를 형성 내지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제3절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 향후 연구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본 분석에 사용한 인구센서스 중 가장 최근 연도가 2010년으로 아주 최근의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인구센서스가 매 5년마다 실시되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에 등록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이들 결과를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인구센서스에서 가구주와의 관계가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복합적인 유형으로 가구를 세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향후 인구센서스에서 가구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보다 상세하게 분류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부가구유형보다 더 의미 있는 유형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앞의 한계점과 연계된 것으로 가구주를 중심으로 가구 구성원들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주와의 혈연관계 있지 않으나 또 다른 독립적인 가족이 있는 경우 파악이 어렵다. 이는 현행 가구분류나 본 연구에서 재구조화한 유형들 모두 과소집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가구 구성원들의 관계를 가구주가 아닌 참고인을 기준으

로 설정할 경우 해결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인구센서스에서는 혼인의 종류(초혼, 재혼 등)를 조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혼인유형에 따른 가구의 세부유형들을 분류할 수 없다. 향후 인구센서스 등 국가 기본통계에서는 혼인의 종류 등이 포함되어 조사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한국사회학, 38(5), pp.209~233.
- 김영철·김연수·김인경(2011).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김태현(2006). 가족_구조_기능_가치관의_변화.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
소, 여성연구논총 5, 2006.2, pp.99~118.
- 박경애·이무영·강기정(2012). 조손가정 청소년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학습정
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
회지, 30(4). 2012.8. pp.59~75(17pages)
- 백진아(2009). 한국의_가족_변화__가부장성의_지속과_변동. 한국인문사회과학
회, 현상과인식, 33(1,2), 2009.5. pp.204~224
- 서수경(2002). 서구의 '포스트모던 가족'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pp.19~37
- 신화용·유계숙·전영주·정현숙(1997). 세계의 가족. 예지각.
- 오치아이 에미코(2004). 일본의 가족과 사회: 21세기 가족에게. 양서원.
- 윤홍식(2008). OECD 주요국가의 가족투자분석. 보건사회연구원(미간행자료).
- 윤홍식(2011). “가족책임주의와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비교: 돌봄의 사회적 제공
방식의 유형화” 윤홍식 외, 『국내와 가족정책의 쟁점과 가족환경변화』. 한
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2012). “돌봄분담방식을 통한 OECD 국가들의 복지체제 유형화.”
『OECD국가의 저출산 대응 투자 유형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지(2011). 새로운_가족이론_구성을_위한_시론. 동양사회사상학회, 사회사상
과문화 24, 2011.11, pp.97~127.
- 장지연. (2009). 한국 사회센터레짐과 복지국가 성격. 정무권 편. 한국복지국가성
격논쟁 II. pp. 493~534. 경기도: 인간과 복지.
- 장혜경·김은자·김영란·김소영·선보영·김수원(2013). 가족의 미래와 여성_가족정책
전망(I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영자(2000). 가족의_변화와_가족학의_과제.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생활과학회지, 9(2), 2000.6, pp.177~187
- 정미라(2012). 근대_서양의_가족관에_대한_현대적_조명. 새한철학회 논문집. 철학논총, 67(1).
- 최연실(2014).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황 및 분석틀의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4). 2014.8. pp.75~89(15pages)
- 통계청(1986). 1985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 _____(1990). 혼인통계 원자료.
- _____(1991). 1990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 _____(1995). 이혼통계 원자료.
- _____(1995). 혼인통계 원자료.
- _____(1996). 1995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 _____(1997). 출생통계 원자료.
- _____(2000). 이혼통계 원자료.
- _____(2000). 출생통계 원자료.
- _____(2000). 혼인통계 원자료.
- _____(2001). 2000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 _____(2005). 이혼통계 원자료.
- _____(2005). 출생통계 원자료.
- _____(2005). 혼인통계 원자료.
- _____(2006). 2005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 _____(2010). 이혼통계 원자료.
- _____(2010). 출생통계 원자료.
- _____(2010). 혼인통계 원자료.
- _____(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1%).
- _____(2013). 출생통계 원자료.
- _____(2014). 이혼통계 원자료.
- _____(2014). 혼인통계 원자료.

- 한상진·심영희(편)(2010).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서울: 새물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2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 Alber, J. (1995). A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Social Servic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5 (2), pp.131~49.
- Cherlin, A. J. (2012). Goode's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A Reconsideration at Fifty Year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4), (DECEMBER 2012), pp.577~607
- Destatis (2015), Tabelle GeburtenVaeterbeteiligung Q3 2013, Statistics Germany
- EFILWC. (2006). Employment developments in childcare services for school-age children: Hungary. www.eurofound.ed.int
- EFILWC. (2007). Out-of-school care for children living in disadvantaged areas: Germany. www.eurofound.europa.eu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 of welfare capitalism*. NY: Polity Press.
- Ferrarini, T. (2006). Families, State and Labour Markets : Institutions, causes and consequences of family policy in post-war welfare states. Cheltenham, UK: Edward Elgar.
- Ferreira, V. (2005). Reconciliation of work and private life in Portugal. The Portugese national report, European Commission's Expert Group on Gender, Social Inclusion and Employment report for the Equal Opportunities Unit, DG Employment.
- Fraser, N. (1997). Justice interrupt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postsocialist' condition. NY: Routledge.
- Gelles, R. H. (1995). *Contemporary Families*. London: SAGE Publications
- Goods, W. J. (1963).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ew York: The Free Press.

- Gough, I. (1979).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UK: Macmillan.
- Hiilamo, H. (2004). "Changing family policy in Sweden and Finland during the 1990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8(1), pp.21~40.
- Kröger, T. (2009). *Dedomestication and childcare policy: A comparison of care service provisions of fifteen welfare states*. ISA RC19 Conference Social Policies: Local Experiments, Travelling Ideas. Université de Montréal, 20-22 August 2009.
- Leitner, S. (2003). Varieties of familialism: the Caring function of the family in comparative perspective. *European Societies*, 5(4), pp.353~375.
- Lesthaegh, R.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pp.211~251.
- Lewis, J.(1992).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 pp.159~173.
- Marciano, T. D. (1988). "Families wider than kin or marriage." *Family Science Review*, 1, pp.115~124.
- McDonald, P. (2006). "Lo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6(1), pp.19~23.
- McLanahan, S. (2004). "Diverging destinies: How children are faring under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demography*, 41, pp.607~627.
- Moss, P. (ed.). (2011).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11*.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 _____ (2012).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 research 2012*.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 Moss, P. (2013).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13*.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 OECD. (2007).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France: OECD.
- _____. (2015).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 Oláh, L. Sz. (2003). Gendering Fertility : Second Births in Sweden and Hungar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2(2), 171-200.
- Pascall, G. and Lewis, J. (2004). "Emerging Gender Regimes and Policies for Gender Equality in a Wider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33(3), pp.373~394.
- Sainsbury, D. (1999). "Gender, Policy Regimes, and Politics." pp. 245-275. in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edited by D. Sainsbur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etteles, B. H. (1987). "A perspective on tomorrow's families." In M. B. Sussman and S. K.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 Sobotka, T. (2011). Fertilit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fter 1989: Collapse and gradual recovery. *Historical Social Research*, 36(2), pp.246~296.
- Szelewa, D. (2006). Three faces of familialism: Comparing family policies in the Czech Republic, Hungary and Poland. Paper presented for the RC 19 Annual Academic Conference. Florence 6-8 September 2006. <http://www.unifi.it/confsp/papers/pdf/Szelewa.pdf>
- Thévenon, O. and Neyer, G. (2014). *Family policies and diversity in Europe: The state-of-the-art regarding fertility, work, care,*

leave, laws and self-sufficiency. Working Paper Series, 7(2014).
FamiliesAndSocieties.

van de Kaa, D. (1987).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 pp.1~59.

United Nations (2011). *Measurement of different emerging forms of
households and families*.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통계청. KOSIS. <http://kosis.kr>.

UN 홈페이지 [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sconcerns/fam/
fammethods.htm](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sconcerns/fam/fammethods.htm)

프랑스 INSEE 홈페이지 www.insee.fr

스웨덴 통계청 홈페이지 www.statistikdatabasen.scb.se

노르웨이 통계청 홈페이지 www.ssb.no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5-01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5-02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	오영호
연구 2015-03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보건의료산업 정책과제	김대중
연구 2015-04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전략	김동진
연구 2015-05	2015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성과와 과제	강희정
연구 2015-06	보건의료 공급체계 재설계를 통한 국민의료비 합리화 방안	정영호
연구 2015-07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최정수
연구 2015-08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강신욱
연구 2015-09	돌봄·보건의료 연합서비스(Joned-up Services)공급 모형에 관한 전망과 과제	박세경
연구 2015-10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방안	김유경
연구 2015-11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이현주
연구 2015-12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 연구: 스웨덴&프랑스&미국 편	임완섭
연구 2015-13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정해식
연구 2015-14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김현경
연구 2015-15	사회보장재정 재구조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고제이
연구 2015-16	사회보장재정과 경제 선순환 국제비교연구	유근춘
연구 2015-17	공·사적 연금 체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발전 방향	우해봉
연구 2015-18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장기재정전망과 재정평가	신화연
연구 2015-19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경환
연구 2015-20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정홍원
연구 2015-21-01	가족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이삼식
연구 2015-21-02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이소영
연구 2015-21-03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정책 비교연구	신윤정
연구 2015-21-04	여성노동·출산 및 양육행태와 정책과제	박종서
연구 2015-21-05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III) -정릉3동·영등2동·소태면 사례를 중심으로	오영희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5-21-06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일·여가현황과 여가증진방안 연구	강은나
연구 2015-21-07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선우덕
연구 2015-21-08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	정경희
연구 2015-21-09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연구	원종욱
연구 2015-21-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류정희
연구 2015-21-11	소셜 빅데이터 기반 저출산 정책 수요 예측	송태민
연구 2015-22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이상영
연구 2015-23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김정선
연구 2015-24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자산·소비 연계형 복지모형 구축	여유진
연구 2015-2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여유진/정해식
연구 2015-26	정책결정자의 사회통합 인식에 관한 연구	김미곤
연구 2015-27	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 비교연구: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5-28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센터 운영	강혜규
연구 2015-29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 관리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5-30-1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아동안전전략 구축방안	김미숙
연구 2015-30-2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전략 구축방안	김정선
연구 2015-31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이삼식
연구 2015-32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의 복지실태	노대명
연구 2015-33	2013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만성질환, 임신·출산, 보건의식행태-	이수형
연구 2015-34	2015년 빈곤통계연보	정은희
연구 2015-35	2015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송태민
연구 2015-36	의료기술 혁신과 의료보장체계의 지속성을 위한 국제동향과 정책과제	박실비아
연구 2015-37	보건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 주요국 보건의료산업 육성정책 변화와 동향연구	김대중